

| |
|-------------|
| 발 간 등 록 번 호 |
| |

정책보고서 2018-

함영진 · 김성욱 · 추병주 · 김원정 · 이민경

【책임연구자】

함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공저)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 정책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공저)

【공동연구진】

김성욱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추병주 한국평가원 연구위원

김원정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이민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차상위계층 지원 지원사업 실태분석 및 운영체계 합리화 연구』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11월

주관 연구기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 연구원 함 영 진 연구위원

목 차

| | |
|---|-----|
| 제1장 서 론 | 1 |
| 제1절 연구 목적 | 3 |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5 |
| 제2장 문헌 검토 | 9 |
| 제1절 차상위 계층의 개념 | 11 |
| 제2절 차상위 계층 자격과 지원사업 | 21 |
| 제3절 차상위 계층 실태조사 | 41 |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 71 |
| 제5절 차상위계층지원사업 현황 | 92 |
| 제3장 차상위계층 실태 분석: 맞춤형 급여 탈락자를 중심으로 | 105 |
| 제1절 분석 개요 | 3 |
| 제2절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 16 |
| 제3절 서비스 이용 현황 | 77 |
| 제4장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급여기준 표준화 | 38 |
| 제1절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급여기준 표준화 | 58 |
| 제2절 표준화에 따른 수급자격 변동분석 | 49 |
| 제3절 소결 : 요약 및 시사점 | 79 |
| 제5장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집행체계 정립 방향 | 111 |
| 제1절 제도적 정립 방향 | 13 |
| 제2절 주체간 정립 방향 | 14 |
| 제3절 절차적 정립 방향 | 16 |

| | |
|-------------------------|----|
| 제6장 정책적 시사점 | 1 |
| 제1절 요약 및 함의 | 12 |
| 제2절 차상위계층 통합지원 방안 | 41 |

표 목차

| | | |
|---|---|---|
| 〈표 2-1〉 차상위계층 주요 지원사업 | 3 | 1 |
| 〈표 2-2〉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 | 7 | 1 |
| 〈표 2-3〉 차상위 관련 주요 연구내용 정리 | 5 | 2 |
| 〈표 2-4〉 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 생계 지원 (18개) | 9 | 2 |
| 〈표 2-5〉 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 의료 지원 (8개) | 3 | 3 |
| 〈표 2-6〉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사업 (6개) | 5 | 3 |
| 〈표 2-7〉 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 주거 지원 (3개) | 7 | 3 |
| 〈표 2-8〉 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 교육 지원 (10개) | 7 | 3 |
| 〈표 2-9〉 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 돌봄 지원 (25개) | 0 | 4 |
| 〈표 2-10〉 차상위계층 자격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예정인 사업 (14개) | 4 | 4 |
| 〈표 2-11〉 별도로 소득·재산 조회 등 수급자격을 조사하여 지원하는 사업(23개) | 6 | 4 |
| 〈표 3-1〉 본 연구의 분석대상 구분 | 4 | 5 |
| 〈표 3-2〉 본 연구의 분석 서비스 | 5 | 5 |
| 〈표 3-3〉 생계급여 탈락자의 탈락 이후 이행 현황 | 1 | 6 |
| 〈표 3-4〉 생계급여 탈락자의 개인특성 현황 | 2 | 6 |
| 〈표 3-5〉 생계급여 탈락자의 가구특성 현황 | 3 | 6 |
| 〈표 3-6〉 의료급여 탈락자의 탈락 이후 이행 현황 | 5 | 6 |
| 〈표 3-7〉 의료급여 탈락자의 개인특성 현황 | 6 | 6 |
| 〈표 3-8〉 의료급여 탈락자의 가구특성 현황 | 7 | 6 |
| 〈표 3-9〉 주거급여 탈락자의 탈락 이후 이행 현황 | 9 | 6 |
| 〈표 3-10〉 주거급여 탈락자의 개인특성 현황 | 0 | 7 |
| 〈표 3-11〉 주거급여 탈락자의 가구특성 현황 | 1 | 7 |
| 〈표 3-12〉 교육급여 탈락자의 탈락 이후 이행 현황 | 3 | 7 |
| 〈표 3-13〉 교육급여 탈락자의 개인특성 현황 | 4 | 7 |
| 〈표 3-14〉 교육급여 탈락자의 가구특성 현황 | 5 | 7 |
| 〈표 3-15〉 생계급여 탈락자의 서비스 이용 개수 | 7 | 7 |
| 〈표 3-16〉 생계급여 탈락자의 현금급여 이용 금액 | 8 | 7 |
| 〈표 3-17〉 의료급여 탈락자의 서비스 이용 개수 | 8 | 7 |
| 〈표 3-18〉 의료급여 탈락자의 현금급여 이용 금액 | 9 | 7 |

| | | |
|---|----|---|
| 〈표 3-19〉 주거급여 탈락자의 서비스 이용 개수 | 0 | 8 |
| 〈표 3-20〉 주거급여 탈락자의 현금급여 이용 금액 | 1 | 8 |
| 〈표 3-21〉 교육급여 탈락자의 서비스 이용 개수 | 1 | 8 |
| 〈표 3-22〉 교육급여 탈락자의 현금급여 이용 금액 | 2 | 8 |
| 〈표 4-1〉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소득재산 항목 표준화 | 8 | 8 |
| 〈표 4-2〉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 기본재산액 | 0 | 9 |
| 〈표 4-3〉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 | 9 |
| 〈표 4-4〉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 자동차의 일반재산 환산 | 2 | 9 |
| 〈표 4-5〉 분석 Data 추출 및 정제 | 4 | 9 |
| 〈표 4-6〉 수급변동 모의분석 : 표준화(안) #1 | 6 | 9 |
| 〈표 4-7〉 수급변동 모의분석 : 표준화(안) #2 | 7 | 9 |
| 〈표 4-8〉 수급변동 모의분석 : 요약 | 9 | 9 |
| [부록]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소득재산 조사 항목 | 10 | 1 |

그림 목차

| | |
|---|---|
| [그림 1-1] 연구 핵심 내용 및 흐름 | 7 |
| [그림 1-2] 연구 수행 체계 | 8 |
| [그림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념 변화 | 2 |
| [그림 5-1] 사회복지통합업무 프로세스별 기능 강화 | 7 |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 목적

맞춤형 복지제도의 안정적 추진과 함께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의 총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전달체계 측면에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여러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이 범정부적 복지계획 하에 수립된 정책이기 보다는 부처별 목적과 특성에 따라 분절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대한 일선현장 복지담당공무원의 이해도가 낮은 실정이다. 이는 복지사업의 통합적 집행을 어렵게 하고, 복지대상자의 체감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사업현황과 실태분석 그리고 맞춤형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거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위소득기준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 하지만 빈곤층에 대한 포괄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정책 환경의 변화와 복지욕구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기준이 경제적 소득 기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사업의 범위도 현 법정 차상위계층 사업과 차상위 확인증사업으로 일컬어지는 사업에 국한되기 보다는 복잡해진 복지욕구와 정책변화에 따라 범위 및 개념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이 복지부 중심의 사업에서 범정부 사업으로 확대 정의되었지만,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검토가 부재한 실정이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목적이 빈곤층으로의 재진입을 예방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데 있으므로, 사업의 개별적 집행이 아닌 통합적으로 연계된 사업집행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운영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향후 통합적 집행과 사업간 연계를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방안마련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운영 및 수급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

하다. 첫째, 법정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집행 실태와 맞춤형 복지급여, 특히, 생계 및 의료급여와의 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급여기준이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사업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시스템으로 접근 가능한 범위에서 수급실태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범주에 해당되는 범정부 사업을 중심으로 전달체계와 수급실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운영체계 합리화를 위한 포괄적인 사업속성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급여기준과 전달체계에 대한 면밀한 자료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초적인 사업 속성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복지대상자, 복지욕구, 지원방식 등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유형분류를 수행하여 사업의 정책적 좌표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운영 및 수급실태와 포괄적 사업속성 분석을 바탕으로, 거시적인 정책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간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발전 양상을 살펴볼 수 있고, 정책대상자의 타깃팅 정도와 제도의 공백부분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비합리적인 부분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포괄성, 접근성, 합목적성 등에 대한 정책지표를 설정할 필요성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분석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현재 제시되고 있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은 체계적인 계획 하에 설계되었기 보다는, 복지욕구의 다양화와 범정부적 대응의 필요성 측면에서 그간 여러 부처에서 각기 집행되던 복지사업들의 집합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간 급여기준의 산발성과 운영방식의 분절성 그리고 집행방식의 복잡성이 존재한다. 이는 맞춤형 복지급여 집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사업 속성정보의 포괄적 검토를 통해, 복지대상자 측면에서 운영체계 합리화 방안 마련은 중요한 정책 아젠다라 하겠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다섯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차상위 계층관련 선행연구와 정책동향분석파트이다. 이는 기존 차상위계층 지원사업과 관련된 기존문헌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둘째,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속성정보 분석파트이다. 현재 107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급여기준, 전달체계, 지원 대상계층 등을 중심으로 사업의 특성을 분석한다. 셋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적재되어 있는 차상위계층 대상자의 수혜이력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상위계층 간 연계성을 분석한다. 넷째, 차상위계층 사업의 급여기준을 분석을 하고, 산발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법정 차상위사업을 대상으로 표준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법정 차상위 사업의 소득재산 조사항목과 환산율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도출한다. 다섯째, 법정 차상위 지원사업의 효율적 집행과 급여 간 연계를 위한 업무처리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제도적 관점, 업무처리 관점 그리고 구조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첫째,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관련 선행연구와 정책동향을 분석한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기 위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선기준문의 핵심사안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한다. 그리고 범정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명확한 범위설정 아래 정책변화와 법제도적 변화를 살펴본다. 아울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관련 범정부 복지사업의 동향을 검토한다.

둘째, 범정부 107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속성정보를 분석한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속성정보를 분해하여, 급여기준, 자산조사 항목, 전달체계 여건, 업무처리 절차, 지원급여량, 전달방식 등에 대한 속성정보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복지대상자 생애주기, 복지욕구, 운영방식 등을 기준으로 정책유형을 분류하고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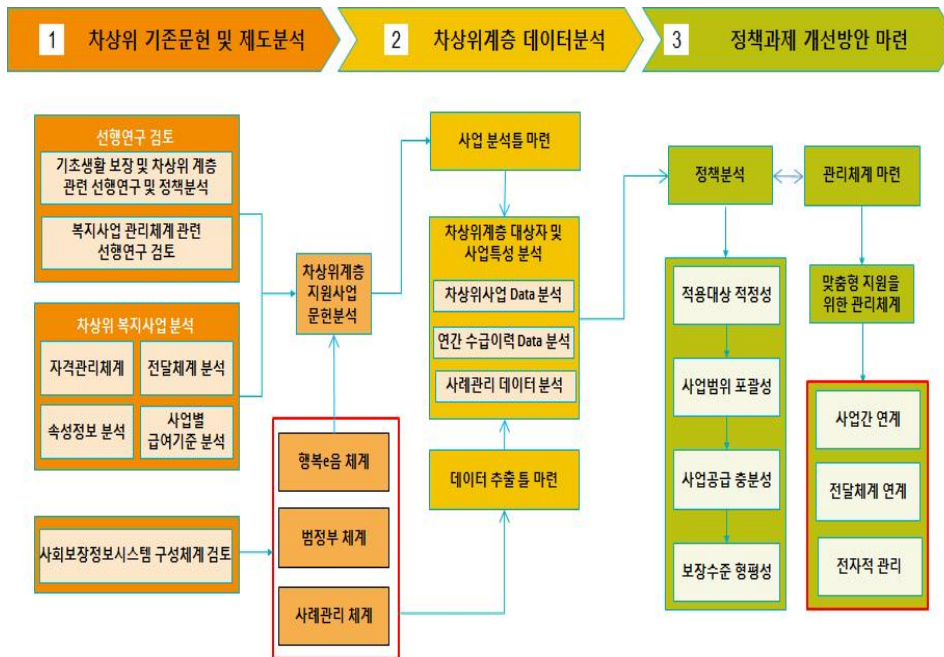
셋째, 차상위계층 실태 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한계점을 고려하여 맞춤형 급여 탈락자를 중심으로 차상위계층 이행 현황과 서비스 이용 실태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초보장제도에서 탈락한 대상자 정보와,

탈락 이후 이들의 현금, 현물, 바우처 서비스의 수급 이력 정보를 연계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분석 내용은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분석과, 탈락 이후 이들의 현금, 현물,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실태 분석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넷째,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급여기준을 분석하고, 주요 법정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급여기준 표준화 방안을 도출한다.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을 위한 정책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의 목적과 제도설계 속성정보 등의 비교분석이 필요하고, 급여의 성격과 전달체계 그리고 재원 등에 대한 정책분석을 수행한다. 그리고 장애연금,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사업, 자산형성사업, 차상위계층 확인서 사업 등 법정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급여기준 표준화 방안을 도출한다. 이는 소득재산 조사항목뿐만 아니라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등도 병렬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2017년 해당 사업의 수급데이터를 활용하여 급여기준 표준화 방안을 중심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즉, 개별 급여기준이 아닌 통합 기준을 중심으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수급을 변동과 개인 소득인정액 변화여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운영체계 합리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제도 설계 측면, 전달체계 측면, 사업관리 측면, 전자적 연계 측면 등에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운영체계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적 개선방안 마련한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법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사업설계, 집행체계, 관리체계 등 정책적으로 개선에 필요한 고려사항 도출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사업설계, 관리방식, 집행방식 등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 분석과 정책속성을 분석하여 학술적·정책적으로 유의미한 기초자료 마련하는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흐름을 도식화 하면 다음 [그림1-1] 과 같다.



[그림 1-1] 연구 핵심 내용 및 흐름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는 선행연구 검토,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데이터 분석 그리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수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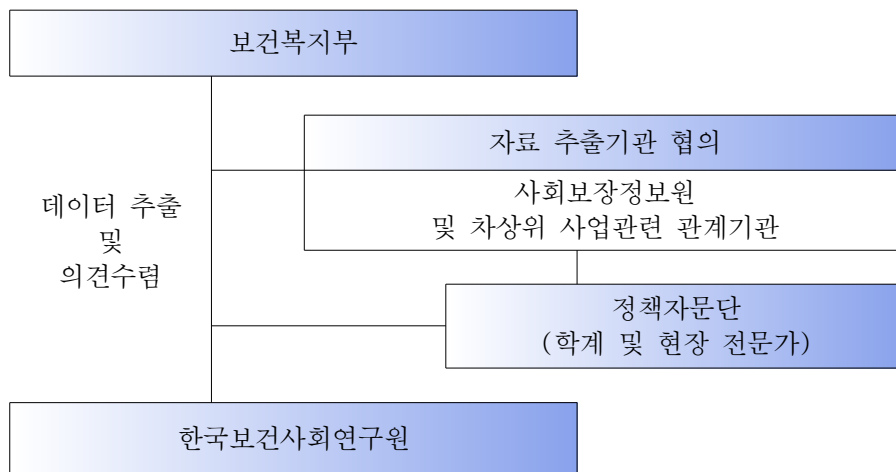
첫째, 본 연구에서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대한 면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특히, 범정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관련 속성분석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관련 법제도 분석 및 기존 제도 변화 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분석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업별 속성정보를 분석한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별 전달체계, 급여기준, 급여수준, 대상자, 이용자, 복지욕구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속성정보를 다각도로 검토한다.

둘째,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수급이력을 기초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탈락자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16년도와 2017년도 두 개 연도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를 추출하고 이를 연계하여 분석에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탈락이 발생한 2016년

도 개인 및 가구 특성 정보와, 탈락 이후 2017년도 연간 서비스 수급 이력 정보이다. 분석 방법으로는 대상자 특성별 분포에 대한 빈도 분석과, 서비스 이용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기술 분석을 활용한다. 분석 결과는 탈락 이후 분석대상의 제도 이행 현황을 고려하여 차상위계층과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를 구분하여 제시한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중 장애연금,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자활사업, 차상위확인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급여기준의 표준화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적재되어 있는 해당 사업의 수급이력 데이터를 추출하여 정책 시뮬레이션을 시행한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정책분석틀을 마련하여 기존문헌을 검토하고,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운영체계 합리화 방안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 및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 검토한다.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의 설계 및 집행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차상위계층 운영 및 관리체계 제언을 마련한다. 즉, 관계 전문가들 참여한 FGI를 통해 차상위계층의 실태와 향후 발전 방향 또는 지원체계 개편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1-2] 와 같다.



[그림 1-2] 연구 수행 체계

제 2 장

문헌 검토

제1절 차상위 계층의 개념

제2절 차상위 계층 자격과 지원사업

제3절 차상위 계층 실태조사

제4절 선행연구 검토

제5절 차상위계층지원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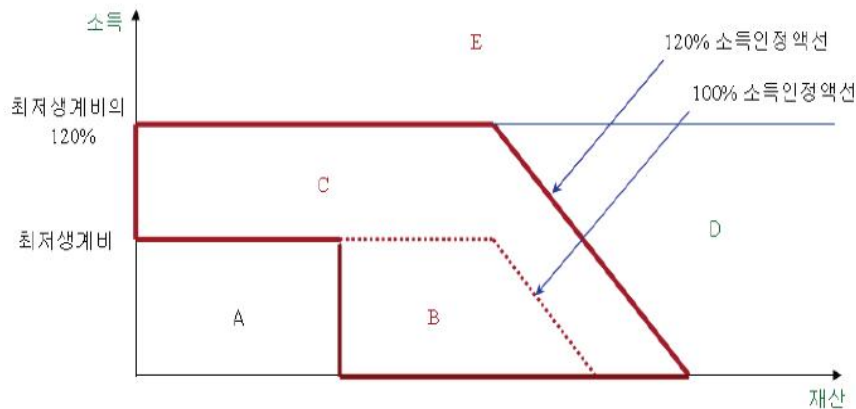
제1절 차상위 계층의 개념

사전적으로 차상위(叉狀位)는 특정 선 바로 위의 위치를 의미하며, 차상위계층은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보다 생활이 다소 나은, 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통용되어 왔다(이현주 외, 2005; 이현주 외, 2017). 근접빈곤(near-poverty)과 개념이 유사하며, 한계빈곤층(margin of poverty), 잠재적 빈곤계층(latent class)으로도 사용되고 있다(이현주 외, 2005: 153-154; 김교성, 2009). 차상위 계층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 특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첫째, 극빈층으로 간주되는 수급자 계층과의 유사성, 둘째, 빈곤층으로의 진입가능성이다(이현주 외, 2008). 첫 번째 특성은 정태적 특징으로, 차상위 계층이 극빈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와 생활형편이 유사하는 점에 주목한 것이며, 두 번째 특징은 동태적 특성으로 차상위 계층이 극빈층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기초한다(강신욱 외, 2015b).

차상위 계층은 엄밀하게 말하면, 학술 용어나 일반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적·행정적 개념이다(이현주 외, 2017). 2006년 법 개정 전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의 자’(시행령 36조)로서 잠재적 지원 대상으로 간주했다. 해당조항은 2006년 12월 개정되어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자’로 규정되었다. 기준소득이 ‘실제소득’ 대신 재산의 소득환산을 포함하는 ‘소득인정액’으로 변경되면서 차상위 계층의 법적 포괄성은 개정 전과 비교해서 협소해졌다. 이후 2015년 4월 법 개정에 따라 현행 차상위 계층 개념으로 수정되었는데,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법 제2조제10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참고로 현행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아래 [그림 2-1]은 현행 차상위계층의 개념을 도식화한 내용으로, A는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상 수급권자, B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지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이유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 C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이하인 근접빈곤층을 나타낸다. 2015년 법 개정 이전 차상위계층 범위 변화를 [그림 2-1]에 따라 살펴보면, 2006년 법 개정 전의 차상위계층은 B+C+D였다면, 2006년 개정 후 B+C로 변화하였다(이혜원, 2012; 강신옥 외, 2015b; 이현주 외, 2017).



출처 : 이현주 외(2017: 27)

[그림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념 변화

제2절 차상위 계층 자격과 지원사업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각 정부부처의 지원지침을 바탕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돌봄, 교육, 주택, 고용,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차상위계층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다¹⁾. 「2018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차상위계층 자격이란 ①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② 차상위 장애(아동)수

1)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8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https://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List.do?searchIntCIId=10&searchCtgId=073>)

당, ③ 차상위 장애인 연금, ④ 차상위 자활근로, ⑤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을 통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된 경우를 말한다. 한편, 수급자의 자격유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확인조사’에 대상이 되는 13개 보장사업 중 차상위계층 관련 사업에는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금경감, 차상위 자산형성, 차상위 계층확인, 한부모가족지원이 속해 있다(한은희, 2017). 법정 차상위계층으로는 ① 차상위 자활근로참가자, ②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③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⑤ 차상위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⑥ 차상위 확인발급 대상자이다²⁾. 이를 종합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주요 지원사업을 정리하면 <표 2-1> 과 같다.

<표 2-1> 차상위계층 주요 지원사업

|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
| 1 | 자산형성지원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층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1 정액 매칭 지원, 3년 만기시 720만원(+이자) 수급 가능 |
| 2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수당(경증장애인) :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3~6급) 중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경증/중증장애인) : 만 18세 미만의 중증(1급,2급,3급중복)·경증(3~6급) 장애인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수당 : 월 2~4만원 장애아동수당 : 중증장애인 월 7~20만원, 경증장애인 월 2~10만원 |
| 3 | 장애인 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소득 수급자격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6만원)이하인 경우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고·대·특·제2조제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학교 졸업 후 신청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최대 289,960원 지급(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급여 :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에 따른 소득보전 급여로써 월 최대 209,960원 지급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급여로써 소득계층에 따라 월 2만원~ 289,960원 지급 |
| 4 | 차상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차상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일자리 및 급여제공 |

2) 보건복지부. 2018.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p. 437 참조.

|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
| | 자활근로 | 계층 | (일 8시간, 시장진입형 기준 월 급여 약 101만원) |
| 5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만성질환자/18세 미만인 자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사람 • 부양의무자 기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경감 : 의료급여와 유사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 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
| 6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만족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중 등록장애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병비(11종 질환), • 특수식이구입비(7개 질환)지원 |
| 7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미만 (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52%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4세 미만 자녀의 아동양육비 (월13만원) • 추가아동양육비(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자녀, 월5만원) • 중고생활용품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생활보조금 지원 |

출처: 보건복지부 (2018). 「2018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에서 발췌.

제3절 차상위 계층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4년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비수급빈곤층의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해왔다(김태완 외, 2017: 488). 차상위계층 실태조사(현재의 ‘복지욕구조사’)는 2004년도를 시작으로 2007년, 2010년, 2014년 총 4번의 조사를 진행되었다(김태완 외, 2017: 87).(〈표 2-2〉 참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명시

된 “① ~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계획을 수립 ~. ② 4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 ③ ~ 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규모·생활실태를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2.30.)”에 따라 「2015년 국민생활실태조사」가 수행되었다(김태완 외, 2017: 91-92).

2004년 실시된 차상위계층 실태조사(2003년 기준, 1차 조사)는 1차 판별조사, 2차 심층조사, 행정조사로 구성되었다. 1차 판별조사는 차상위계층의 범위설정 및 규모파악의 기초자료와 2차 심층조사 등의 표본추출에 활용되며, 전국 3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소득 및 재산, 지출 등을 조사하였다. 2차 심층조사는 차상위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1차 조사대상 중 4,400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여건, 복지욕구 및 충족여부, 미충족 원인 등을 조사하였다. 행정조사 I 은 행정자료와 설문조사의 차이와 함의를 규명하고, 부양의무자 실태확인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조사대상 중 1,800가구를 조사하였고 가구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하였다. 행정조사II는 행정자료상의 비금융재산을 중심으로 1차 조사대상 중 2,000가구에 대해 조사하였다. 각종 분석은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하였다. 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집단은 177만 명이며(수급자 138만 명 제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미만인 집단은 86만 명 정도로 계측되었다(이현주 외, 2005).

2차 조사는 2005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2006년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차상위계층 정의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비수급가구로 정의된 이후 실시되었다. 2007년 실시된 차상위계층 실태조사(2006년 기준, 2차 조사)도 1차 기초조사와 2차 심층조사가 수행되었는데, 1차 조사는 ‘2007년 전국가구 생활실태조사’이며, 2차조사는 ‘2007년 전국가구 복지욕구조사’이다. 1차 조사는 차상위계층의 규모추정을 위한 기초조사로 2차조사의 표본추출과정에 활용된다. 전국에서 무작위 표본추출된 25,000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 가구방문 면접 조사를 수행하였다. 2차 심층조사에서는 차상위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분석하기 위해 1차 조사대상 중

5,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조사와 근로능력자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결과, 2006년 경상소득 기준 수급자를 제외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집단은 103만 명이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120% 미만인 집단은 67만 명 정도로 계측되었다(이현주 외, 2008).

2011년 실시된 3차 조사(2010년 기준)는 이전 실태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차상위계층 실태조사와 함께 빈곤의 다차원적 특성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1차 조사에서는 다각적·다층적 생활욕구를 고려한 빈곤유형별 규모를 파악하며, 2차 심층조사의 표본추출틀로 활용한다. 전국에서 층화확률비례 표본추출된 18,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구성, 소득, 재산, 지출 등을 조사한다. 2차 조사는 빈곤유형별 생활실태와 빈곤 원인 및 복지욕구 등 특성을 분석했다. 1차 조사가구 중 소득계층별 층화 추출한 4,000가구를 대상으로 일반생활 중 심화된 욕구, 인구집단별, 욕구범주별 실태 및 욕구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2010년 경상소득 기준 수급자를 제외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집단은 117만 명이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120% 미만인 집단은 68만 명 정도로 계측되었다(이태진 외, 2011).

2015년에 실시된 ‘2014년 복지욕구 실태조사’(2014년 기준, 4차 조사)는 기존 조사의 연장선에서 실시되었는데, 특히 2015년 개편된 맞춤형 급여체계의 새로운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에 맞춰 계층별 복지욕구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앞선 실태조사 연구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1차 조사의 대상은 전국에서 층화확률비례 표본추출된 18,000가구이며, 2차 심층조사의 경우 1차 조사가구 중 소득계층별로 층화추출된 4,800 가구이며, 일반생활 중 심화된 욕구, 인구집단별 그리고 욕구범주별 실태 및 욕구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최저생계비 100% 개념과 유사한 중위소득 40%선 아래 집단이 수급자(가구)라고 한다면, 수급을 제외한 중위소득 40% 아래 집단이 비수급 빈곤층이 되며, 이 규모는 118만 명으로 나타났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50% 미만인 집단의 규모는 85만 명으로 나타났다(이태진 외, 2015).

가장 최근인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2015년 기준, 5차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2항에 근거하여 맞춤형 급여제도에 대한 평가와 욕구조사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먼저, 한국통계진흥원과 협업하여 전국 18,000가구를 대상으로 국민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세부 욕구파악을 위해 심층조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조사 등을 병행하여 조사하였다.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

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41만 명, 기준중위소득 30~40% 이하 비수급빈곤층 규모는 52만 명으로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93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기준중위소득 40~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기준 비수급 빈곤층은 51만 명으로 나타났다(김태완 외, 2017).

〈표 2-2〉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

| 구분 | '03년 기준 1차조사 | '06년 기준 2차조사 | '10년 기준 3차조사* | '14년 기준 4차조사 | '15년 기준 5차조사 |
|-------------------------|-----------------|-----------------|------------------|--------------------------|---------------------------|
| 비수급 빈곤층 | 177만명 | 103만명 | 117만명 | 118만명 (중위소득 40%이하) | 93만명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 차상위 계층 기준 비수급 빈곤층 | 86만명 | 67만명 | 68만명 | 85만명 (중위 40~50% 이하) | 51만명 |
| 차상위 포함 비수급 빈곤층 | 263만명 | 170만명 | 185만명 | 203만명 | 144만명 |

자료: 이현주 외(2005),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p172).
 이현주 외(2008), 2006년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p172).
 이태진 외(2011), 빈곤정책 선진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p196).
 이태진 외(2015), 2014년 복지욕구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p91).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통계진흥원, 「2015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출처: 김태완 외. (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p. 489.

제4절 선행연구 검토

차상위 계층 연구들의 다수는 ‘제도연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보고서가 주를 이룬다. 차상위계층만을 다룬 보고서로는 「차상위계층 의료수요 등 실태조사 및 의료급여 확대방안」 (신영석 외, 2004),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전환대상자 선정기준」 (신현웅 외, 2008),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현황과 체계화 방안 연구」 (류정희 외, 2014), 「맞춤형 급여제도 개편에 따른 차상위계층 지원제도 개선방안」 (강신욱 외, 2015b), 「차상위계층 지원제도 연계강화 및 통합지원 방안연구」 (이현주 외, 2017)가 있다.

먼저 신영석 외(2004)의 연구에서는 소득빈곤과 의료빈곤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토

대로 의료욕구가 긴요한 저소득층의 규모 등을 파악하며, 저소득층 의료보장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분석결과, 소득평가액 기준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의 평균진료비와 최저생계비 10% 이하 노인의 1인당 평균진료비는 차상위계층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노인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급여대상자가 아니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열악하여 의료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상위계층의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상위 계층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할 경우, 현행 단가 기준으로 약 2조 5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건강보험 가입자이지만 회귀난치성, 만성질환 등의 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의료빈곤에 놓이는 계층에 실태와 규모를 파악하였으며, 향후 의료급여제도 내 개별급여 제공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현웅 외(2008)의 연구도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욕구와 건강보험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는 2004년부터 차상위계층 중 회귀난치성질환과 만성질환자가 있는 대상자에 대해 의료급여 대상자로 포함시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최근 의료급여 예산의 급속한 증가로 의료급여에서 관리하던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운영했던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이들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에서 대상자 선정 및 관리할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할 것인지 자산조사를 통해 선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제도 변경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류정희 외(2014) 연구는 기초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의와 지원사업의 급여기준선 및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대한 분포 및 기초적인 정보조차 파악되지 못한 현실에 기반하여 부처별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선정기준과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체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였다. 현황 분석결과, 차상위 지원사업에서 수급빈곤층과 차상위계층 간 지원의 쏠림현상이 나타나 차상위계층 지원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방향에 맞추어 욕구별 특성을 기준으로 맞춤형 강화를 필요로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차상위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재산과 소득기준방식에서 욕구별 특성과 급여수준 및 급여제공의 지속성 여부를 기준으로 다양화할 필요를 강조하였다.

강신옥 외 (2015b) 연구는 2014년 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규정변화(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자에서 기준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자)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법령상 차상위계층 범위와 관련된 주요 쟁점은 첫째, 기초보장수급자 범위를 어떻게 보는가, 즉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기준선을 차상위계층의 하한선으로 보는가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네 가지 개별급여 중 한 가지 급여라도 받는 집단을 수급자로 본다면, 소득기준면에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는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현행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고 하더라도 실제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에 적용되는 차상위계층의 (상한)범위는 제도마다 다르다. 그 이유는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의 재산-소득의 환산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셋째, 기초보장급여 선정기준은 욕구별로 차등화되었으나 차상위계층 기준은 단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의 상한선 조정, 선정기준을 욕구별로 차별화하는 전략, 재산기준 적용방식 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현주 외 (2017)의 연구는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의 체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념검토와 지원제도의 현황 및 수행체계를 분석하였다. 검토결과,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차상위계층 관련 급여는 자활급여에 한정되나, 각종 복지서비스에서도 차상위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서비스들의 목적 또한 ‘자활을 통한 탈수급·탈빈곤’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106개 사업을 대상으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준소득이 소득인정액, 소득, 건강보험료 등급 등 활용하는 내용이 상이하며, 연령집단으로 구분하였을 때, 일반, 청소년, 기타, 아동, 노인 대상 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욕구형태에 따라서는 생계욕구(24.5%), 돌봄(18.9%), 의료(17.9%), 교육(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원제도의 체계화 방안으로 상호통합적 집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업간 또는 업무 처리 절차 간 논리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차상위계층 지원사업들이 참조할 수 있는 다양한 준거 마련, 초기 상담 시 공적지원 정보에 대한 공유, 장기적으로는 차상위계층의 개념 검토와 신청기준을 보다 알기 쉽게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차상위계층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연구 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차상위계층을 다루거나(허선, 2001; 류정순, 2009; 김정희, 2009), 자활사업 관련 연

구(노대명 외, 2004; 이규용 외, 2005; 노대명 외, 2007; 박영수 외, 2010), 근로장려 세계 관련(손윤석, 2013), 의료보장 관련(김진현, 2016), 사회복지정책 평가 관련(김승권, 2006; 강신욱 외, 2015a)에서 차상위 계층의 복지실태를 다루고 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허선(2001)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년 후 시점에서 차상위계층에 주목하였다. 그에 따르면 차상위 계층은 소득수준은 최저생계비 이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가구들이 많으며, 부양의무자와 재산기준으로 인해 수급권자에서 제외되거나 다수가 근로무능력자들이라고 지적하면서 “방치된 수급권자”라고 재명명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차상위 계층을 방치된 수급권자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미만인 가구로 구분하여 지원체계를 달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방치된 수급권자들의 경우 부양의무자 및 재산기준 완화하고 동시에 모든 현물급여를 지급하며,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 교육 등과 같이 특정 급여를 지급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차상위 계층의 개념과 제도에 천착하여 분석한 연구로는 류정순(2009)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정부의 소득과약 능력의 부족과 제도별 예산제약을 이유로 중구난방으로 정의하고 있어 제도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각 제도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검토결과 제도별로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이 다르며, 개념 또한 각 제도별로 상이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선정체계는 비수급빈곤층과 한계계층의 존재를 부정하고, 과다하게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한다고 비판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제도별 특성에 맞는 독자적 기준 설정, 차상위계층이라는 용어의 남발을 자제하고 각 제도 선정기준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단일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김정희(2009)의 연구에서는 차상위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에 해당하는 여성가구원 4명을 유의표집)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빈곤에 대한 인식과 공공부조 수급경험을 탐색하고 공공부조 수급이 자립의 기반으로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분석결과, 차상위계층 여성은 빈곤경험을 통해 부정적인 빈곤관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의 관계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차상위계층 여성들은 자녀의 학교급식비와 아동급식권 사용과 관련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조 수급

의존의 가장 큰 동기는 자녀의 교육지원임을 확인했다. 이 외에도 차상위 계층 여성들은 공공부조 수급을 빈곤세습의 극복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연구에서는 공공부조 집행과정에서 스티그마를 줄이는 방안과 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 아동급식권 관련 정책변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를 제안했다.

노대명, 문세경, 최승아(2004)에서는 2000년 10월 이후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정리하고, 성과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을 다루었다. 검토 결과, 자활사업의 여러 문제점을 확인하였는데, 첫째, 자활사업의 목적인 탈수급을 위한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 체계와 근로소득 공제가 미미한 상황에서 자활사업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가처분 소득에 차이가 나지 않아 성과를 저해하는 측면이 존재하며, 셋째, 자활지원 대상자의 다수가 장기실업자이며 직업능력이 약한 중고령층이 다수 포진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자활지원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성과평가의 경우 먼저 성과목표 설정, 성과평가 지표 개발 및 활용, 데이터 구축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노대명 외(2007)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분석틀 마련과 기초 실태분석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욕구충족 효과, 근로유인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들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기초보장제도와 욕구별 급여제도 중 자활급여에 대한 현황 분석도 제공하고 있다. 근로유인효과와 관련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한 수급자의 취업 및 탈수급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많은 참여자가 취업 후에도 기초보장제도에 잔류하는 경향을 확인했다. 이들은 이러한 현상이 근로소득이 낮아 탈수급이 어렵거나, 취업수급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 도입과 취업수급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를 강조하였다.

박영수 외(2010)에서 수행한 차상위계층의 고용알선 서비스 개선방안은 문헌연구와 설문 및 면접 조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차상위계층의 고용지원서비스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개선방안으로 보건복지부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차상위계층의 고용알선서비스를 활성화하며,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업급여와 고용보험제도 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고용지원센터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외에도 원스톱 체제 구축, 수요자 중심의 특화된 고용서비스 제공, 직업훈련의 강화를 논의하였다.

의료보장성과 관련하여 차상위계층과 상위 중산층을 비교한 김진현(2016)의 연구에서는 민간보험의 증가와 맞물려 공적 의료보장제도의 보장성이 약화되는 현상은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게 의료서비스 이용의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차상위계층과 상위중산층의 의료보장성 수준(의료비 지출부담 정도, 미충족 의료) 차이가 주관적 건강상태의 종단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때, 차상위계층 개념은 소득 5분위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1, 2분위에 있으면서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제외한 대상자로 설정하였으며, 대조그룹으로 상위중산층(소득 4, 5분위)을 설정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의료패널 2009년~2012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2009년도 부가조사에 응답한 18세 이상 성인 가구원이다. 분석결과, 연구대상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생활비 대비 의료비 부담수준이 높고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못했다. 또한 차상위 및 상위중산층 모두 미충족 의료경험은 주관적 건강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주관적 건강상태 감소를 완화하는 정도는 미미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을 위한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자활이나 탈빈곤과 관련한 차상위 계층 주요 보호제도 중 하나인 근로장려세제의 효과성을 분석한 손윤석(2013)의 연구에서는 차상위계층 관점에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정합성을 검토하여 차상위계층 보호를 위한 근로장려세제 연계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에 따르면 현재 차상위계층의 재정지출은 상당히 제한적인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다.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조세지출에 의한 지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정합성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상당한 제도정비와 예산문제로 단기적으로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조세지출이 더 적합한 수단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또한 차상위보호 관점에서 근로장려세제를 검토한 결과, 근로장려금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급여수준도 적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은 선정기준으로 인해 탈락하는 가구가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장려금을 최저생계비와 연동하여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을 기초로 결정되고 1회성 급여이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하며 사후급여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지급방식에 있어 근로장려금을 일시금이 아닌 분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김승권 외(2006)에서는 보다 종합적으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연

구를 수행하였는데, 평가정책 영역 중 안정된 소득보장 분야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포함되었고, 일자리보장분야에서 자활사업 참여율과 자활사업 성공률을 지표로 분석하였다. 이후 강신욱 외(2015a)는 「사회보장정책평가의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차상위계층 대상 사업을 포괄한 사회보장사업을 분류하고 평가를 위한 공통지표안을 개발하였다.

차상위계층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관계합동부처의 실태조사(이현주 외, 2005; 이현주 외, 2008; 이태진 외, 2011; 이태진 외, 2015; 김태완 외, 2017)외에 차상위 계층의 규모와 특성에 대한 연구가 소수 존재한다(김교성, 2009; 이혜원, 2012).

먼저 김교성(2009)의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차,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의 규모와 특성, 지위변화 과정과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때, 차상위계층을 수급자가 아니면서 실제소득과 소득인정액이 각각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경우, 실제소득과 소득인정액이 각각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소비 대 욕구비율이 1.0~1.2, 1.0~1.5인 경우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차상위 계층의 규모는 2005년 전체가구의 8.9%, 2006년 7.3%로 나타났으며, 여성, 노인, 한부모와 같이 빈곤계층의 특성이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소득 및 재산 등 전반적 생활수준이 수급자보다 낮았으며, 지위변화가 활발히 일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수급자로 하락하는 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지위를 지속하는 가구 간 특성 차이는 미미했다.

이혜원(2012)의 연구에서는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한 빈곤층과 수급자 간의 정비지원의 차별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조세연구원의 재정패널 1~4차 자료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실태 파악과 이동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차상위계층이 실제로는 저학력, 여성가구주, 노인가구주,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순재산규모, 일차소득, 시장소득 수준은 수급자보다 약간 높으나 경상소득 기준으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간 소득역전이 발생함을 확인했다.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수급자 대상 공적이전 소득의 규모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일차소득이나 시장소득의 차이를 보충해주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차상위 계층까지 포괄한 빈곤연구들이 제한적으로 존재하며, 이때 주로 차상위 계층의 범주를 법정 차상위계층보다 확대하여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윤홍식 외, 2005; 김교성, 2009; 이상봉, 한준, 2016). 윤홍식, 김혜영, 이은주(2005)의 연구는 저소득

여성가구주 가구빈곤을 차상위 빈곤까지 포함하여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지위를 노동시장, 가족, 사회안전망으로 분류하여 빈곤선이 차상위 수준으로 이동함에 따라 빈곤지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 때 차상위 계층의 정의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210%인 경우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있는 여성가구주는 77.5%를 차지했으며, 비근로 여성가구주(88.6%), 시간제(74.5%), 전일제(72.5%)로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규모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고졸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가구주가구는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절대빈곤선에서 차상위 기준 빈곤선으로 이동할수록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아졌으며, 가구 내 돌봄 대상 여부는 여성가구주가구의 차상위 빈곤지위와 밀접히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한 여성가구주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가구주에 비해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적이전소득이 여성가구주의 빈곤실태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봉, 한준(2016)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빈곤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중산층, 상층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차상위계층의 인구사회적 특징, 노동시장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조사 1차~5차자료를 활용하였고, 종속변수는 빈곤수준, 독립변수는 사회인구특성(성별, 연령, 거주지), 노동시장 특성(노동참여형태, 노동시간, 직종), 경제적 가치(비금융자산, 금융자산, 부채)로 설정하였다. 이 때 차상위계층은 전년도 1년 간 가처분소득 중위값 50% 이하에 위치하면서 수급경험이 없는 집단, 중산층은 중위값 50~150%이면서 수급경험이 없는 집단, 상층은 중위값이 150% 이상이면서 수급경험이 없는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차상위계층은 절대빈곤층과 중산층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빈곤집단으로 파악되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성가구주, 고연령, 저학력, 농어촌 거주, 자영업자, 농림어업 및 기능/조립 종사자의 경우 차상위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 또한 비교집단 중 차상위계층의 가처분소득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은 수급자보다 높고 중산층과 상층보다는 낮았다. 이들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차상위계층은 자산보유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안전망에 소외되고 있으며, 중산층과도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표 2-3〉 차상위 관련 주요 연구내용 정리

| 구분 | 내용 |
|-------------|---|
| 허선(200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가구들이 많고, 부양의무자와 재산기준으로 인해 수급권자에서 제외되거나 다수가 근로무능력자들임(‘방치된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을 ‘방치된 수급권자’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미만인 가구’로 구분하여 지원체계를 달리할 것을 제안 • ‘방치된 수급권자’들의 경우 부양의무자 및 재산기준 완화하고 동시에 모든 현물 급여 지급하며, 차상위계층의 경우 의료, 교육 등과 같이 특정 급여 지급 필요 |
| 노대명 외(200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수급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체계 불충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제와 근로소득 공제가 미약한 상황에서 자활사업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가처분소득에 차이가 나지 않아 성과를 저해 • 자활지원 대상자의 다수가 장기실업자이며 직업능력이 약한 중고령층이 다수 포진 • 자활사업 성과목표 설정, 성과평가 지표 개발 및 활용, 데이터 구축 필요 |
| 신영석 외(200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귀난치성, 만성질환 보유자의 의료빈곤 위험 실태와 규모 파악 및 저소득층 의료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 • 소득평가액 기준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의 평균진료비와 최저생계비 100% 이하 노인의 1인당 평균진료비는 차상위계층에 비해 높으나, 노인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급여대상자가 아니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열악하여 의료빈곤을 경험 • 차상위계층의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과 거의 비슷함에 따라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제공 및 확대 필요(약 2조 5천억원이 소요) |
| 윤홍식 외(200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여성가구주(차상위 포함) 빈곤실태 분석, 빈곤선이 차상위 수준으로 이동함에 따른 빈곤지위의 변화 연구(차상위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210%로 설정) • 차상위 빈곤여성 가구주의 비중이 높으며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차이발생 |
| 노대명 외(200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제도 효과성 평가를 마련 및 기초실태, 욕구충족효과와 근로유인효과 등 분석 • 근로유인효과와 관련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한 많은 차상위 계층이 취업후에도 지원제도에 잔류하는 경향 확인 • 대응방안으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 도입과 취업수급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제안 |
| 김정희(20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계층 여성의 빈곤에 대한 인식과 공공부조 수급경험 탐색 및 공공부조 수급의 자립관련 정책효과 분석 • 차상위계층 여성은 빈곤경험을 통해 부정적인 빈곤관을 형성,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의 관계도 부정적 • 자녀 학교급식비와 아동급식권 사용 관련 차별 경험하나 교육지원에 대한 의존을 확인 • 공공부조 집행과정에서 낙인을 줄이는 방안과 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 아동급식권 관련 정책변화,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내실화 제안 |
| 류정순(20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정부의 소득과약 능력의 부족과 제도별 예산제약으로 인해 무작위로 정의되고 있음(제도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비판) • 제도별로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이 다르며, 개념 또한 각 제도별로 상이함 • 이러한 선정체계는 비수급빈곤층과 한계계층의 존재를 부정한 결과이며 과도하게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 • 각 제도별 특성에 맞는 독자적 기준 설정, 차상위계층 용어의 남발 자제, 각 제도 선정기준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단일화 할 것을 제안 |

| 구분 | 내용 |
|----------------|---|
| 김교성(20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상위계층 규모, 특성, 지위변화 과정과 요인 분석(차상위계층은 수급자가 아니면서 실제소득과 소득인정액이 각각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경우, 실제소득과 소득인정액이 각각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소비 대 욕구비율이 1.0~1.2, 1.0~1.5인 경우 등으로 세분화) 규모는 2005년 전체가구의 8.9%, 2006년 7.3%, 여성, 노인, 한부모와 같이 빈곤계층의 특성이 유사하게 관찰 소득, 재산 등 전반적 생활수준이 수급자보다 낮고, 빈곤 지위변화가 활발하나 수급자로 하락한 가구와 차상위를 유지하는 가구 간 특성 차이는 미약 |
| 기윤환, 이천기(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8년, 2010년 국토해양부 주거실태조사 자료 활용 인천시 차상위계층의 주거실태 분석 차상위 가구 중 약 1%가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로 편입, 자가점유율은 62.4%로 높은 편이나 보유 주택은 주로 저가의 노후불량주택 차상위계층이나 차차상위계층에 대한 주거비 보조, 주택마우처 등의 주거정책 필요 |
| 류정희 외(20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별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현황 분석, 선정기준 및 사후관리 중심으로 체계화 방향 검토 차상위 지원사업에서 수급빈곤층과 차상위계층 간 지원의 쏠림현상이 나타나 차상위계층 지원 보장성 강화필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향에 맞춰 욕구별 특성을 기준으로 맞춤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차상위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재산과 소득기준방식에서 욕구별 특성과 급여수준 및 급여제공의 지속성 여부를 기준으로 다양화할 필요 |
| 강신욱 외(2015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상위계층 관련 규정변화(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자에서 기준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자)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응방안 검토 법령 상 기초보장수급자 범위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급여 중 하나만 받는 집단을 수급자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소득기준 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 소멸), 기초보장급여 선정기준은 욕구별로 차등화되었으나 차상위계층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으로 단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 지적 개선방안으로 차상위계층의 소득 상한선 조정, 선정기준을 욕구별 차별화하는 전략, 재산기준 적용방식 개편 등 제시 |
| 김진현(20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상위계층과 상위중산층의 의료보장성 수준(의료비 지출부담 정도, 미충족 의료) 차이가 주관적 건강상태의 종단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이때, 차상위계층 개념은 소득 5분위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1,2분위에 있으며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제외한 대상자로 설정하였으며, 대조그룹으로 상위중산층(소득 4,5분위)을 설정 한국의료패널 2009년~2012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2009년도 부가조사에 응답한 18세 이상 성인가구원임. 분석결과, 연구대상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고, 생활비 대비 의료비 부담수준이 높고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못했음. 또한 차상위 및 상위중산층 모두 미충족 의료경험은 주관적 건강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주관적 건강상태 감소를 완화하는 정도는 미미했다고 분석함.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을 위한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함을 강조함. |
| 이상봉, 한준(20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자, 중산층, 상층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차상위계층 빈곤 특징 및 결정요인 분석(한국복지패널조사 1차~5차 자료 활용하고, 차상위계층은 전년도 1년 간 가구단위 가처분소득 중위값 50% 이하에 위치하면서 수급경험이 없는 집단, 중산층은 중위값 50~150%이면서 수급경험이 없는 집단, 상층은 중위값이 150% 이상 이면서 수급경험이 없는 집단으로 설정) 차상위계층은 절대빈곤층과 중산층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빈곤집단으로 시간 경 |

| 구분 | 내용 |
|-------------|---|
| | 과에 따라 여성가구주, 고연령, 저학력, 농어촌 거주, 실업 및 자영업자, 농림어업 및 기능·조립 종사자의 차상위계층에 소속 확률이 높음 |
| 이현주 외(201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의 체계화 방안 마련 위한 차상위계층 개념검토 및 지원제도 현황, 수행체계 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차상위계층 관련 급여는 자활급여에 한정되지만 각종 복지서비스에서 차상위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개념이 모호(선정기준이 제도마다 상이) 욕구형태에 따라 생계욕구(24.5%), 돌봄(18.9%), 의료(17.9%), 교육(8.5%) 등의 순으로 지원사업이 운영 지원제도 체계화를 위해 사업간 또는 업무 처리 절차 간 논리적 연계를 강화할 필요함. 이를 위해 다양한 참조 준거 마련, 초기 상담 시 공적지원 정보에 대한 공유, 장기적으로 차상위계층의 개념 검토와 선정기준을 보다 알기 쉽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

지금까지 검토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차상위계층의 실태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차상위계층’이라는 개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정책적 개념으로 1999년 기초법 통과 이전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이현주 외, 2008; 이현주 외, 2017: 19). 이에 차상위 관련 연구는 특정 선 위에 이어지는 위치인 차상위(次上位)라는 사전적 의미를 토대로 절대빈곤층(혹은 수급자)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던 것이다. 2000년대 초반 이후 통용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차상위계층 개념의 모호성은 남아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연구에서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와 비교하여 소득수준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고, 부양의무자와 재산기준으로 인해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등 생계의 어려움을 조명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허선, 2001; 노대명 외, 2004; 노대명 외, 2007; 김정희, 2009; 류정순, 2009; 김교성, 2009; 이혜원, 2012; 김진현, 2016; 이상봉, 한준, 2016). 또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 평가와 차상위계층의 취업지원에 관한 연구들도 다수 수행되었다(노대명 외, 2004; 이규용 외, 2005; 노대명 외, 2007; 박영수, 2010; 손윤석, 2013). 이러한 생계와 근로 이슈에서 나아가, 특정 욕구에 따른 지출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식과 같이 차상위계층의 생활 실태 및 욕구조사에 관한 연구들도 일부 존재한다(신영석 외, 2004; 박영수, 2010; 기윤환, 이천기, 2011; 김세원 외, 2014). 종합적으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대상 조명 - 문제 발굴 및 확인 - 지원제도 계획 및 정비’의 과정을 순환하면서 점차적으로 관련

연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가 개편된 2015년을 전후로 하여 이루어졌다. 2014년 말 기초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준소득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되고,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급여체계가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에 미칠 이슈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다(강신욱 외, 2015). 또한 2000년대 초반과 비교했을 때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증가하는 등 정책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근거하여 엄격히 규정된 차상위계층 수급규정을 여러 사업에서 준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각 부처별 산발적으로 분포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체계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류정희 외, 2014; 이현주 외, 2017).

최근 법 개정 관련,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차상위계층 개념 적용과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연계이다(강신욱 외, 2015; 이현주 외, 2017).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개편과정에서 차상위계층의 규정이 변화함에 따라 개념적용에 문제가 발생했다. 기초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차상위계층을 ‘기초보장 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규정하였는데, 이때 기초보장 수급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계급여(29%), 의료급여(40%), 주거급여(43%), 교육급여(50%) 등 네 가지 급여 중 한 가지 급여라도 받는 집단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고 본다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었다(강신욱 외, 2015).

무엇보다 현행 소득기준선을 따르다 할지라도, 실제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에서 적용되는 차상위계층의 범위가 사업별 선정기준에 따라 다르다는 점은 신속한 제도개선을 요하는 문제로 거론되었다. 2017년 기준, 17개 부처에서 차상위계층 지원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 선정기준이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엄격한 기준에서부터 소득인정액 중위 50% 이하만을 적용하는 보다 관대한 기준까지 편차가 크다. 특히 자산조사를 하는 선정기준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과 기준중위소득 설정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범위가 달라진다(이현주 외, 2017).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기초재산 공제한도, 주거용 재산 인정한도, 재산유형별 소득환산률, 금융재산 공제한도, 근로무능력가구에 대한 재산-소득환산 예외적용 여부 등의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강신욱 외, 2015).

최근 이러한 문제들은 국회와 정부 등 다양한 단위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학계와 시민사회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념과 지원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인해 불거진 이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실태분석과 운영체계의 개편 등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5절 차상위계층지원사업 현황

정부가 제시하는 차상위계층이 이용 가능 사업을 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차상위계층 자격만으로는 현재 이용이 어려우나 향후 개선예정인 사업 및 긴급복지 이용 등 별도 소득재산 조회 등 수급자격을 조사하여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현황을 살펴보았다. 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 70개, 현재는 차상위계층 자격만으로는 이용하지 못하는 사업 37개 등 총 107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 개괄적 현황을 살펴보았다.

1. 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70개)

가. 생계 지원

차상위계층 자격으로 이용 가능한 생계 지원 사업은 기부식품 지원, 아동급식 지원, 양곡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장애(아동)수당, 장애인등록 및 검사비 지원, 장애인연금, 차상위자활근로,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취업성공패키지, 통신요금·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등 할인감면 등이 있으며 총 18개 사업이었다. 사업별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2-4〉 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 생계 지원 (18개)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처 |
|----------|----------------------------|----------------------------------|-------------------|-------|
| 기부식품등 제공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를 받 | •대상자가 직접 매장(푸드마켓)에 방문하여 필요한 기부식품 | •사업장이 속해 있는 해당 시· | 보건복지부 |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처 |
|-----------------------|---|--|---------------------------|-----------|
| | 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등을 선택하거나 푸드뱅크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식품등을 제공 * 기부식품등: 식품 및 생활용품 | 군·구 및 읍·면·동에 확인 | |
| 아동 급식 지원 (지방이양 사업) |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식대상, 급식단가, 급식방법 등 결정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 보건 복지부 |
| 양곡할인 | •다음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장애인 수당 수급 가구 -장애인 연금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가구 | <div> <div> <div> <div>구분</div> <div>10kg</div> <div>20kg</div> </div> <div> <div>생계·의료 수급자 (90%)</div> <div>11,355</div> <div>22,397</div> </div> <div> <div>그 외 (50%)</div> <div>6,308</div> <div>12,443</div> </div> </div> </div> <div> <div>•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90% 할인 지원</div> <div>< '18년 지원액 ></div> </div>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 보건 복지부 |
| 영양플러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가구 중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미만 영유아 | <div> <div>•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김장콩 등) 제공</div> <div>※ 기준 중위소득 50~80% 미만은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div> <div>•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div> </div> |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 보건 복지부 |
| 자산형성 지원사업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층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1 정액 매칭 지원, 3년 만기 시 720만원(+이자) 수급 가능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 보건 복지부 |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div> <div>•장애수당(경증장애인) :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3~6급)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div> <div>•장애아동수당(경증·중증장애인) : 만 18세미만의 중증(1급,2급,3급 중복)·</div> </div> | <div> <div>• 장애수당 : 월 2~4만원</div> <div>• 장애아동수당 :</div> <div>- 중증장애인 월 7~20만원</div> <div>- 경증장애인 월 2~10만원</div> </div>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 보건 복지부 |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처 | | | | | | | | |
|--------------------|---|---|---|-------|-----|-----|-------|---------------------------|---|---|---|-------|
| | 경증(3~6급) 장애인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 | | | | | | | | |
| 장애인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진단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검사비)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 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진단비) 진단서 발급비용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 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검사비) - (서비스재판정 또는 의무재판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직권 재진단 대상) 소요비용과 관계 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 보건복지부 | | | | | | | | |
|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 수급자격: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6만원) 이하인 경우 * 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는 학교 졸업 후 신청 가능 | •월 최대 289,960원 지급(=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에 따른 소득보전 급여로서 월 최대 209,960원 지급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 급여로서 소득계층에 따라 월 2만원~ 289,960원 지급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 보건복지부 | | | | | | | | |
| 차상위 자활근로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 •직접일자리 및 급여제공 (일 8시간, 시장진입형 기준 월 급여 약 101만원)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 보건복지부 | | | | | | | | |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 빈곤가구,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 •1가구 당 최대 지원액 50만원, 의료비·생활지원비·교육훈련비 등 지원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 보건복지부 | | | | | | | | |
| 취업성공패키지 | •(패키지 I)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여성가장, 신용회복지원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결혼이민자 등 •(패키지 II) | <table><tr><td></td><td>1단계</td><td>2단계</td><td>3단계</td></tr><tr><td rowspan="2">패키지 I</td><td>·3주~1개월 ·참여수당: 최대 25만원</td><td>·최장 8개월 ·훈련비 300만원 (내일배움카드, 자부담최대 10%) ·참여수당 최대40만원</td><td>·최장 3개월 ·취업성공시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지급 ·청년 구직</td></tr></table>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패키지 I | ·3주~1개월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 ·최장 8개월 ·훈련비 300만원 (내일배움카드, 자부담최대 10%) ·참여수당 최대40만원 | ·최장 3개월 ·취업성공시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지급 ·청년 구직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또는 참가신청서를 우편 또는 온라인 (www.work.go.kr) 제출 * 각 지자체에서 | 고용노동부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 | | | | | |
| 패키지 I | ·3주~1개월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 ·최장 8개월 ·훈련비 300만원 (내일배움카드, 자부담최대 10%) ·참여수당 최대40만원 | ·최장 3개월 ·취업성공시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지급 ·청년 구직 | | | | | | | | | |

32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실태분석 및 운영체계 합리화 연구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처 | | | | | | |
|--------------------|---|--|---|-------------|-------------------------|--------|---------------------------|---|---|--|
| | <p>-청년(18~34세):소득무관 -중·장년(35~69):중위소득 100%이하</p> | <table><tr><td></td><td>(6개월)</td><td>축진수당 30만원, 최대 3개월</td></tr><tr><td>패키지 II</td><td>·1주~1개월 ·참여수당: 최대 20만원</td><td>·최장 8개월 ·훈련비 200만원(내일배움카드, 자부담 5~50%) ·참여수당 최대40만원(6개월)</td></tr></table> | | (6개월) | 축진수당 30만원, 최대 3개월 | 패키지 II | ·1주~1개월 ·참여수당: 최대 20만원 | ·최장 8개월 ·훈련비 200만원(내일배움카드, 자부담 5~50%) ·참여수당 최대40만원(6개월) | <p>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을 통해 적극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필요</p> | |
| | (6개월) | 축진수당 30만원, 최대 3개월 | | | | | | | | |
| 패키지 II | ·1주~1개월 ·참여수당: 최대 20만원 | ·최장 8개월 ·훈련비 200만원(내일배움카드, 자부담 5~50%) ·참여수당 최대40만원(6개월) | | | | | | | | |
|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사업 | <p>•저소득층 및 기술적 취약 계층(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중 디지털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p> | <p>•TV 제조사에 공모하여 정부가 선정한 디지털 TV를 알선 - TV 제조사와 협조하여 특정 기능이 내장된 디지털 TV를 시판되는 유사모델보다 저렴하게 알선하면 신청자가 구매대금 부담 (별도 현금지원 등 지원 아님)</p> | <p>•신청자가 ‘디지털방송 시청지원센터’(124 콜센터)로 전화 신청</p> |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 | | | | | |
|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 <p>•차상위계층 대상</p> | <p>•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이동전화요금 감면 - 가입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 (총 3만원 한도, 월 최대 22,500원 감면, 가구당 4인 까지)</p> | <p>•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p> |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 | | | | | |
| 학교우유 급식 | <p>•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의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및 기타(단, 예산범위내에서 지자체와 교육 기관이 협의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 지원)</p> | <p>•학기 중(공휴일 제외) 및 방학(공휴일 포함), 250일 내외 지원</p> | <p>•학교별 신청 및 선정</p> | 농림 축산 식품부 | | | | | | |
| 전기요금 할인 | <p>•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상이자, 유공자, 차상위계층 등</p> | <p>•전기요금 할인 * 기초생활(월 최대1.6만원) * 장애인·유공자(월 최대1.6만원) * 차상위(월 최대1만원) * 상세한 지원내용은 한전고객센터로 문의</p> | <p>•한국전력공사 지사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한전사이버지점 포털 사이트 (cyber.kepco.co.kr)통해 신청 *한전고객센터 (☎ 123)</p> | 산업 통상 자원부 | | | | | | |
| 도시가스 요금 경감 | <p>•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1~3급), 유공자, 다자녀가구 등</p> | <p>•가스요금 경감 *상위(동절기(12~3월) 12,000원, 그 외 3,300원)</p> | <p>•지역도시가스 고객센터로 우편·방문 접수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경감 접수 신청</p> | 산업 통상 자원부 | | | | | | |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처 |
|----------|---|--|---|-----------------|
| 열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1~3급), 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 •열요금 할인('18년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월5천원~1만원) * 차상위계층(월 5천원) * 장애인, 유공자(월 5천원) * 다자녀가구(월 4천원) | •한국지역난방공사 (www.kdhc.co.kr)홈페이지 '에너지 복지요금 - 요금감면 신청하기'로 인터넷 접수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 산업 통상 자원부 |
| 풍수해보험 사업 | •보험대상물(주택, 온실등)을 소유한 국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지원율을 상향하여 지원 * 일반가입자 47~53%, 차상위계층 62%, 기초생활수급자 69% 지원 | •지자체(시·군·구 및 읍·면·동)를 통해 가입 | 행정 안전부 |

나. 의료 지원

차상위계층에 의료지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과정을 거쳐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다른 자격을 얻게 되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지원과 일반 차상위계층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된다.

차상위계층 자격만으로 지원받는 사업은 8개로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인공무릎관절수술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취학전 아동실명 예방, 청소년 건강지원, 사회취약계층·어르신 활동 공간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이 있다. 발달재활서비스(중위소득 150% 까지)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중위소득 180% 까지) 등은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되 더 허용적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2-5〉 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 의료 지원 (8개)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처 |
|--------------------|---|--|-----------------|-----------|
|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 •(안검진)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우선 선정)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이며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안검진) 1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양측) 1종 / 2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양측),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곡률검사 등 총 4종 •(개안수술) 안과진료관련 초음파 |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신청 | 보건 복지부 |

34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실태분석 및 운영체계 합리화 연구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처 |
|---------------------|---|--|---------------------------|-------|
| | 인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 | |
|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 •(무릎수술)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는 지원제외 |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신청 | 보건복지부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기준 제외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 | 보건복지부 |
| 발달재활 서비스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의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장애아동 1인당 月 22만원 상당(자부담 포함)의 바우처 제공(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등 지원)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 보건복지부 |
|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 •저소득층 가구(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 기준중위소득 72%이하 가구)의 신생아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확진검사비 지원 |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 | 보건복지부 |
|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 •(시력검진) 전국 취학 전 만3세~6세 아동 •(수술비 지원) 만 10세 이하 저소득 가정(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0% 미만 가구)의 어린이로 선천성 백내장, 미숙아 망막증, 사시 등의 안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 •시력검진, 수술비(수술을 위한 사전검사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 치료목적의 안경 등) 지원 |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 | 보건복지부 |
| 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보건위생물품 현물 지원 | •거주지 관할 지자체 | 여성 |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처 |
|----------------------------|---|--|--|-----|
| 건강지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만11세~만18세 여성 청소년 | | 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 가족부 |
| 사회취약계층·어르신 활동공간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 어르신 활동공간 (독거노인, 경로당, 양로원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 및 컨설팅 1,700개소(취약계층 1,200, 어르신활동공간 500) •실내환경 개선지원 650개소(취약계층 400, 어르신활동공간 250) •환경성질환자(소아·청소년) 진료지원 300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지 관할 지자체(시·군·구)를 통해신청(3~5월) | 환경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여 자격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별도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 사업으로,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등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사업이다. 주요 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을 의료급여 유사수준 만큼만 부담하게 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과 건강보험료 지원(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전액 국가 지원)이 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경우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표 2-6〉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사업 (6개)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처 |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부양의무자 기준 :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경감 : 의료급여와 유사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 보건복지부 |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검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암환자에게 최대 3년간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연 최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보건복지부 |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처 |
|---------------|--|---|---|-------|
| | (1차 검진)으로 확인된 신규 암 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하위 50%인 만 18세 이상 원발성 폐암환자 | 220만원(본인 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까지 지원 -건강보험 대상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폐암환자: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 일부부담금 연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일부부담금 120만원 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 |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18세 미만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저소득 가구의 만 18세 미만 암환자 ※ 환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재산은 최고재산액 300% 미만 | •백혈병은 연 최대 3,000만원, 기타 암종은 연 최대 2,000만원(단, 조혈모세포 이식 시에는 3,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보건복지부 |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1차 외래진료시 일부지원 2,3차 외래진료시 전액지원 입원 시 의료(요양)급여비용 지원 (단,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식대비 약제비 미지원) | •(건강보험공단)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 2종 여부와 장애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제공 •(의료기관) 진료 시 정보마당을 통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유형 또는 의료급여2종 및 장애 여부 확인 후 장애인의료비 지원 처리 | 보건복지부 |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만족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중 등록장애인 | •간병비(11종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7개 질환) 지원 |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신청 | 보건복지부 |
|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요양등급(1~5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의료급여자·감경대상자 등 | •보훈대상별, 감경사유별 본인일부부담금의 40~80% 지원 |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국가보훈처 |

다. 주거 지원

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은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 사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 3개이다.

〈표 2-7〉 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 주거 지원 (3개)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처 |
|-----------------|--|--|-----------------------------------|---------|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인 수급자로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지원 (가구당 최대 380만원) | •관할 읍면동 주민 센터에 신청 | 국토교통부 |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 •차상위계층 중 LP가스를 호스*로 사용하는 가구 *압력조정기 후단부터 중간밸브 전단까지 호스로 사용하는 경우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거주지 관할 지자체(시·군·구)를 통해 신청 | 산업통상자원부 |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주택효율개선이 시급한 복지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 | •저소득층 가구 등에 단열, 창호공사 등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공지원(단열, 창호, 바닥배관 등) 및 물품지원(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등) |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기관, 에너지복지단체 등으로 신청 | 산업통상자원부 |

라. 교육 지원

교육 지원 중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은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국가장학금(Ⅰ유형), 꿈사다리 장학제도(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사업), 다자녀(세자녀 이상)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 생활비 무이자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등 10가지가 있다.

〈표 2-8〉 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 교육 지원 (10개)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처 |
|------|-------------------|--------------------|-------------|-----|
| 교육복지 | •교육급여 수급권자, 법정 차상 |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 •재학 중인 학교 및 | 교육부 |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처 |
|----------------------------|---|---|--|-----|
| 우선지원사업 | 위계층의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 및 다문화가정의 자녀, 특수 교육 대상자,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 교육, 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복지 프로그램 제공 ※ 지원대상 학생이 일정 수 이상인 학교를 선정해 지원하며 선정기준은 시도 교육청에서 지정 | 교육청에 신청 | |
| 국가장학금 (I 유형)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득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 •(지원금액) 등록금 범위 내 연간 최대 520만원 (기초·차상위)부터 최소 67.5만원(소득 8구간)까지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을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교육부 |
| 꿈사다리 장학제도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사업)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의 중학교 1학년 (중2 진학 예정) 학생 | •중2부터 고3까지 5년간 월 30만원 내외의 장학금과 교육캠프, 멘토링 등 지원 | •학교에 신청하면 추천 및 선발을 거쳐 대상자 확정 | 교육부 |
| 다자녀 (세자녀 이상) 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득8구간 이하 세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 * 단, '88.1.1. 이후 출생자, 미혼에 한함 •(지원내용) 등록금 범위 내 연간 450만원 지원 * 단, 기초·차상위~소득 3구간은 연간 520만원 지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을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교육부 |
| 대학생 근로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득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 •(지원단가) 교내근로의 경우 시간당 8천원, 교외근로의 경우 9.5천원 * '18년 2학기부터 교외근로 10.5천원으로 인상 •(지원범위) 학기당 450시간 / 주당 학기 중 20시간, 방학 중 40시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을 통해 신청 *한국장학재단 (☎ 1599-2290) | 교육부 |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드림장학금) | •저소득층 학생(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중 해외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우수 고교생 | •(유학준비생 유형) 국내장학생(고2·고3) 30명 대상/ 학업장려비 지원 •(유학생 유형) 유학준비생 유형 장학생 중 '드림장학금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한 해외대학 진학자/ 연간 최대 6만 USD 이내(학비, 체재비), 항공료 별도(연 2.5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을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 1599-2290) | 교육부 |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처 |
|----------------------------------|--|--|---|-----|
| | | USD 이내) 지원 | | |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상환학자금('09년 2학기 이후) 대출 대학 졸업생 및 기타사유* *부·모의 사망, 부·모의 파산·면책·개인회생 결정, 본인이 수급자, 본인의 장애, 본인·부·모의 중증질환, 대학생 창업자, 본인이 차상위계층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졸업 후 상환취약계층의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최대 3년) 후 무이자 분할상환(4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을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교육부 |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교육청별, 지원항목별로 다르나 통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등),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 통신비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교육비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을 통해 신청 | 교육부 |
|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생활비 무이자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후상환학자금 생활비 대출자 중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상환유예기간 동안 무이자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을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교육부 |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2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인원 5,000명 내외, 1인당 연간 35만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를 통해 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02-3780-9948) | 교육부 |

마. 돌봄 지원

돌봄지원 사업은 차상위계층을 비롯해서 비교적 폭넓은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 수는 25개이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드림 스타트), 미소금융, 취약농가 인력 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통합문화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해양수산부 지원)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은 대상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임을 명시하고 있다.

언어발달지원사업,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중위소득 120%까지, 지역아동센터 이용은 중위

소득 100% 이하,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은 중위소득 160% 이하, 가족역량강화 지원은 중위소득 72% 이하 등 소득기준을 넓힌 사업이 있으며, 사업 대상자 기준에 소득 기준은 없으나 차상위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명시하거나(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사업,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서비스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수준을 차상위계층에게 낮게 부과하는 사업(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차상위계층 가정에 차등적 정부 지원금을 책정하는 사업(아이돌봄지원) 등 이 있다.

〈표 2-9〉 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 돌봄 지원 (25개)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처 |
|--------------|---|---|-------------------------------|-------|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1~3급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 가정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신체수발, 신변활동, 가사 지원 등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 보건복지부 |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② 장애 1~3등급 또는 중증질환자(시·군·구청장 인정자) (소득기준 : 차상위 계층 이하) | •(방문서비스) 식사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주간보호서비스) 심신기능 회복서비스(여가,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 등의 기능 훈련), 급식 및 목욕,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치매노인 보호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 보건복지부 |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그 가족 | •캠프, 여행 프로그램 및 돌봄 지원 | •거주지(광역시·도) 관할 사업수행 기관을 통해 신청 | 보건복지부 |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상담 지원 (기본 12개월간, 1인당 月 16만원 바우처 제공)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 보건복지부 |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만12세 이하의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 중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지원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월 219,000원 지원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 보건복지부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신청 | 보건복지부 |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처 |
|--------------|--|---|----------------------------|-------|
| 지원 | 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8.7.1.)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등 | | |
| 언어발달 지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아동 1인당 月 22만원 상당 (자부담 포함)의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등 지원)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 보건복지부 |
|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 •(돌봄서비스) 만 18세 미만의 1~3급 등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 •(휴식지원프로그램)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 •(돌봄서비스) 아동 1명당 연 528시간 범위 내 지원 •(휴식지원프로그램) 자조모임, 가족치료·상담, 부모교육 등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 보건복지부 |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8개 품목 무료교부(지원기준액 내) - (지체·뇌병변·심장) 보행차, 식사보조기구, 목욕의자 등 19품목 - (시각)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 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등 6품목 - (청각)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등 3품목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 보건복지부 |
| 장애인 활동지원 | •만6세이상 ~ 만65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와 추가급여(독거, 취학, 취업 등 생활환경 반영)를 합산하여 매월 바우처 제공 * 차상위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 정액 (20천원),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 면제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 보건복지부 |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의 해당 서비스별 욕구기준에 충족하는 자 | •이용자가 신청한 사회서비스의 이용권(바우처)을 제공 (서비스비용의 70~90% 국비)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 보건복지부 |

42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실태분석 및 운영체계 합리화 연구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처 |
|-----------------------|--|---|--|---------|
| | (장애인·노인 대상사업은 140% 이하) | 지원, 10~30% 본인부담) | | |
| 지역아동센터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급여 수급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 등 지역사회 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소득이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지역연계(인작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월~금요일을 포함해 주 5일, 1일 8시간 이상(필수시간 포함) 상시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아동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에 신청 | 보건복지부 |
|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드림스타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0세 ~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임산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발굴 및 주기적 면담 건강검진 및 예방, 기초학습, 사회정서, 심리행동, 보호, 부모교육, 부모지원 서비스 등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 보건복지부 |
| 초등돌봄교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무료 제공, 교육비 지원 대상학생 급·간식 무상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별 돌봄교실 신청 | 교육부 |
|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보훈대상자 중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이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60%이하인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훈심검이가 재가서비스 지원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취사·세탁·청소 등 집안 내 가사활동 및 식사수발·채워변경 등 활동지원, 병원동행·산책·심부름·말벗 등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건(지)청에 신청 | 국가보훈처 |
| 미소금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창업예정자 포함) 및 취약계층 * 2인이상 공동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영 중인 경우에도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 계층자립자금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전국 15개 은행에서 신청 | 금융위원회 |
| 취약농가 인력 지원 (행복나눔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가구 등 취약가구 및 읍면 소재 경로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행복나눔이 활동비 지원 —1일 1만 2,000원, 연간 최대 12일, 경로당은 최대 24일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지 지역 농협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
| 스포츠강좌 이용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 5~18세 유·청소년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 주민센터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포털 사이트 (svoucher.kspo.or.kr)를 통해 온라인 신 | 문화체육관광부 |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처 |
|-----------------|--|---|---|---------|
| | 만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정 -(3순위) 30개월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4순위) 30개월 이상 차상위 계층 및 법정 한부모가정 | | 청 가능 *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298~9) | |
| 통합문화 이용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2012.12.31.이전 출생자(2018년 기준, 6세 이상) |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및 체육 활동, 음반·도서 구입 또는 국내 여행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발급 * 개인(카드1매) 당 연간 7만원 이내 | •읍·면·동 주민센터 및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www.mnuri.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 |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 •등록 시·청각 장애인(복지부) 및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보건처) | •시·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수신기 보급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대상자에게 우선 보급 | •시청자미디어재단 또는 홈페이지 (tv.kcmf.or.kr)를 통해 신청 *상담전화 (☎ 1688-4596) | 방송통신위원회 |
|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급자 | •전자식 바우처 카드 발급(1인당 10만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비,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으로 사용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 (www.forestcard.or.kr) 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우편신청 | 산림청 |
| 가족역량강화 지원 | •중위소득 72% 이하 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북한이탈가족, 긴급위기가족 등 | •심층 사례관리 및 상담, 자녀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 지역자원 연계 등 •사고·자살·재난 등 위기가족에게 긴급 심리정서지원, 긴급가족돌봄지원 등 •아동학대 우려 등 취약가정 부모에게 부모교육, 가족상담 등 제공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센터지원본부 (☎ 02-3479-7600) •홈페이지 (www.familynet.or.kr) | 여성가족부 |
| 아이돌봄 지원 | •맞벌이, 취업한 부모, 부모의 장애, 다자녀가정 여부, 부모의 장기입원, 재학, 취업준비 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른 소득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액 차등 지원 -수급자, 차상위 지정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무관하게 '가'형으로 지원 | •시간제 돌봄(연 600시간)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보육시설 등·하원 동행 등 돌봄서비스 제공 •종일제 돌봄(월 200시간) 만 2세 이하 아동 대상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득, 기저귀 갈기, 목욕 등 돌봄 제공 | •아동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청 | 여성가족부 |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처 |
|--------------|---|---|--|-------|
|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 •저소득층,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세자녀 이상 가정, 맞벌이 가정 및 학교장 및 지역사회 추천을 받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4~중3) | •하루 4시간, 주5~6일, 전문체험활동, 학습지원활동, 자기개발활동, 특별지원(캠프, 부모교육), 생활지원(급식, 상담, 건강 관리) 등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지역 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방문 및 유선 신청 | 여성가족부 |
| 가사도우미 지원 | •중위소득 50%이하가구(수급자),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장애인 가구, 어촌지역 임신부 및 출산후 3개월 이내 |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취사(반찬제공 포함), 세탁, 청소 등 가사서비스 제공 | •지역 수협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해양수산부 |

2. 차상위계층 자격만로는 지원받을 수 없는 사업 (37개)

사업 대상에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나 현재는 차상위계층 자격만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사업은 총 37개로 볼 수 있는데, 이 중 14개 사업은 향후 차상위계층 자격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차상위계층 자격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인 사업은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공공산립가꾸기 참여자 자격, 산림서비스 도우미 참여자 자격,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 치매검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해소,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 등이 있다. 상이한 소득기준임에도 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를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어 차상위계층 자격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의 경우 지원을 위한 별도 소득 기준은 없지만 정보 소외 등이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이용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표 2-10〉 차상위계층 자격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예정인 사업 (14개)

| 유구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처 |
|----|---------|-------------------------------------|---|-----------------------|-------|
| 생 | 고위험 임신부 | •임신 20주 이후에 5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출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300만원 | •관련 필요서류 (의사진단서, 입·퇴원 | 보건복지부 |

| 요구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처 |
|----|--------------|--|--|---|---------|
| 계 | 의료비 지원 | 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으로 입원치료 받은 자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 | 한도 내에서 지원(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 | 진료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서 신청 | |
| | 공공산림가꾸기 | •만 18세 이상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 참여제한: 최대 3년간 2년 이상 참여자, 고소득자(가구단위 소득이 중위소득 60% 초과, 재산액 | •공공산림가꾸기 활동에 참여 시 1일 6만 240원~6만 8,240원(4대보험 본인부담금 공제)의 급여 지급 *월 근무시간: 160시간, 근무기간: 약 10개월 | •시군 산림부서 또는 국유림관리소 방문 신청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신청 등 | 산림청 |
| | 산림서비스도우미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사업별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 *취업취약계층 또는 장년·청년층 우선선발 |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일자리 제공을 위해 임금 지원 -주200시간 근무, 월150만원 가량 임금 지급 | •산림청 소속기관 및 시·도, 시·군·구로 신청, 일몰아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산림청 |
|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만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만14세 미만 자녀 아동양육비(월18만원), 자립지원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online.bokjiro.go.kr)을 통해 신청 | 여성가족부 |
| |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만14세 미만 자녀의 아동양육비(월 13만원), 추가아동양육비(조손 및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만5세 이하 자녀, 월5만원), 중고생 학용품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생활보조금 지원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online.bokjiro.go.kr)을 통해 신청 | 여성가족부 |
| | 여성가장창업자금지원 | •저소득(기준중위소득의 60%) 여성가장으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등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갖춘 가구의 여성 | •임대보증금(10천만원 한도로 고정금리 연2%, 최대 지원기간 6년(최초 2년, 2회 연장 가능)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 16개 지회로 문의(신청서류는 우편 제출) | 중소벤처기업부 |
|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일자리 제공을 위해 임금 지원 -주30시간 근무, 월90만원 가량 임금 지급 | •거주지 관할 지자체(시·군·구)를 통해 신청 | 행정안전부 |
| 의료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의 법적 난임부부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최대 4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1회당 최대 50만원 |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사전신청 | 보건복지부 |
| | 치매검진지원 | •선별검사: 만 60세 이상 어르신 •진단·감별검사: 만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 무료 실시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 필요 시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감별검사 실시 및 검사비 일부 지원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보건복지부 |
| | 치매치료관리비지원 | •치매로 진단 받아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 중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신청 | 보건복지부 |

| 육구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처 |
|----|-----------------------|--|--|--|-------|
| | | 120% 이하인 경우 | | | |
|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해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9세~18세 청소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공존질환 검사 결과,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으로 우울증, ADHD 등이 발견된 청소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심리검사, 치료협력병원 연계 및 치료비 지원 -일반계층:30만원 이내 진료비 지원 -저소득·취약계층: 5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에서 이용습관 진단조사 등을 통해 선별, 대상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관리 *청소년전화 (☎ 1388) | 여성가족부 |
| 주거 |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 | •중위소득 이하의 실비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 •1인당 월 286천원 |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관할 지자체(시·군·구)를 통해 신청 | 보건복지부 |
| 돌봄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에 한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견활동 비용지원 : 후견인 양성교육 30시간 이상 이수하고 후견인 심판결정이 있는 경우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월 15만원) •후견심판 비용지원 : 가정법원심판 절차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30만원, 최대 50만원)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 보건복지부 |
| 기타 | 청소년 특별지원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만9세 이상 만18세 이하 위기청소년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단, 생활, 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0%이하) | •생활(기초생계비, 숙식제공 등), 건강(진찰·검사 등), 학업(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립(기술습득 및 진로상담 비용 등), 상담(심리검사비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법률(소송 및 법률상담비용 등), 활동(수련·문화활동비 등), 기타 지원(교복지원 등) | •거주지 관할 지자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를 통해 신청 | 여성가족부 |

별도로 소득 재산 조회 등 수급자격을 조사하여 지원하는 사업은 긴급복지, 기초연금 등 소득지원, 근로장려세제 등 세제지원, 바뀔드림론, 새희망홀씨, 안전망대출, 햇살론 등 대출지원, 국가암검진, 노인장기요양보험 저소득층 본인 일부부담금 경감, 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용자지원, 영구임대주택공급 등 주거지원 등 23개 사업이다.

〈표 2-11〉 별도로 소득·재산 조회 등 수급자격을 조사하여 지원하는 사업(23개)

| 육구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처 |
|----|------|---|---|-------------------------------|-------|
| 생계 | 긴급복지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사망, 가출, 실직, 중한질병 등)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소득·재산 기준* 등 |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4인가족 월간 종류별 지원액 > | •관할 시·군·구 긴급복지 담당자에게 신청 또는 신고 | 보건복지부 |

| 육구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 | | | 신청방법 | 부처 |
|----|----------------|--|--|------------|-------------|--------------|-----------------|---|-------|
| | |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 및 재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기준 1,254천원), 재산기준(대도시 13,500만원), 금융재산(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종류 지원액 | 생계 117만 | 주거 64.3만 | 복지시설 145만 | 의료 300만 (1회) | | |
| | | | *기타 부가급여로 교육비, 연료비(10월 ~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 | | | | | |
|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 2018년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131만원 · 부부가구 209.6만원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등은 제외 | •매월 최대 단독가구 20만 9,960원, 부부2인 가구 33만 5,920원 지급 | | | | | •주소지 관할 지자체(읍·면·동)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
| | 근로장려세제 (EITC) | •전년도 12.31.기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3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으로, - 가구 구성별로 부부 연간 총소득기준* 미만으로 전년도 6.1.기준 재산합계액 1.4억원 미만인 경우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 •가구원 구성별 (단독) 최대 85만원 (홀벌이) 최대 200만원 (맞벌이)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 | | | | •정기신청 (5.1.~5.31.), 기한후 신청(6.1.~11.30.) 기간에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ARS(1544-9944), 전국 세무서 방문 신청 | 국세청 |
| | 자녀장려세제 (CTC) | •전년도 12.31.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며, 부부연간 총소득기준 4,000만원 미만이고 전년도 6.1.기준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인 경우 |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 | | | | •정기신청 (5.1.~5.31.), 기한후 신청기간 (6.1.~11.30.)에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ARS, (1544-9944), 전국 세무서 방문 신청 | 국세청 |
|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거주자로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지급 | | | |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 공고 | 국토교통부 |
| | 바꿔드림론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에 신용등급 6~10 등급이며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사람 |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를 통해 빌린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6.5% ~ 10.5%의 저금리 대출로 최대 3천만원까지 대환 | | | |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전국 15개 은행에서 신청 | 금융위원회 |
| | 새희망홀씨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의 신용등급 6~10등급인 사람 | •생계자금이나 사업운영자금 등을 연 10.5% 이내의 금리로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 | | | | | •전국 15개 은행에 신청 | 금융위원회 |

48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실태분석 및 운영체계 합리화 연구

| 육구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처 |
|----|---------------------------|--|--|---|-------|
| | 안전망대출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인 사람 중 '18.2.7일 이전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받아 6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 |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를 통해 빌린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12~24%의 중금리 대출로 최대 2천만원까지 대환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한 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전국 15개 은행에서 신청 | 금융위원회 |
| | 햇살론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으로 신용이 낮고 담보가 없어 은행 이용이 어려웠던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근로자 | •근로자 햇살론 : 생계자금 1천5백만원, 긴급생계자금 5백만원, 고금리채무 대환자금 3천만원 이내 •사업자 햇살론 : 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5천만원, 고금리 채무 대환자금 3천만원 이내 | •서민금융회사(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전국지점에 신청 | 금융위원회 |
|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 •연근해 어선 및 어선원 -어선원 10톤미만/30톤미만/50톤 미만/100톤미만 -어선 10톤미만/20톤미만 | •어선원 보호 및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어선 톤수별 차등 지원) -(어선원) 10톤 미만 70% / 30톤 미만 60% / 50톤 미만 30% / 100톤 미만 20% -(어선) 10톤 미만 70% / 20톤 미만 60% | •관할 수협 또는 조합으로 문의 | 해양수산부 |
| 의료 | 국가암검진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당해 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액 지원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부담분 10%(90% 공단부담) 지원 | •각 연도 암검진 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 선정 및 안내 | 보건복지부 |
| | 노인장기요양보험저소득층 본인 일부 부담금 경감 | •65세이상 또는 65세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중 감경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시 본인일부부담금 40~60% 감경(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재가 15%, 시설 20%)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선정되어 별도 신청없음. 제외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 신청 | 보건복지부 |
| 주거 | 국민임대주택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18년도 기준 350만원 | •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 주택 공급 | •지역별 해당주택분양 시 공급기준에 맞춰 신청 | 국토교통부 |
| | 기존주택전세임대·용자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자산기준 충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장애인(자산기준 충족) |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고, 사업시행자(LH·지방공사)가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임대 -전용 85m2이하 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 •관할 시·군·구로 신청 | 국토교통부 |
| | 다가구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 •관할 시·군·구로 | 국토 |

| 욕구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처 |
|--------|---|---|---|---|-----------------------|
| | 매입 임대 대출· 융자 (기존 주택 매입 임대) | 의료)·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자 산기준 충족)· 전년도 도시근로 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장애인 (자산기준 충족) | 충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 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 수 후 저렴하게 임대 | 신청 | 교통부 |
| |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차상위 계층 저리 융자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인 차상위계층 중 주택도시기금 의 전세대출인 '버팀목 전세자 금대출'을 신청한 가구 | •차상위계층에 대해 기본금리 대비 1%p 금리 우대 *금리는 보증금 및 소득 구간별 상이 | •해당자 '버팀목 전 세자금대출' 신청 은행으로 신청 *우리, 기업, 신한, 국민, 농협에서 대출 가능 | 국토 교통부 |
| | 영구 임대 주택 공급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인,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및 자산기준 충족 | •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 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공급(사업승인) | •관할 시·군·구로 신청 | 국토 교통부 |
| | 장기 전세 임대 주택 공급 | •(특별공급)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장애인 등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무주택 서민의 점진적 자가 소유 촉 진을 위해 5년, 10년 분납임대 및 월 임대료 부담이 없는 장기전세형 주택 을 공급 | •입주대상자 선정 시 해당기관으로 신청 | 국토 교통부 |
| 교 육 | 사랑의 그린PC 보급 | •정보소외계층(개인 및 단체) 대 상 -(개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단체) 장애인 복지시설 및 사 회복지기관 등 정보소외계층 지원시설 | •경제적 여건 등으로 PC 구입에 어려 움을 겪는 정보소외계층에게 사랑의 그린 PC를 보급 | •해당기간에 시· 군·구 주민센터 또 는 포털 사이트 (http://lovepc. nia.or.kr)를 통해 신청 * 상담전화 (☎ 1588-2670) |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 돌 봄 |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아래 에 해당하는 자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 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 요한 경우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 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 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 •안전확인(주1회 방문, 주2회 전화) 서 비스,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 | •거주지 관할 지자 체(읍·면·동)를 통 해 신청 | 보건 복지부 |
| | 정보 | •등록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 구입비용 지 | •접수기간 중 관할 | 과학 |

50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실태분석 및 운영체계 합리화 연구

| 육구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처 |
|----|------------------------------------|--|---|---|-----------------|
| | 통신 보조 기기 보급 | 받은 국가유공자 | 원 -일반대상자는 보조기기 가격의 80% 지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는 보조기기 가격의 90% 지원 | 시·군·구 접수처 또는 인터넷 (www.at4u.or.kr) 을 통해 지원 신청 *상담전화 (☎ 1588-2670) | 기술 정보 통신부 |
| | 서민 법률 보호를 위한 법률 홈닥터 |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 를 필요로 하는 서민 | •채권·채무, 근로관계, 임금, 상속·유 언, 이혼, 친권, 양육권, 손해배상, 개 인회생,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 한 법률상담 등 | •평일 9시~18시 전국 65개 배치기 관(지자체 또는 사 회복지협의회) 으 로 전화예약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 지에서 상담예약 | 법무부 |
| | 차상위 계층 무료 법률 구조 사업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 | •법률상담, 민가사 사건 등 소송대리, 형사변호 무료지원 (단, 민가사 사건의 경우 승소가액 3 억 이하인 경우만 무료지원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 지 소 방문 신청(위치 문의 및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2번) | 법무부 |

제 3 장

차상위계층 실태 분석: 맞춤형 급여 탈락자를 중심으로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제3절 서비스 이용 현황

3

차상위계층 실태 분석 < : 맞춤형 급여 탈락자를 중심으로 <

제1절 분석 개요

1. 분석대상과 분석자료

본 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보장제도) 탈락자를 중심으로 차상위 계층의 일반적 특성과 서비스 이용 실태를 분석하여 본다.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 네 개 맞춤형 급여에서 2016년도 탈락하여 연도말까지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개인으로 다음과 같이 한정하였다. 첫째, 탈락 사유가 사망인 대상자는 탈락 이후 서비스 이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외하였다.³⁾ 둘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며 제도에서 이탈한 대상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 때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탈락 이후의 정보이어야 하지만 제도 이탈 이후 정보 수집이 어려운 행정자료의 한계에 따라 탈락 발생연도 가구의 소득인정액 자료를 활용하였다. 셋째,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대한 정보가 누락된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데이터이다. 분석을 위해 2016년도와 2017년도 두 개 연도에서 각기 다른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연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맞춤형 급여별 탈락자의 개인 및 가구 특성에 대한 2016년도 시점 정보와,⁴⁾ 탈락 이후 급여 이용에 대한 2017년도 연간 수급 이력 정보이다.

2. 분석내용

3) 사망 외에 행정적 사유에 의한 탈락은 고려하지 않았다.

4) 탈락자의 경우 제도 이탈 이후 더 이상 정보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탈락 이후를 기준으로 인적정보를 추출할 경우 서비스 비수급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점이 나타난다. 동일한 이유로 대상자 한정의 기준정보인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도 탈락 직후가 아닌 탈락 발생 연도 정보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보장제도 맞춤형 급여별 탈락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탈락 이후 기초보장 재진입 여부에 따라 차상위계층과 기초보장 재진입자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기초보장 재진입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수급 이력의 확인이 가능한 생계·의료·주거급여를 기준으로 판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차상위계층은 탈락 직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대상자 가운데 탈락 다음연도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에 재진입하지 않은 대상자이다.⁵⁾

<표 3-1> 본 연구의 분석대상 구분

| 구분 |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 |
|------------------------|---|
| 기초보장 재진입 (생계·의료·주거) | 탈락 이후 연간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급여(<표 3-2> 별표(*))의 수급 이력이 한 개 이상 있는 자 |
| 차상위계층 | 탈락 이후 연간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급여(<표 3-2> 별표(*))의 수급이력이 없는 자 |

두 번째로 맞춤형 급여 탈락자 가운데 차상위계층의 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서비스 목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수급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으로 <표 3-2>에 정리하였다.⁶⁾ 분석 내용은 맞춤형 급여별 분석 대상자들이 탈락 이후 2017년도 이용한 연간 서비스 개수와 금액으로 구성하였다. 서비스 이용 개수 분석에는 <표 3-2>에 제시된 현금, 현물, 바우처의 모든 사업을 포함했지만, 서비스 이용 금액 분석은 현금급여만으로 한정하였다. 급여의 개수는 제도명이 아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상세 분류하고 있는 급여 단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 단위가 탈락자 개인이므로, 급여 금액 분석에서 가구급여의 경우 2017년도 연간 급여 금액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조정한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⁷⁾ 분석 결과는 차상위계층과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5) 자료의 한계로 교육급여 수급 이력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다. 본 연구의 차상위계층과 기초보장 재진입자(생계·의료·주거) 구분은 제한적인 자료 활용의 범위에 따라 조작화 된 것임을 밝혀둔다.

6) 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급 이력을 확인할 수 있지만, 모든 부처의 복지 사업 전체를 포괄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결과 해석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7) 2017년도 이용한 해당 급여별 가구원 수로 조정하되, 가구원 수 확인이 어려운 일부 사업의 경우 탈락 발생 연도 가구원 수 정보를 활용하였다.

<표 3-2> 본 연구의 분석 서비스

| 자격 | 서비스명 | 급여유형별 급여단위 | | | |
|------------------------|-------------------------|------------|----------|----------|----------|
| | | 급여 개수 | 급여 금액 | 급여 단위 | 급여 유형 |
| 기초생계급여 | 기초생계급여(일반)* | 1 | 1인금액 | 가구 | 현금 |
| 기초주거급여 | 기초주거급여(현금-보증금)* | 1 | 1인금액 | 가구 | |
| | 기초주거급여(현금-월차임)* | 1 | 1인금액 | 가구 | |
| 이행기보전액 | 이행기보전액(기초생계)* | 1 | 1인금액 | 가구 | |
| | 이행기보전액(기초주거)* | 1 | 1인금액 | 가구 | |
| 기초의료급여 | 기초의료급여(생계-시설)-월동대책비*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기초의료급여(생계-시설)-주,부식비 등*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기초의료급여(생계-시설)-특별위로금*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소년소녀가정 지원금(부가급여)* | 1 | 전체금액 | 개인 | |
| 가정위탁아동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1 | 전체금액 | 개인 | |
| 고용지원(일반구직 자_취업취약계층) | 취업성공패키지지원(참여수당, 생계지원수당)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취업성공패키지지원(취업성공수당) | 1 | 전체금액 | 개인 | |
| 고용지원(취업취약 계층일자리) | 공공산림가꾸기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산림서비스도우미 | 1 | 전체금액 | 개인 | |
| 기초연금 | 기초연금 | 1 | 전체금액 | 개인 | |
| 긴급 | 교육지원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생계지원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연료비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의료지원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장제비지원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전기요금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주거지원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해산비지원 | 1 | 전체금액 | 개인 | |
| 노인복지(치매)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 1 | 전체금액 | 개인 | |
| 농어촌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1 | 전체금액 | 개인 | |
| 모자가족 | 모자가정생활보조금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모자가정아동양육비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모자가정자녀학비-수업료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모자가정자녀학비-입학금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모자가정자녀학비-학용품비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모자가정추가아동양육비 | 1 | 전체금액 | 개인 | |
| 보건 | 성인암환자 의료비지원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 1 | 전체금액 | 개인 | |
| 부자가족 | 부자가정생활보조금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부자가정아동양육비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부자가정자녀학비-수업료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부자가정자녀학비-입학금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부자가정자녀학비-학용품비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부자가정추가아동양육비 | 1 | 전체금액 | 개인 | |
| 사랑드림(기부금) | 사랑드림(기부금) | 1 | 전체금액 | 개인 | |
|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 | 1 | 전체금액 | 개인 | |

| 자격 | 서비스명 | 급여유형별 급여단위 | | | |
|-----------------|--------------------------|------------|----------|----------|----------|
| | | 급여 개수 | 급여 금액 | 급여 단위 | 급여 유형 |
| 양육수당 | 양육수당 | 1 | 전체금액 | 개인 | |
| 요급감면(전기) | 전기요금할인 | 1 | 전체금액 | 개인 | |
| 의료급여 | 본인부담금상한제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본인부담보상금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요양비(의료급여)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 | 1 | 전체금액 | 개인 | |
| 입양아동 |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장애입양아동양육수당 | 1 | 전체금액 | 개인 | |
|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 1 | 전체금액 | 개인 | |
| 장기요양보험 |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 1 | 전체금액 | 개인 | |
| 장애아동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1 | 전체금액 | 개인 | |
| 장애인복지 | 장애수당(생계·의료)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장애수당(시설)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장애아동수당(시설) | 1 | 전체금액 | 개인 | |
|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1 | 전체금액 | 개인 | |
| 장학(국가) | 국가장학금(Ⅰ,Ⅱ 유형) | 1 | 전체금액 | 개인 | |
| 장학(근로) | 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 | 1 | 전체금액 | 개인 | |
| 저소득층수도요금감면 |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 1 | 전체금액 | 개인 | |
| 조손가족 | 조손가정아동양육비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조손가정자녀학비-수업료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조손가정자녀학비-입학금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조손가정자녀학비-학용품비 | 1 | 전체금액 | 개인 | |
| 지역공동체일자리 | 생계급여(일반)-취약계층일자리지원 | 1 | 전체금액 | 개인 | |
| 차상위장애인 | 장애수당(주거·교육·차상위)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장애아동수당(주거·교육·차상위) | 1 | 전체금액 | 개인 | |
| 청소년특별지원 | 기타지원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법률지원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상담지원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생활지원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자립지원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학업지원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활동지원 | 1 | 전체금액 | 개인 | |
| 청소년한부모 모자가족 | 청소년한부모모자가정생활보조금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청소년한부모모자가검정고시학습비-교재비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청소년한부모모자가검정고시학습비-등록비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청소년한부모모자아동양육비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청소년한부모모자자립활동촉진수당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청소년한부모모부자아동양육비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청소년한부모부자자립활동촉진수당 | 1 | 전체금액 | 개인 | |
| 취약농어가 | 취약농어가인력지원(영농도우미,가사도우미지원) | 1 | 1인금액 | 가구 | |
| -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1 | 전체금액 | 개인 | |
| - | 자활인건비 | 1 | 1인금액 | 가구 | |
| 검진(국가암) | 국가암조기검진사업 | 1 | | | |
|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지원 |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 1 | - | - | 현물 |

| 자격 | 서비스명 | 급여유형별 급여단위 | | | |
|----------------------|-----------------------------------|------------|----------|----------|----------|
| | | 급여 개수 | 급여 금액 | 급여 단위 | 급여 유형 |
| 노인복지(돌봄) | 노인돌보미(기본서비스) | 1 | | | |
| 노인복지(응급돌봄) |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 | 1 | | | |
| 노인복지(치매검진) | 치매검진사업 | 1 | | | |
| 방송소의계층(자막) | 방송소의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자막방송수신기) | 1 | - | - | 현물 |
| 방송소의계층(화면) | 방송소의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화면해설방송수신기) | 1 | | | |
| 사랑의그린PC | 사랑의그린PC보급 | 1 | | | |
| 영구임대주택공급 | 영구임대주택공급 | 1 | | | |
| 영유아(난청진단)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1 | | | |
| 임산부(보건수첩)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배부 | 1 | | | |
| 임산부(엽산) | 임산부 엽산제 지원 | 1 | | | |
| 임산부(철분) | 임산부 철분제 지원 | 1 | | | |
| 정보화지원(보조기기) |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 1 | | | |
| 체육진흥 | 스포츠바우처 | 1 | | | |
|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서비스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서비스 | 1 | - | - | 바우처 |
| - | Dream&Vision유소년문화체험서비스 | 1 | | | |
| - | HappyFamily프로젝트 | 1 | | | |
| - |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수혜자) | 1 | | | |
| - | 가족강화를위한의사소통훈련지원서비스 | 1 | | | |
| - | 가족관계회복을위한솔루션프로그램'소중한가족, 통하는가족' | 1 | | | |
| - | 가족역량강화지원서비스 | 1 | | | |
| - | 강원행복한도민심리지원서비스 | 1 | | | |
| - | 강원행복한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1 | | | |
| - |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 | 1 | | | |
| - | 과학실습활동서비스 | 1 | | | |
| - | 과학실험을활용한학습프로그램 | 1 | | | |
| - | 과학플러스창의나누기 | 1 | | | |
| - | 근로자통합지원서비스 | 1 | | | |
| - | 글로벌마인드형성지원서비스 | 1 | | | |
| - |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 1 | | | |
| - | 나이아가라!프로젝트(노인정신건강지원) | 1 | | | |
| - | 남도문화예술통합서비스 | 1 | | | |
| - | 남도소리남도아이 | 1 | | | |
|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1 | | | |
| - | 노인문화통합지원프로젝트 | 1 | | | |
| - | 농촌여성힐링아카데미 | 1 | | | |
| - | 뇌예기(氣)가팩팩! | 1 | | | |
| - | 다문화가정아동적응지원서비스 | 1 | | | |
| - | 다문화가족행복코디지원서비스 | 1 | | | |
| - | 동화야놀~자(스토리텔링) | 1 | | | |
| - | 몸튼마음튼꿈나무육성프로그램 | 1 | | | |
| - | 발달재활서비스 | 1 | | | |
| - | 백세인생"청춘은지금부터!" | 1 | | | |
| - | 부모-아동상호관계증진서비스 | 1 | | | |
| - | 부모-아동원원서비스 | 1 | | | |
| - | 부모-자녀놀이코칭서비스 | 1 | | | |

| 자격 | 서비스명 | 급여유형별 급여단위 | | | |
|----|------------------------------|------------|----------|----------|----------|
| | | 급여 개수 | 급여 금액 | 급여 단위 | 급여 유형 |
| - | 부모성장을위한심리지원서비스 | 1 | - | - | 바우처 |
| - | 부모역량강화를위한HappyFamily서비스 | 1 | | | |
| - | 부모역량강화서비스 | 1 | | | |
| - | 부모코칭프로그램'당당한맘,편편(fun,fun)한맘' | 1 | | | |
| - | 부모학교서비스 | 1 | | | |
| - | 사랑나눔안마치료서비스 | 1 | | | |
|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 1 | | | |
| - | 생명존중(노인)서비스 | 1 | | | |
| - | 섬마을꼬마작가서비스 | 1 | | | |
| - | 성인심리상담서비스 | 1 | | | |
| -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 1 | | | |
| - | 성인재활정신건강서비스 | 1 | | | |
| - | 셀프자세교정서비스 | 1 | | | |
| - | 스포츠인성융합운동서비스 | 1 | | | |
| - | 스포츠활동건강관리서비스 | 1 | | | |
| - | 실버맞춤문화활동서비스 | 1 | | | |
| - | 실버심리지원지원서비스 | 1 | | | |
| - | 아동예술멘토링지원서비스 | 1 | | | |
| - | 아동청소년Dreamup_진로탐색서비스 | 1 | | | |
| - | 아동체험활동지원서비스 | 1 | | | |
| - | 아동·청소년드림터치 | 1 | | | |
| - | 아동·청소년글로벌인재양성지원서비스 | 1 | | | |
| -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1 | | | |
| - | 아동·청소년정서발달서비스 | 1 | | | |
| - |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 1 | | | |
| - | 아동건강관리서비스 | 1 | | | |
| - | 아동비전형성서비스 | 1 | | | |
| - |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 1 | | | |
| - |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통합형) | 1 | | | |
| - | 아동정서발달맞치유서비스 | 1 | | | |
| - | 아동정서발달맞치유지원서비스 | 1 | | | |
| -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1 | | | |
| - | 아동정서발달서비스 | 1 | | | |
| - | 아동주의집중력향상서비스 | 1 | | | |
| - | 아동청소년꿈키움서비스 | 1 | | | |
| - | 아동청소년동기부여서비스(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 1 | | | |
| - | 아동청소년문화예술집중서비스 | 1 | | | |
| - | 아동청소년바른자세교정통합운동서비스 | 1 | | | |
| - | 아동청소년바른체형운동교실 | 1 | | | |
| - | 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 | 1 | | | |
| -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1 | | | |
| - | 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우리아가달라졌어요!) | 1 | | | |
| - | 아동청소년음악멘토링서비스 | 1 | | | |
| - |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 1 | | | |
| - | 아동청소년건강관리서비스 | 1 | | | |
| - | 아동청소년미래비전형성지원서비스 | 1 | | | |
| - |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 1 | | | |

| 자격 | 서비스명 | 급여유형별 급여단위 | | | |
|----|--------------------------------------|------------|----------|----------|----------|
| | | 급여 개수 | 급여 금액 | 급여 단위 | 급여 유형 |
| - |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B) | 1 | - | - | 바우처 |
| -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문제행동아동을 위한정신건강발달서비스- | 1 | | | |
| -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 1 | | | |
| - | 아동청소년의역사탐험프로젝트 | 1 | | | |
| - | 아동청소년의현장체험형진로직업교육서비스 | 1 | | | |
| - | 아동청소년정서함양지원서비스:뮤직케어링 | 1 | | | |
| - | 아이맘행복케어서비스 | 1 | | | |
| - | 알코올사용장애가정기능회복프로젝트 | 1 | | | |
| - | 약물·도박중독가정기능회복도탈케어서비스 | 1 | | | |
| - | 어르신수증재활서비스 | 1 | | | |
| - | 어린이베토벤, 피카소따라잡기 | 1 | | | |
| - | 언어발달지원 | 1 | | | |
| - | 영아와부모를위한가족지원예술치료서비스 | 1 | | | |
| -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1 | | | |
| - | 오감쑹쑹서비스 | | | | |
| - | 오감특목상상놀이터(감성놀이지원서비스) | 1 | | | |
| - | 우리가족융합프로그램 | 1 | | | |
| - | 우리아이꿈그리기꿈부르기 | 1 | | | |
| - | 우리아이행복충전서비스 | 1 | | | |
| - |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 1 | | | |
| - | 유아동신체정서통합서비스 | 1 | | | |
| - | 인터넷과물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 1 | | | |
| - | 인터넷과물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클린인터넷클리닉' | 1 | | | |
| - | 임산부도탈케어서비스 | 1 | | | |
| - | 자녀의성공을돕는부모코칭-키움Mom난다! | 1 | | | |
| - | 장애가정지원서비스 | 1 | | | |
| - | 장애아동청소년을위한자립생활역량강화맞춤형서비스 | 1 | | | |
| - | 장애인맞춤형운동치방서비스 | 1 | | | |
| -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 1 | | | |
| - | 장애인재활승마 | 1 | | | |
| - |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 1 | | | |
| - | 장애인운동재활서비스 | 1 | | | |
| - | 장애인을위한맞춤운동서비스 | 1 | | | |
| - | 장애인활동지원 | 1 | | | |
| - | 저소득층아동돌봄서비스 | 1 | | | |
| - | 정신건강도탈케어서비스 | 1 | | | |
| - | 주양육자와함께하는놀이학교서비스 | 1 | | | |
| - | 중소기업근로자행복찾기서비스 | 1 | | | |
| - | 즐거운아침, 행복한학교 | 1 | | | |
| - | 지역아동과함께하는희망이꽃피는나무 | 1 | | | |
| - | 직업능력발달서비스 | 1 | | | |
| - | 진로컨설팅프로그램 | 1 | | | |
| - | 청소년어울림한마당 | 1 | | | |
| - | 청소년지구시민학교 | 1 | | | |
| - | 청소년직업체험서비스 | 1 | | | |
| - | 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꿈을jobja' | 1 | | | |

| 자격 | 서비스명 | 급여유형별 급여단위 | | | |
|----|-------------------|------------|----------|----------|----------|
| | | 급여 개수 | 급여 금액 | 급여 단위 | 급여 유형 |
| - | 청소년을위한푸드테라피 | 1 | - | - | 바우처 |
| - | 청소년재활승마지원서비스 | 1 | | | |
| - | 출산및영유아용품렌탈서비스 | 1 | | | |
| - | 치매가족심신재충전서비스 | 1 | | | |
| - | 통합가족상담서비스 | 1 | | | |
| - | 편편스터디 | 1 | | | |
| - | 평생건강을위한아동건강관리서비스 | 1 | | | |
| - | 해양역사문화체험아카데미 | 1 | | | |
| - | 활동중심의인터넷중독아동예방서비스 | 1 | | | |

주: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서비스에 별표(*) 표기.

제2절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1. 생계급여 탈락자

가. 차상위계층 현황

<표 3-3>에서는 생계급여 탈락자의 탈락 이후 차상위계층 이행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에 진입하지 않은 차상위계층은 49.91%이었다. 생계급여 탈락자의 50.09%는 탈락 다음연도에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에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생계급여 탈락자의 탈락 이후 이행 현황

| 구분 | 대상자(명) | 비율(%) |
|--------------------|---------|--------|
| 전체 | 131,131 | 100.00 |
| 기초보장 재진입(생계·의료·주거) | 65,683 | 50.09 |
| 차상위계층 | 65,448 | 49.91 |

나. 개인특성 현황

<표 3-4>에서는 생계급여 탈락자의 성, 연령, 장애정도의 개인 특성과 급여중지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성별로는 차상위계층과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 모두 여성 비율이 각각 54.36%와 54.14%로 과반수이었다.

연령별로는 차상위계층의 평균 연령이 38.29세로 기초보장 재진입자(생계·의료·주거) 평균 41.23세 보다 2.94세 낮았다.

장애정도별 현황의 경우 비장애 비율은 차상위계층이 88.25%로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의 84.70%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탈락 당해연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중지 개수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차상위계층의 맞춤형 급여 중지 개수는 2.79개로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 평균 1.47개 보다 높게 나타나 더 많은 급여에서 동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생계급여 탈락자의 개인특성 현황

(단위: %)

| 구분 | | 기초보장 재진입 (생계·의료·주거) | 차상위계층 | 전체 |
|-----------------------|--------------|------------------------|---------|----------|
| 성 | 남성 | 45.86 | 45.64 | 45.75 |
| | | (50.21) | (49.79) | (100.00) |
| | 여성 | 54.14 | 54.36 | 54.25 |
| | | (49.99) | (50.01) | (100.00) |
| 연령 | 영유아(0-5세) | 2.52 | 4.25 | 3.38 |
| | | (37.33) | (62.67) | (100.00) |
| | 학령기(6-11세) | 5.24 | 3.41 | 4.33 |
| | | (60.68) | (39.32) | (100.00) |
| | 청소년기(12-19세) | 17.50 | 16.47 | 16.98 |
| | | (51.60) | (48.40) | (100.00) |
| | 청년기(20-39세) | 18.34 | 32.77 | 25.54 |
| | | (35.96) | (64.04) | (100.00) |
| | 중년기(40-64세) | 39.26 | 24.36 | 31.82 |
| | | (61.79) | (38.21) | (100.00) |
| 장애 정도 | 비장애 | 84.70 | 88.25 | 86.47 |
| | | (49.06) | (50.94) | (100.00) |
| | 경증장애 | 10.51 | 8.26 | 9.38 |
| | | (56.08) | (43.92) | (100.00) |
| 맞춤형 급여 중지 개수 | 1개 | 71.47 | 9.03 | 40.30 |
| | | (88.82) | (11.18) | (100.00) |
| | 2개 | 11.17 | 11.15 | 11.16 |
| | | (50.14) | (49.86) | (100.00) |
| | 3개 | 16.27 | 71.38 | 43.77 |
| | | (18.62) | (81.38) | (100.00) |
| | 4개 | 1.09 | 8.44 | 4.76 |
| | | (11.46) | (88.54) | (100.00) |
| | 평균 | 1.47 | 2.79 | 2.13 |
| | (표준편차) | (0.80) | (1.01) | (1.01) |
| | 전체 | 100.00 | 100.00 | 100.00 |
| | | (50.09) | (49.91) | (100.00) |

다. 가구특성 현황

생계급여 탈락자의 가구특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표 3-5>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수급가구 유형의 경우 차상위계층과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 모두 일반 수급가구 비율이 각각 61.86%와 59.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대유형별 현황의 경우 차상위계층과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 모두 일반세대 비율이 각각 31.20%와 37.33%로 가장 높았다. 모부자세대 비율은 차상위계층과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 모두 각각 28.16%와 31.23%로 두 번째로 높았다.

가구규모 분석에서 차상위계층과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의 평균 가구원 수는 각각 2.36명과 2.65명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별 분포 현황에서 차상위계층과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 모두 1인가구 비율이 33.18%와 26.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시유형별 현황도 살펴보았는데, 차상위계층과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 모두 대도시 비율이 각각 45.15%와 50.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5> 생계급여 탈락자의 가구특성 현황

(단위: %)

| 구분 | | 기초보장 재진입 (생계·의료·주거) | 차상위계층 | 전체 |
|----------------|----------|------------------------|---------|----------|
| 수급 가구 유형 | 일반 수급가구 | 59.78 | 61.86 | 60.82 |
| | | (49.23) | (50.77) | (100.00) |
| | 조건부 수급가구 | 34.82 | 26.82 | 30.83 |
| | | (56.58) | (43.42) | (100.00) |
| | 특례 수급가구 | 1.89 | 6.97 | 3.92 |
| | | (21.43) | (78.57) | (100.00) |
| | 시설 수급가구 | 3.50 | 4.35 | 4.43 |
| | | (44.64) | (55.36) | (100.00) |
| | 기타 수급가구 | 0.01 | 0.00 | 0.01 |
| | | (66.67) | (33.33) | (100.00) |

(단위: %)

| 구분 | | 기초보장 재진입 (생계·의료·주거) | 차상위계층 | 전체 |
|----------|-------|------------------------|---------|----------|
| 세대 유형 | 노인세대 | 12.49 | 14.85 | 13.67 |
| | | (45.77) | (54.23) | (100.00) |
| | 장애인세대 | 12.80 | 12.05 | 12.43 |
| | | (51.59) | (48.41) | (100.00) |
| | 모부자세대 | 31.23 | 28.16 | 29.70 |
| | | (52.68) | (47.32) | (100.00) |
| | 일반세대 | 37.33 | 31.20 | 34.27 |
| | | (54.56) | (45.44) | (100.00) |
| | 기타세대 | 2.66 | 6.77 | 4.71 |
| | | (28.30) | (71.70) | (100.00) |
| 가구 규모 | 1인 | 3.49 | 6.97 | 5.22 |
| | | (33.44) | (66.56) | (100.00) |
| | 2인 | 26.05 | 33.18 | 29.61 |
| | | (44.07) | (55.93) | (100.00) |
| | 3인 | 24.15 | 25.76 | 24.95 |
| | | (48.47) | (51.53) | (100.00) |
| | 4인 | 24.04 | 22.77 | 23.41 |
| | | (51.45) | (48.55) | (100.00) |
| | 5인 | 15.51 | 11.76 | 13.64 |
| | | (56.97) | (43.03) | (100.00) |
| 도시 유형 | 농어촌 | 6.95 | 4.37 | 5.66 |
| | | (61.52) | (38.48) | (100.00) |
| | 대도시 | 3.30 | 2.17 | 2.74 |
| | | (60.36) | (39.64) | (100.00) |
| | 중소도시 | 2.65 | 2.36 | 2.50 |
| | | (1.42) | (1.33) | (1.38) |
| | 평균 | 10.16 | 12.25 | 11.20 |
| | | (45.43) | (54.57) | (100.00) |
| | 표준편차 | 50.29 | 45.15 | 47.73 |
| | | (52.78) | (47.22) | (100.00) |
| | 전체 | 39.55 | 42.60 | 41.07 |
| | | (48.23) | (51.77) | (100.00) |
| | | 100.00 | 100.00 | 100.00 |
| | | (50.09) | (49.91) | (100.00) |

2. 의료급여 탈락자

가. 차상위계층 현황

<표 3-6>에서 나타나듯이 의료급여 탈락자의 22.35%는 탈락 다음연도에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에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에 진입하지 않은 차상위계층은 77.65%이었다.

〈표 3-6〉 의료급여 탈락자의 탈락 이후 이행 현황

| 구분 | 대상자(명) | 비율(%) |
|--------------------|--------|--------|
| 전체 | 95,561 | 100.00 |
| 기초보장 재진입(생계·의료·주거) | 21,359 | 22.35 |
| 차상위계층 | 74,202 | 77.65 |

나. 개인특성 현황

<표 3-7>에서는 의료급여 탈락자의 성, 연령, 장애 정도의 개인특성과 맞춤형 급여 중지 현황을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차상위계층은 여성 비율이 54.97%로 과반수이었지만,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는 남성 비율이 53.67%의 과반수로 분포에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 분석에서 차상위계층의 평균 연령은 37.30세로 기초보장 재진입자(생계·의료·주거) 평균 40.49세 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애정도별 현황에서 비장애 비율은 차상위계층이 89.21%로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 83.11%에 비해 조금 높은 편이었다.

탈락 당해연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급여 중지 개수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차상위계층의 맞춤형 급여 중지 개수는 평균 2.69개로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 평균 2.34개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3-7〉 의료급여 탈락자의 개인특성 현황

(단위: %)

| 구분 | | 기초보장 재진입 (생계·의료·주거) | 차상위계층 | 전체 |
|-----------------------|--------------|------------------------|---------|----------|
| 성 | 남성 | 53.67 | 45.03 | 46.96 |
| | | (25.55) | (74.45) | (100.00) |
| | 여성 | 46.33 | 54.97 | 53.04 |
| | | (19.52) | (80.48) | (100.00) |
| 연령 | 영유아(0-5세) | 2.87 | 4.11 | 3.83 |
| | | (16.71) | (83.29) | (100.00) |
| | 학령기(6-11세) | 5.10 | 4.04 | 4.28 |
| | | (26.68) | (73.32) | (100.00) |
| | 청소년기(12-19세) | 15.91 | 16.87 | 16.65 |
| | | (21.35) | (78.65) | (100.00) |
| | 청년기(20-39세) | 21.67 | 33.52 | 30.87 |
| | | (15.69) | (84.31) | (100.00) |
| | 중년기(40-64세) | 38.52 | 23.87 | 27.14 |
| | | (31.72) | (68.28) | (100.00) |
| 장애 정도 | 노년기(65세이상) | 15.93 | 17.60 | 17.23 |
| | | (20.67) | (79.33) | (100.00) |
| | 평균 | 40.49 | 37.30 | 38.01 |
| | (표준편차) | (22.25) | (23.46) | (23.39) |
| | 비장애 | 83.11 | 89.21 | 87.85 |
| | | (21.15) | (78.85) | (100.00) |
| | 경증장애 | 12.01 | 7.72 | 8.68 |
| | | (30.95) | (69.05) | (100.00) |
| | 중증장애 | 4.88 | 3.07 | 3.48 |
| | | (31.36) | (68.64) | (100.00) |
| 맞춤형 급여 중지 개수 | 1개 | 21.36 | 6.53 | 9.84 |
| | | (48.50) | (51.50) | (100.00) |
| | 2개 | 26.10 | 25.32 | 25.50 |
| | | (22.88) | (77.12) | (100.00) |
| | 3개 | 49.35 | 61.24 | 58.58 |
| | | (18.83) | (81.17) | (100.00) |
| | 4개 | 3.19 | 6.91 | 6.08 |
| | | (11.73) | (88.27) | (100.00) |
| | 평균 | 2.34 | 2.69 | 2.61 |
| | (표준편차) | (0.85) | (0.70) | (0.75) |
| | 전체 | 100.00 | 100.00 | 100.00 |
| | | (22.35) | (77.65) | (100.00) |

다. 가구특성 현황

의료급여 탈락자의 가구특성 현황은 <표 3-8>에서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수급가구 유형별로 차상위계층과 기초보장 재진입자(생계·의료·주거) 모두 일반 수급가구 비율이 각각 65.93%와 73.05%로 가장 높았다.

세대유형별 현황의 경우 차상위계층과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 모두 일반세대 비율이 각각 31.34%와 38.43%로 가장 높았다. 모부자세대 비율은 차상위계층과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가 각각 30.44%와 28.07%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규모 현황 분석에서 평균 가구원 수는 차상위계층과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가 각각 2.46명과 2.47명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가구원 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차상위계층과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 모두 1인가구가 각각 30.21%와 34.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도시유형별 현황에 대한 분석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차상위계층과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 모두 대도시 비율이 각각 46.11%와 49.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8> 의료급여 탈락자의 가구특성 현황

(단위: %)

| 구분 | | 기초보장 재진입 (생계·의료·주거) | 차상위계층 | 전체 |
|----------------|----------|------------------------|---------|----------|
| 수급 가구 유형 | 일반 수급가구 | 73.05 | 65.93 | 67.52 |
| | | (24.18) | (75.82) | (100.00) |
| | 조건부 수급가구 | 19.23 | 19.91 | 19.75 |
| | | (21.76) | (78.24) | (100.00) |
| | 특례 수급가구 | 3.22 | 6.74 | 6.77 |
| | | (12.10) | (87.90) | (100.00) |
| | 시설 수급가구 | 4.49 | 7.42 | 5.95 |
| | | (14.83) | (85.17) | (100.00) |
| | 기타 수급가구 | 0.00 | 0.01 | 0.01 |
| | | (16.67) | (83.33) | (100.00) |

(단위: %)

| 구분 | | 기초보장 재진입 (생계·의료·주거) | 차상위계층 | 전체 |
|----------|-------|------------------------|---------|----------|
| 세대 유형 | 노인세대 | 12.40 | 14.23 | 13.82 |
| | | (20.05) | (79.95) | (100.00) |
| | 장애인세대 | 13.31 | 11.21 | 11.68 |
| | | (25.46) | (74.54) | (100.00) |
| | 모부자세대 | 28.07 | 30.44 | 29.91 |
| | | (20.98) | (79.02) | (100.00) |
| | 일반세대 | 38.43 | 31.34 | 32.93 |
| | | (26.09) | (73.91) | (100.00) |
| | 기타세대 | 3.06 | 5.93 | 5.29 |
| | | (12.93) | (87.07) | (100.00) |
| | 무응답 | 4.73 | 6.84 | 6.37 |
| | | (16.60) | (83.40) | (100.00) |
| 가구 규모 | 1인 | 34.40 | 30.21 | 31.15 |
| | | (24.69) | (75.31) | (100.00) |
| | 2인 | 20.65 | 25.36 | 24.31 |
| | | (18.98) | (81.02) | (100.00) |
| | 3인 | 22.38 | 24.23 | 23.82 |
| | | (21.00) | (79.00) | (100.00) |
| | 4인 | 13.31 | 12.72 | 12.85 |
| | | (23.15) | (76.85) | (100.00) |
| | 5인 | 6.46 | 5.04 | 5.36 |
| | | (26.94) | (73.06) | (100.00) |
| 도시 유형 | 농어촌 | 10.12 | 11.11 | 10.89 |
| | | (20.77) | (79.23) | (100.00) |
| | 대도시 | 49.26 | 46.11 | 46.81 |
| | | (23.52) | (76.48) | (100.00) |
| | 중소도시 | 40.62 | 42.78 | 42.30 |
| | | (21.46) | (78.54) | (100.00) |
| | 전체 | 100.00 | 100.00 | 100.00 |
| | | (22.35) | (77.65) | (100.00) |

3. 주거급여 탈락자

가. 차상위계층 현황

<표 3-9>에서는 주거급여 탈락자의 탈락 이후 차상위계층 이행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거급여 탈락자의 27.39%는 탈락 다음연도에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에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에 진입하지 않은 차상위계층은 72.61%이었다.

〈표 3-9〉 주거급여 탈락자의 탈락 이후 이행 현황

| 구분 | 대상자(명) | 비율(%) |
|--------------------|---------|--------|
| 전체 | 102,246 | 100.00 |
| 기초보장 재진입(생계·의료·주거) | 28,003 | 27.39 |
| 차상위계층 | 74,243 | 72.61 |

나. 개인특성 현황

주거급여 탈락자의 개인특성과 맞춤형 급여 중지 개수 현황은 <표 3-10>과 같다.

분석 결과 먼저 성별로는 차상위계층과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 모두 남성 비율이 각각 45.98%와 47.50%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 분석에서 차상위계층의 평균 연령은 38.89세로 기초보장 재진입자(생계·의료·주거) 평균 52.99세 보다 14.10세 낮았다. 연령의 생애주기별 현황에서 차상위계층은 청년기(20-39세)에 가장 높은 32.81%가 분포하는데 비해, 기초보장 재진입자(생계·의료·주거)는 노년기(65세이상)에 38.18% 가장 많은 대상자가 분포하였다.

장애정도별 현황 분석에서 비장애 비율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88.94%로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 70.2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탈락 당해연도 생계·의료·주거·교육의 맞춤형 급여 중지 개수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차상위계층 대상자의 급여 중지 개수는 평균 2.64개로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 평균 1.95개에 비해 높게 나타나 더 많은 급여에서 동시 탈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0〉 주거급여 탈락자의 개인특성 현황

(단위: %)

| 구분 | | 기초보장 재진입 (생계·의료·주거) | 차상위계층 | 전체 |
|-----------------------|--------------|------------------------|---------|----------|
| 성 | 남성 | 47.50 | 45.98 | 46.39 |
| | | (28.04) | (71.96) | (100.00) |
| | 여성 | 52.50 | 54.02 | 53.61 |
| | | (26.82) | (73.18) | (100.00) |
| 연령 | 영유아(0-5세) | 2.07 | 2.80 | 2.60 |
| | | (21.79) | (78.21) | (100.00) |
| | 학령기(6-11세) | 3.23 | 3.77 | 3.62 |
| | | (24.40) | (75.60) | (100.00) |
| | 청소년기(12-19세) | 10.02 | 16.62 | 14.81 |
| | | (18.53) | (81.47) | (100.00) |
| | 청년기(20-39세) | 14.81 | 32.81 | 27.88 |
| | | (14.55) | (85.45) | (100.00) |
| | 중년기(40-64세) | 31.69 | 24.71 | 26.62 |
| | | (32.60) | (67.40) | (100.00) |
| | 노년기(65세이상) | 38.18 | 19.29 | 24.47 |
| | | (42.74) | (57.26) | (100.00) |
| | 평균 | 52.99 | 38.89 | 42.75 |
| | (표준편차) | (25.86) | (24.08) | (25.37) |
| 장애 정도 | 비장애 | 70.22 | 88.94 | 83.81 |
| | | (22.95) | (77.05) | (100.00) |
| | 경증장애 | 17.22 | 7.89 | 10.45 |
| | | (45.14) | (54.86) | (100.00) |
| | 중증장애 | 12.55 | 3.17 | 5.74 |
| | | (59.92) | (40.08) | (100.00) |
| 맞춤형 급여 중지 개수 | 1개 | 47.26 | 10.59 | 20.63 |
| | | (62.74) | (37.26) | (100.00) |
| | 2개 | 13.44 | 21.94 | 19.61 |
| | | (18.77) | (81.23) | (100.00) |
| | 3개 | 36.90 | 60.65 | 54.14 |
| | | (18.67) | (81.33) | (100.00) |
| | 4개 | 2.40 | 6.82 | 5.61 |
| | | (11.73) | (88.27) | (100.00) |
| | 평균 | 1.95 | 2.64 | 2.45 |
| | (표준편차) | (0.97) | (0.71) | (0.88) |
| | 전체 | 100.00 | 100.00 | 100.00 |
| | | (27.39) | (72.61) | (100.00) |

다. 가구특성 현황

주거급여 탈락자의 가구특성별 현황은 <표 3-11>에서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수급가구 유형별로 차상위계층과 기초보장 재진입자(생계·의료·주거) 모두 일반 수급가구 비율이 각각 69.40%와 68.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대유형별 현황의 경우 차상위계층은 일반세대 비율이 32.47%로 가장 높았지만,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는 노인세대 비율이 29.03%로 가장 높아 분포에 차이를 보였다.

가구규모 현황 분석에서 평균 가구원 수는 차상위계층이 2.50명으로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의 1.75명 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구규모 분포 현황의 경우 차상위계층과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 모두 1인가구 비율이 각각 29.35%와 65.13%로 가장 높았지만, 수치적으로 35.78%p의 다소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도시유형별 현황에 대한 분석도 수행하였는데,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대도시 비율이 44.7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소도시 비율이 43.76%로 높았다. 이에 비해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는 중소도시 비율이 46.40%로 대도시의 39.64% 보다 높게 나타나 차상위계층과 다른 분포를 보였다.

<표 3-11> 주거급여 탈락자의 가구특성 현황

(단위: %)

| 구분 | | 기초보장 재진입 (생계·의료·주거) | 차상위계층 | 전체 |
|----------------|----------|------------------------|----------|----------|
| 수급 가구 유형 | 일반 수급가구 | 68.27 | 69.40 | 69.09 |
| | | (27.06) | (72.94) | (100.00) |
| | 조건부 수급가구 | 12.88 | 20.90 | 18.70 |
| | | (18.86) | (81.14) | (100.00) |
| | 특례 수급가구 | 14.31 | 3.78 | 5.54 |
| | | (58.80) | (41.20) | (100.00) |
| | 시설 수급가구 | 4.54 | 5.91 | 6.67 |
| | | (22.44) | (77.56) | (100.00) |
| | 기타 수급가구 | 0.00 | 0.00 | 0.00 |
| | | (0.00) | (100.00) | (100.00) |

(단위: %)

| 구분 | | 기초보장 재진입 (생계·의료·주거) | 차상위계층 | 전체 |
|----------|-------|------------------------|---------|----------|
| 세대 유형 | 노인세대 | 29.03 | 15.59 | 19.27 |
| | | (41.25) | (58.75) | (100.00) |
| | 장애인세대 | 16.63 | 11.34 | 12.79 |
| | | (35.61) | (64.39) | (100.00) |
| | 모부자세대 | 14.67 | 31.19 | 26.67 |
| | | (15.07) | (84.93) | (100.00) |
| | 일반세대 | 28.90 | 32.47 | 31.49 |
| | | (25.14) | (74.86) | (100.00) |
| | 기타세대 | 4.14 | 5.13 | 4.86 |
| | | (23.33) | (76.67) | (100.00) |
| | 무응답 | 6.63 | 4.27 | 4.92 |
| | | (36.93) | (63.07) | (100.00) |
| 가구 규모 | 1인 | 65.13 | 29.35 | 39.15 |
| | | (45.56) | (54.44) | (100.00) |
| | 2인 | 12.99 | 24.48 | 21.34 |
| | | (16.68) | (83.32) | (100.00) |
| | 3인 | 10.78 | 24.51 | 20.75 |
| | | (14.23) | (85.77) | (100.00) |
| | 4인 | 6.68 | 13.74 | 11.81 |
| | | (15.50) | (84.50) | (100.00) |
| | 5인 | 2.85 | 5.40 | 4.70 |
| | | (16.61) | (83.39) | (100.00) |
| 도시 유형 | 농어촌 | 13.97 | 11.49 | 12.17 |
| | | (31.44) | (68.56) | (100.00) |
| | 대도시 | 39.64 | 44.75 | 43.35 |
| | | (25.04) | (74.96) | (100.00) |
| | 중소도시 | 46.40 | 43.76 | 44.48 |
| | | (28.57) | (71.43) | (100.00) |
| | 전체 | 100.00 | 100.00 | 100.00 |
| | | (27.39) | (72.61) | (100.00) |

4. 교육급여 탈락자

가. 차상위계층 현황

<표 3-12>에서 나타나듯이 교육급여 탈락자의 43.17%는 탈락 다음연도에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에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에 진입하지 않은 차상위계층은 56.83%이었다.

<표 3-12> 교육급여 탈락자의 탈락 이후 이행 현황

| 구분 | 대상자(명) | 비율(%) |
|--------------------|--------|--------|
| 전체 | 57,220 | 100.00 |
| 기초보장 재진입(생계·의료·주거) | 24,700 | 43.17 |
| 차상위계층 | 32,520 | 56.83 |

나. 개인특성 현황

교육급여 탈락자의 성, 연령, 장애정도의 개인특성과 맞춤형 급여 중지 개수 현황을 정리한 결과는 <표 3-13>과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차상위계층은 남성 비율이 51.38%로 과반수이었지만,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는 여성 비율이 52.96%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연령별 현황의 경우 차상위계층의 평균 연령은 18.37세로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 평균 20.58세 보다 낮았다. 교육급여 탈락자에 대한 분석 결과인 만큼 연령의 생애주기별 분포의 경우 모든 대상자 집단이 청소년기(12-19)세에 집중되었다.

장애정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장애 비율은 차상위계층이 98.27%로,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는 92.68%로 나타났다.

교육급여 탈락자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급여 중지 개수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탈락 발생 연도 차상위계층의 맞춤형 급여 중지 개수는 평균 1.68개로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 평균 1.20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3-13〉 교육급여 탈락자의 개인특성 현황

(단위: %)

| 구분 | | 기초보장 재진입 (생계·의료·주거) | 차상위계층 | 전체 |
|-----------------------|--------------|------------------------|---------|----------|
| 성 | 남성 | 47.04 | 51.38 | 49.51 |
| | | (41.02) | (58.98) | (100.00) |
| | 여성 | 52.96 | 48.62 | 50.49 |
| | | (45.28) | (54.72) | (100.00) |
| 연령 | 영유아(0-5세) | 0.04 | 0.01 | 0.02 |
| | | (76.92) | (23.08) | (100.00) |
| | 학령기(6-11세) | 1.29 | 4.02 | 2.84 |
| | | (19.56) | (80.44) | (100.00) |
| | 청소년기(12-19세) | 87.62 | 92.64 | 90.47 |
| | | (41.80) | (58.20) | (100.00) |
| | 청년기(20-39세) | 5.24 | 2.50 | 3.68 |
| | | (61.46) | (38.54) | (100.00) |
| | 중년기(40-64세) | 5.09 | 0.71 | 2.60 |
| | | (84.41) | (15.59) | (100.00) |
| | 노년기(65세이상) | 0.72 | 0.12 | 0.38 |
| | | (82.49) | (17.51) | (100.00) |
| | 평균 | 20.58 | 18.37 | 19.32 |
| | (표준편차) | (8.86) | (4.13) | (6.69) |
| 장애 정도 | 비장애 | 92.68 | 98.27 | 95.86 |
| | | (41.74) | (58.26) | (100.00) |
| | 경증장애 | 3.48 | 1.00 | 2.07 |
| | | (72.49) | (27.51) | (100.00) |
| | 중증장애 | 3.84 | 0.73 | 2.07 |
| | | (80.08) | (19.92) | (100.00) |
| 맞춤형 급여 중지 개수 | 1개 | 87.07 | 73.30 | 79.25 |
| | | (47.43) | (52.57) | (100.00) |
| | 2개 | 8.48 | 3.07 | 5.41 |
| | | (67.71) | (32.29) | (100.00) |
| | 3개 | 1.59 | 5.71 | 3.93 |
| | | (17.42) | (82.58) | (100.00) |
| | 4개 | 2.86 | 17.91 | 11.41 |
| | | (10.81) | (89.19) | (100.00) |
| | 평균 | 1.20 | 1.68 | 1.48 |
| | (표준편차) | (0.60) | (1.19) | (1.01) |
| | 전체 | 100.00 | 100.00 | 100.00 |
| | | (43.17) | (56.83) | (100.00) |

다. 가구특성 현황

교육급여 탈락자의 가구특성 현황은 <표 3-14>에서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수급가구 유형별 현황에서 차상위계층은 일반 수급가구 비율이 90.73%로 매우 높은 비율이었다. 기초보장 재진입자(생계·의료·주거)도 일반 수급가구 비율이 76.51%로 가장 높았으나 차상위계층에 비해 14.22%p 낮은 수준이었다.

세대유형별 현황의 경우 차상위계층과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 모두 모부자세대 비율이 46.66%와 47.7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반세대 비율이 각각 31.27%와 27.64%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 가구원 수를 분석한 결과 차상위계층은 3.27명,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는 3.02명으로 나타났다. 가구규모별 분포의 경우 차상위계층과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 모두 3인가구 비율이 각각 37.07%와 35.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시유형별 현황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차상위계층과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 모두 대도시 비율이 각각 49.51%와 49.85%로 가장 높고, 농어촌 비율은 각각 7.74%와 8.2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14> 교육급여 탈락자의 가구특성 현황

(단위: %)

| 구분 | | 기초보장 재진입 (생계·의료·주거) | 차상위계층 | 전체 |
|----------------|----------|------------------------|---------|----------|
| 수급 가구 유형 | 일반 수급가구 | 76.51 | 90.73 | 84.59 |
| | | (39.04) | (60.96) | (100.00) |
| | 조건부 수급가구 | 17.51 | 5.12 | 10.47 |
| | | (72.20) | (27.80) | (100.00) |
| | 특례 수급가구 | 3.28 | 2.04 | 2.57 |
| | | (54.96) | (45.04) | (100.00) |
| | 시설 수급가구 | 2.67 | 2.08 | 2.33 |
| | | (49.44) | (50.56) | (100.00) |
| | 기타 수급가구 | 0.02 | 0.03 | 0.03 |
| | | (37.50) | (62.50) | (100.00) |

(단위: %)

| 구분 | | 기초보장 재진입 (생계·의료·주거) | 차상위계층 | 전체 |
|----------|--------------|------------------------|---------|----------|
| 세대 유형 | 노인세대 | 1.42 | 1.33 | 1.37 |
| | | (44.77) | (55.23) | (100.00) |
| | 장애인세대 | 10.13 | 4.27 | 6.80 |
| | | (64.30) | (35.70) | (100.00) |
| | 모부자세대 | 47.72 | 46.66 | 47.12 |
| | | (43.72) | (56.28) | (100.00) |
| | 일반세대 | 27.64 | 31.27 | 29.70 |
| | | (40.17) | (59.83) | (100.00) |
| | 기타세대 | 9.42 | 4.62 | 6.69 |
| | | (60.79) | (39.21) | (100.00) |
| | 무응답 | 3.66 | 11.85 | 8.32 |
| | | (19.02) | (80.98) | (100.00) |
| 가구 규모 | 1인 | 10.88 | 5.58 | 7.87 |
| | | (59.71) | (40.29) | (100.00) |
| | 2인 | 22.98 | 18.14 | 20.23 |
| | | (49.03) | (50.97) | (100.00) |
| | 3인 | 35.60 | 37.07 | 36.44 |
| | | (42.17) | (57.83) | (100.00) |
| | 4인 | 20.03 | 26.15 | 23.51 |
| | | (36.79) | (63.21) | (100.00) |
| | 5인 | 7.12 | 10.01 | 8.76 |
| | | (35.07) | (64.93) | (100.00) |
| 도시 유형 | 농어촌 | 8.21 | 7.74 | 7.94 |
| | | (44.61) | (55.39) | (100.00) |
| | 대도시 | 49.85 | 49.51 | 49.66 |
| | | (43.33) | (56.67) | (100.00) |
| | 중소도시 | 41.94 | 42.74 | 42.40 |
| | | (42.70) | (57.30) | (100.00) |
| | 평균 (표준편차) | 3.02 | 3.27 | 3.16 |
| | | (1.28) | (1.17) | (1.22) |
| | 전체 | 100.00 | 100.00 | 100.00 |
| | | (43.17) | (56.83) | (100.00) |

제3절 서비스 이용 현황

본 절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보장제도 맞춤형 급여별 탈락자의 탈락 이후 연간 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하여 본다.

1. 생계급여 탈락자

가. 급여 개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현금, 현물, 바우처 급여를 중심으로 생계급여 탈락자의 탈락 이후 연간 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표 3-15>와 같다.

분석 결과 차상위계층의 탈락 이후 평균 서비스 이용 개수는 1.09개로 나타났다.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의 연간 총 서비스 이용 개수는 3.90개이었고, 기초보장 급여를 제외한 서비스 이용 개수는 2.03개로 분석되었다.

탈락 발생 연도에 수급 이력이 없는 급여에 대한 이용 현황도 분석하였는데, 차상위계층은 0.30개의 신규 급여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의 신규 급여 개수는 1.09개로 차상위계층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15> 생계급여 탈락자의 서비스 이용 개수

(단위: 개)

| | 기초보장 재진입(생계·의료·주거) | | | 차상위계층 | |
|--------|--------------------|---------------|------------|-----------|------------|
| | 총 급여개수 | 기초 제외 급여개수 | 신규 급여개수 | 총 급여개수 | 신규 급여개수 |
| 평균 | 3.90 | 2.03 | 1.09 | 1.09 | 0.30 |
| (표준편차) | (1.73) | (1.47) | (1.24) | (1.48) | (0.62) |

나. 급여 금액

<표 3-16>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현금급여만을 중심으로 서비스 이용 금액을 살펴보았다.

<표 3-16> 생계급여 탈락자의 현금급여 이용 금액

(단위: 원)

| | 기초보장 재진입(생계·의료·주거) | | | 차상위계층 | |
|--------|--------------------|---------------|-------------|-------------|-------------|
| | 총 급여금액 | 기초 제외 급여금액 | 신규 급여금액 | 총 급여금액 | 신규 급여금액 |
| 평균 | 2,696,721 | 1,181,738 | 818,611 | 785,781 | 126,626 |
| (표준편차) | (2,672,109) | (1,987,421) | (1,677,895) | (1,748,328) | (1,103,370) |

분석 결과 차상위계층의 연간 서비스 이용 금액은 785,781원으로 나타났다.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의 경우 기초보장 급여 포함 여부에 따라 연간 2,696,721원과 1,181,738원의 급여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탈락 이후 새롭게 이용하게 된 현금급여 현황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차상위계층의 신규 급여 금액은 연간 126,626원이었고,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에 재진입자의 신규 급여 금액은 818,611원이었다.

2. 의료급여 탈락자

가. 급여 개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현금, 현물, 바우처 급여를 중심으로 의료급여 탈락자의 탈락 이후 연간 서비스 이용 개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표 3-17>과 같다.

<표 3-17> 의료급여 탈락자의 서비스 이용 개수

(단위: 개)

| | 기초보장 재진입(생계·의료·주거) | | | 차상위계층 | |
|--------|--------------------|---------------|------------|-----------|------------|
| | 총 급여개수 | 기초 제외 급여개수 | 신규 급여개수 | 총 급여개수 | 신규 급여개수 |
| 평균 | 3.83 | 1.91 | 1.63 | 1.02 | 0.29 |
| (표준편차) | (1.82) | (1.55) | (1.59) | (1.42) | (0.61) |

분석 결과 차상위계층으로 진입한 의료급여 탈락자의 급여 이용 개수는 1.02개이었다.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의 총 급여 개수는 기초보장 제외 여부에 따라 각각 3.83개와 1.91개로 분석되었다.

탈락 발생 연도에 이용하지 않았던 급여의 신규 이용 현황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새롭게 이용하게 된 급여 개수는 0.29개이었고,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의 신규 급여 개수는 1.63개 이었다.

나. 급여 금액

<표 3-18>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현금급여만을 중심으로 서비스 이용 금액을 살펴보았다.

<표 3-18> 의료급여 탈락자의 현금급여 이용 금액

(단위: 원)

| | 기초보장 재진입(생계·의료·주거) | | | 차상위계층 | |
|--------|--------------------|---------------|-------------|-------------|-------------|
| | 총 급여금액 | 기초 제외 급여금액 | 신규 급여금액 | 총 급여금액 | 신규 급여금액 |
| 평균 | 3,189,968 | 1,064,620 | 1,371,240 | 734,269 | 126,188 |
| (표준편차) | (2,803,537) | (1,690,439) | (2,087,232) | (1,670,363) | (1,120,346) |

분석 결과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탈락 이후 이용한 연간 급여 금액은 734,269원으로 나타났다.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에 재진입자의 기초보장을 포함한 연간 총 급여 금액은 3,189,968원이었으며, 기초보장 제외한 급여 금액은 1,064,620원으로 분석되었다.

탈락 이후 새롭게 이용하게 된 현금급여 현황도 분석하였다. 차상위계층의 신규 급여 금액은 126,188원으로 분석되었다.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에 재진입한 대상자의 신규 급여 금액 1,371,240원으로 나타났다.

3. 주거급여 탈락자

가. 급여 개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현금, 현물, 바우처 급여를 중심으로 주거급여 탈락자의 탈락 발생 다음연도 서비스 이용 개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3-19>와 같다.

<표 3-19> 주거급여 탈락자의 서비스 이용 개수

(단위: 개)

| | 기초보장 재진입(생계·의료·주거) | | | 차상위계층 | |
|--------|--------------------|---------------|------------|-----------|------------|
| | 총 급여개수 | 기초 제외 급여개수 | 신규 급여개수 | 총 급여개수 | 신규 급여개수 |
| 평균 | 4.51 | 2.16 | 1.49 | 1.07 | 0.30 |
| (표준편차) | (1.73) | (1.45) | (1.56) | (1.42) | (0.61) |

분석 결과 주거급여 탈락자 중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에 진입하지 않은 차상위계층의 복지급여 이용 개수는 연간 1.07개로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의 4.51개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탈락 발생 연도에 이용하지 않았던 급여의 이용 현황도 분석하였는데,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0.30개의 신규 급여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의 신규 급여 개수는 1.49개로 나타났다.

나. 급여 금액

<표 3-20>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현금급여만을 중심으로 서비스 이용 금액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차상위계층 대상자의 연간 급여 금액은 744,067원으로 나타났다.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한 대상자의 경우 기초보장 급여 포함 여부에 따라 연간 4,344,090원과 1,568,130원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탈락 이후 새롭게 이용하게 된 현금급여 현황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차상위계층의 신규 급여 금액은 연간 130,069원이었고,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에 재진입한 대상자의 1,152,816원 이었다.

<표 3-20> 주거급여 탈락자의 현금급여 이용 금액

(단위: 원)

| | 기초보장 재진입(생계·의료·주거) | | | 차상위계층 | |
|--------|--------------------|---------------|-------------|-------------|-------------|
| | 총 급여금액 | 기초 제외 급여금액 | 신규 급여금액 | 총 급여금액 | 신규 급여금액 |
| 평균 | 4,344,090 | 1,568,130 | 1,152,816 | 744,067 | 130,069 |
| (표준편차) | (2,551,062) | (1,647,111) | (1,935,729) | (1,713,018) | (1,134,304) |

4. 교육급여 탈락자

가. 급여 개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현금, 현물, 바우처 급여를 중심으로 교육급여 탈락자의 서비스 이용 개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3-21>과 같다.

<표 3-21> 교육급여 탈락자의 서비스 이용 개수

(단위: 개)

| | 기초보장 재진입(생계·의료·주거) | | | 차상위계층 | |
|--------|--------------------|---------------|------------|-----------|------------|
| | 총 급여개수 | 기초 제외 급여개수 | 신규 급여개수 | 총 급여개수 | 신규 급여개수 |
| 평균 | 3.88 | 1.66 | 0.45 | 0.79 | 0.17 |
| (표준편차) | (1.38) | (1.12) | (0.80) | (0.94) | (0.43) |

분석 결과 교육급여 탈락자 중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에 진입하지 않은 차상위계층의 서비스 이용 개수는 0.79개로 나타났다.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의 기초보장급여를 포함한 서비스 이용 개수는 3.88개이었고, 기초보장급여를 제외한 서비

스 이용 개수는 1.66개로 분석되었다.

탈락 발생 연도에 이용하지 않았던 급여의 이용 현황도 분석하였는데,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0.17개의 신규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의 신규 급여 개수는 0.45개로 나타났다.

나. 급여 금액

<표 3-22>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교육 급여 탈락자의 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표 3-22> 교육급여 탈락자의 현금급여 이용 금액

(단위: 원)

| | 기초보장 재진입(생계·의료·주거) | | | 차상위계층 | |
|--------|--------------------|---------------|-------------|-------------|-------------|
| | 총 급여금액 | 기초 제외 급여금액 | 신규 급여금액 | 총 급여금액 | 신규 급여금액 |
| 평균 | 4,968,382 | 2,357,611 | 463,071 | 1,540,442 | 265,617 |
| (표준편차) | (6,779,337) | (6,368,347) | (1,425,067) | (2,436,195) | (1,068,451) |

분석 결과 차상위계층으로 진입한 대상자의 연간 현금급여 이용 금액은 1,540,442원으로 나타났다.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 재진입자의 경우 기초보장 급여 포함 여부에 따라 각각 4,968,382원과 2,357,611원의 현금급여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탈락 이후 새롭게 이용하게 된 현금급여 현황도 분석하였다. 차상위계층의 신규 급여 금액은 265,617원으로, 기초보장(생계·의료·주거)에 재진입한 대상자의 신규 급여 금액 463,071원 보다 낮게 나타났다.

제 4 장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급여기준 표준화

제1절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급여기준 표준화

제2절 표준화에 따른 수급자격 변동 분석

제3절 소결: 요약 및 시사점

4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급여기준 표준화 <

제1절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급여기준 표준화

1.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급여기준 표준화 개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부처별·사업별 차상위 계층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소득재산 조사기준마저 상이한 실정이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간 소득재산 조사기준의 차이로 개별적인 자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일선 현장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것과 함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간 체계적인 서비스 연계를 저해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기준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개별 복지사업이 가지는 고유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조정이 어려운 가구구성, 선정기준은 제외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이한 소득재산 기준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소득재산 기준 표준화의 기대효과로는 관련 업무처리를 효율화하고, 기준 간소화로 인해 일선 업무담당자 및 일반국민의 이해를 제고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자격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 발굴, 접수·신청, 급여지급, 사후관리 등이 통합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표준화 대상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차상위 계층 지원사업 5개(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 자산형성지원(차상위), 차상위계층 확인)를 선정하였다. 교육급여는 선정기준(기준중위 50%)을 기준으로 볼 때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포함되어 기초생활보장의 소득재산 조사기준을 활용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참고]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자격관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은 각 사업의 자격요건 및 소득재산 조사 기준 차이로 인해 개별적으로 자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 No | 사업(6) | 자격(9) | 자격코드(행복e음) | 비고 |
|----|---------------|------------|-------------|--------------------|
| 1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R0000000014 | 부양의무자 조사 |
| 2 | 자활사업 | 차상위자활 | R0000000013 | |
| 3 | 장애(아동)수당 | 차상위장애인* | R0000000010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차상위) |
| 4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R0000003001 | |
| 5 | 자산형성지원 |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 R0000002002 | |

*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급에 활용. 장애아동수당은 만18세 미만 장애인(기초, 차상위)에게, 장애수당은 만18세 이상 경증 장애인(기초, 차상위)에게 지급.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2.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급여기준 표준화(안)

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소득재산 표준화 방향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은 빈곤층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자로 보호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 우선 순위를 두고 보호하고자 도입한 정책이기 때문에 공공부조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를 고려해볼때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소득재산 기준을 가능한 동일하게 구성하되 일부 기준의 경우 예외를 두는 것으로 표준화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소득재산 조사기준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소득재산 조사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해당 기준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계층 지원사업별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 자연스럽게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복지사업의 급여기준은 가능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소득재산 조사기준 표준화(안)⁸⁾

1) 소득재산 항목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은 행복e음의 전체 209개 소득재산 항목 가운데 173개를 활용하고 있다. 차상위 사업(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제외) 가운데 1개라도 사용하는 소득재산 항목을 포함하는 기준으로 작성하였다(세부 사항은 ‘[부록]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소득재산 조사 항목’ 참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173개 소득재산 항목 가운데 47개 소득재산 항목은 사업별 차이가 있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이가 있는 소득재산 항목은 표준화가 필요하며, 주요 항목의 표준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자소득 : 국세청이 아닌 금융기관을 통해 입수되는 이자소득을 바탕으로 조사
- 사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은 모두 제외
- 공적이전소득 :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공적이전소득을 포함
- 보장기관 확인소득 :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모두 제외
- 가구특성별 지출에서 이자소득공제 및 참전명예수당(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12개월 초과 이자소득 추가공제분을 모두 적용
-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 만 24세 이하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는 적용하고,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는 모두 제외(맞춤형 항목을 제외하고, 소득재산 항목을 단일화)
- 근로소득 공제에서 자립적립금(시설수급자) 공제를 모두 포함
- 신용카드 연체금은 모두 포함

8) 개별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차이가 있는 가구구성 및 선정기준은 제외하고 소득인정액 산정과 관련된 기준에 한정하여 차이가 있는 것을 살펴봄

이와 같이 표준화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별 차이가 있는 47개 항목 가운데 39개 항목은 조사하고, 8개 항목은 조사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4-1>과 같다.

<표 4-1>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소득재산 항목 표준화

| 분류 | | | | 복지사업 | | | | | | 통합 조정 |
|----|----------|-------------|--------------------------|------------------|------------|-------------------------------|-----------|-----------------|-----------------------|----------|
| 대 | 중 | 소 | 세 | 기초 생계 (수급) |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수급) | 차상위 자활 | 차상위 계층 확인 | 차상위 자산 형성 지원 | |
| 소득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 01 상시근로자소득 | 1 | 1 | 1 | 1 | 0.9 | 0.9 | 1 |
| | | 일용근로자 소득 | 02 일용근로자소득 | 1 | 1 | 1 | 1 | 0.9 | 0.9 | 1 |
| | | 자활근로소득 | 03 자활근로소득 | 1 | 1 | 1 | 1 | 0.9 | 0 | 1 |
| | | 공공일자리 소득 | 04 노인일자리사업참여 소득 | 1 | 1 | 1 | 1 | 0.9 | 0 | 1 |
| | | | 05 장애인일자리사업참 여소득 | 1 | 1 | 1 | 1 | 0.9 | 0 | 1 |
| | | | 06 공공근로소득 | 1 | 1 | 1 | 1 | 0.9 | 0 | 1 |
| | 재산 소득 | 이자소득 | 07 이자소득(국세청) | 0 | 0 | 1 | 0 | 0 | 0 | 0 |
| | | | 09 이자소득(금융기관) | 1 | 1 | 0 | 1 | 1 | 1 | 1 |
| | | | 10 배당소득(금융기관) | 1 | 1 | 0 | 1 | 1 | 1 | 1 |
| | | | 11 이자소득(합계) | 1 | 1 | 0 | 1 | 1 | 1 | 1 |
| | 기타 소득 | 사적이전 소득 | 12 사적이전소득 | 1 | 0 | 0 | 0 | 0 | 1 | 0 |
| | | | 13 무료임차료(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 1 | 0 | 0 | 0 | 0 | 1 | 0 |
| | | | 14 외국인 배우자 소득 | 1 | 0 | 0 | 0 | 0 | 1 | 0 |
| | | 공적이전 소득 | 15 참전명예수당 | 1 | 1 | 1 | 1 | 0 | 1 | 1 |
| | | | 16 지자체지원(이·통장 직책수당) | 1 | 1 | 1 | 1 | 0 | 1 | 1 |
| | | | 17 지자체지원(출산·고령 화관련수당) | 1 | 1 | 1 | 1 | 0 | 1 | 1 |
| | | | 18 지자체지원(교통수당) | 1 | 1 | 1 | 1 | 0 | 1 | 1 |
| | | | 19 지자체지원(보훈대상자 추가지원) | 1 | 1 | 1 | 1 | 0 | 1 | 1 |
| | | | 20 지자체지원(복지대상자 추가지원) | 1 | 1 | 1 | 1 | 0 | 1 | 1 |
| | | | 21 한센인피해자생활 | 1 | 1 | 1 | 1 | 0 | 1 | 1 |

| 분류 | | | | 복지사업 | | | | | | 통합 조정 |
|----|----------|---------------|---|------------------|------------|-------------------------------|-----------|-----------------|-----------------------|----------|
| 대 | 중 | 소 | 세 | 기초 생계 (수급) |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수급) | 차상위 자활 | 차상위 계층 확인 | 차상위 자산 형성 지원 | |
| | | | 지원금 | | | | | | | |
| | | | 22 진폐위로금 | 1 | 1 | 1 | 0 | 0 | 1 | 1 |
| | | | 23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국민체육진흥공단) | 1 | 1 | 1 | 1 | 0 | 1 | 1 |
| | | | 24 국가유공자급여 (부양가족수당) | 1 | 1 | 1 | 1 | 0 | 1 | 1 |
| | | | 25 국가유공자급여 (중상이부가수당) | 1 | 1 | 1 | 1 | 0 | 1 | 1 |
| | | | 26 대일항쟁기피해자 (희생자)의료지원금 | 1 | 1 | 1 | 1 | 0 | 1 | 1 |
| | | | 27 석면피해자요양 생활수당 | 1 | 1 | 1 | 1 | 0 | 1 | 1 |
| | | | 28 기초연금 | 1 | 1 | 1 | 0 | 0 | 1 | 1 |
| | | | 29 조건불리지역 소득보조금 | 1 | 0 | 1 | 1 | 1 | 1 | 1 |
| | | | 30 발농사직접지불보조금 | 1 | 0 | 1 | 1 | 1 | 1 | 1 |
| | | | 31 경영이양 소득보조금 | 1 | 0 | 1 | 1 | 1 | 1 | 1 |
| | | | 32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 1 | 0 | 1 | 1 | 1 | 1 | 1 |
| | | | 33 체육유공자연금수당 | 1 | 1 | 1 | 1 | 0 | 1 | 1 |
| | | | 34 공적이전(기타지원) | 1 | 1 | 1 | 1 | 0 | 1 | 1 |
| | 확인 | 보장기관확인 소득 | 35 보장기관 확인소득 | 1 | 0 | 0 | 0 | 0 | 1 | 0 |
| 공제 | 소득 공제 | 가구특성별 지출 | 36 이자소득공제 | 1 | 0 | 0 | 1 | 0 | 1 | 1 |
| | | | 37 참전명예수당(1인가구 기준중위소득20%이하) | 1 | 1 | 1 | 1 | 0 | 1 | 1 |
| | | | 38 12개월 초과 이자소득 추가공제분(국기초, 차상위) | 1 | 1 | 0 | 1 | 1 | 0 | 1 |
| | | 근로소득 공제 | 39 만18세미만 청소년의 근로 및 사업소득 | 0 | 0 | 1 | 0 | 1 | 0 | 0 |
| | | | 40 만 24세 이하 수급(권) 자 근로 및 사업소득 | 0 | 1 | 1 | 0 | 1 | 0 | 1 |
| | | | 41 자립적립금(시설수급자) | 1 | 1 | 1 | 1 | 0 | 1 | 1 |
| | | | 42 (맞춤형)만24세 이하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 1 | 0 | 0 | 1 | 0 | 1 | 0 |
| | | 농어민가구 특별공제 | 43 조건불리지역소득 보조금 | 1 | 0 | 1 | 1 | 1 | 1 | 1 |

| 분류 | | | | 복지사업 | | | | | | 통합 조정 |
|----|----|-----|--------------------|------------------|------------|-------------------------------|-----------|-----------------|-----------------------|----------|
| 대 | 중 | 소 | 세 | 기초 생계 (수급) |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수급) | 차상위 자활 | 차상위 계층 확인 | 차상위 자산 형성 지원 | |
| | | | 44 발농사직접지불보조금 | 1 | 0 | 1 | 1 | 1 | 1 | 1 |
| | | | 45 경영이양 소득 보조금 | 1 | 0 | 1 | 1 | 1 | 1 | 1 |
| | | | 46 친환경 농업소득 보조금 | 1 | 0 | 1 | 1 | 1 | 1 | 1 |
| 부채 | 부채 | 대출금 | 47 신용카드 연체금 | 1 | 1 | 0 | 1 | 0 | 1 | 1 |

2) 기본재산액

차상위계층 지원사업간 기본재산액은 사업별로 차이가 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과 차상위 자활은 기초생활보장의 2.5배이지만,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은 기초생활보장과 동일한 기본재산액이 적용되고 있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기본재산액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적용하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및 차상위 자활의 기본재산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표 4-2〉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 기본재산액

| 보장구분 | 기본재산액 | | |
|-----------------------|-------------|------------|------------|
|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135,000,000 | 85,000,000 | 72,500,000 |
| 차상위자활 | 135,000,000 | 85,000,000 | 72,500,000 |
| 차상위장애인 | 54,000,000 | 34,000,000 | 29,000,000 |
| 차상위계층 확인 | 54,000,000 | 34,000,000 | 29,000,000 |
| 차상위자산형성지원 | 54,000,000 | 34,000,000 | 29,000,000 |
| 한부모가족 | 54,000,000 | 34,000,000 | 29,000,000 |
| 청소년한부모가족 | 54,000,000 | 34,000,000 | 29,000,000 |
| 표준화(안) (기초생활보장 기준) | 54,000,000 | 34,000,000 | 29,000,000 |

3) 재산의 소득환산율

차상위계층 지원사업간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차이가 있다. 대부분 기초생활보장과 동일한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산형성지원은 금융재산에 일반재산과 동일한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고 있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적용하면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산형성의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과 동일하게 6.26으로 높아지게 된다.

〈표 4-3〉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 재산의 소득환산율

| 구분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주거용재산 |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4.17 | 6.26 | 100 | 1.04 |
| 차상위자활 | 4.17 | 4.17 | 100 | 1.04 |
| 차상위장애인 | 4.17 | 6.26 | 100 | 1.04 |
| 차상위계층 확인 | 4.17 | 4.17 | 100 | 1.04 |
| 차상위자산형성지원 | 4.17 | 4.17 | 100 | 1.04 |
| 표준화(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 4.17 | 6.26 | 100 | 1.04 |

4) 자동차

대부분 기초생활보장과 동일한 자동차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개별 사업별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재산가액에서 제외·감면되는 자동차 기준은 기초생활보장과 동일하지만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기준이 차상위장애인과 한부모가족은 기초생활보장과 동일한 반면 차상위본인부담경감과 차상위자활·차상위 자산형성지원은 일부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서 자동차를 일반재산으로 환산하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4-4>와 같다.

차상위 계층지원사의 자동차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적용하면 차상위본인 부담경감 사업의 배기량 2,000cc 미만 자동차 중 10년 이상인 승용자동차의 일반

재산 기준 적용과 차상위자활, 차상위자산 형성지원 사업의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①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제외) ②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③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④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 기준이 제외된다. 하지만 소득재산 조사에서 자동차의 환산율 100% 적용이 가지는 파급효과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서 자동차의 일반재산 환산 범위를 확대하였던 의도를 생각해볼때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가운데 생업용도, 질병·부상에 따른 사용, 차령, 차량가액 등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4〉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 자동차의 일반재산 환산

| 사업 구분 | 일반재산으로 환산되는 유형 |
|-----------------------------|--|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사용자자동차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2,500cc미만 자동차(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의 차량 1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다만 아래 차량은 승차정원이 11인승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15)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②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③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특수자동차(건인·구난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과약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소득과약이 어려운 경우 ① 동종업종의 평균임금, ②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에 따라 월 15일 이상을 적용한 임금의 순서대로 적용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 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동이 곤란한 경우란 보장구가 있어도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 질병·부상으로 차량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원의 건강상태 및 병원소재지, 차 |

| 사업 구분 | 일반재산으로 환산되는 유형 |
|-------------------|--|
| | <p>량이용 실태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차량 소유가 불가피한지 여부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기량 1000cc 미만 화물·승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령 10년 미만 이더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 이륜자동차 260cc 이하 차량 (2015년부터 50cc 미만도 이륜차에 포함) ●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차량으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차량으로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보유한도 제한 없음) ● 급여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이거나 영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차량. 단, 처분 또는 전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환산하지 않음 ●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 대포차임을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 차상위본인 부담경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기량 2,000cc미만 자동차중 차령이 10년 이상인 승용자동차는 일반재산 기준 적용 ● 그 외 자동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준용 |
| 차상위 자활·차상위 자산형성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①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제외) ②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③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④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 ※ 그 외 자동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준용 |

5) 기준 표준화 및 통합처리

차상위복지사업의 기준에 대한 표준화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5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경우 모두 보건복지부의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관련 고시를 개정하거나 제정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참고] 차상위계층의 소득재산 조사 관련 고시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시행 2016.1.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6호, 2016.1.28., 제정] /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현행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급여기준 표준화에서 나아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간의 체계적인 연계를 위한 측면에서 통합처리를 위해서는 법적근거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가운데 차상위 자활 및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지만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하는 등 법적근거가 각기 다른 상황이다. 이에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는 개별적으로 가져가더라도, 통합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 복지 대상자 발굴과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연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표준화에 따른 수급자격 변동분석

1. 분석 개요

가구 단위의 중분류 Data를 기준으로 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의 표준화 방안 적용시의 수급변동 모의분석 실시하였다. 앞서 살펴본 통합보정 방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되, 기본재산액은 표준화(안)(국기초)에 더하여 국기초(2.5배) 기준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였다.

분석Data의 추출 및 정제에 대해 살펴보면 분석Data 추출은 '2017년 말 기준 차상위계층지원사업 4개(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의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분석 Data 정제는 3단계에 걸쳐 (1차) (1차) 소득인정액 검증, (2차) 세부 소득재산 검증, (3차) 수급여부 검증로 이루어졌다. 분석 Data 추출 및 정제를 정리하면 <표 4-5>와 같다.

<표 4-5> 분석 Data 추출 및 정제

| 사업 | 추출자료 | 1차 정제 | 2차 정제 | 3차 정제 | 분석대상 | 비고 |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125,226 | 137 | 1,033 | 1,270 | 122,786 | - 1.9% |
| 차상위자활 | 8,078 | 4 | 36 | 2,500 | 5,538 | - 31.4% |
| 차상위장애인 | 144,039 | 33 | 4,904 | 2,959 | 136,143 | - 5.5% |
| 차상위계층 확인 | 93,670 | 45 | 1,931 | 344 | 91,350 | - 2.5% |
| 합계 | 371,013 | 219 | 7,904 | 7,073 | 358,317 | - 3.4% |

2. 표준화(안) 적용에 따른 수급변동 모의분석

앞서 제시한 표준화(안) 가운데 모의분석이 가능한 기본재산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율에 한정하여 기본재산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과 동일하게 구성한 표준화(안)#1,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하게 조정하되 기본재산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의 2.5배를 적용하여 구성한 표준화(안)#2을 적용하여 모의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표준화(안) #1의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준을 바탕으로 구성한 표준화(안) #1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인정액 증감 및 수급변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는 가구는 전체 358,317 수급가구 가운데 9,548가구(2.7%)이며, 소득인정액 감소하는 가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수급변동을 살펴보면 2,067가구가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4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별 수급변동을 살펴보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기본재산액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체 122,786 수급가구의 수급증감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차상위 자활은 기본재산액이 감소하고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이 높아짐에 따라 전체 5,538 수급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는 가구가 163가구(2.9%) 나타났다. 이 가운데 46가구(0.8%)는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상위장애인은 기본재산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변경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소득인정액 변동과 수급증감이 발생하지 않았다.

차상위계층 확인의 경우 기본재산액은 동일하지만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이 높아짐으로 인해 전체 91,350 수급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는 가구가 9,548가구(10.3%)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2,021가구(2.2%)는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4-6>과 같다.

〈표 4-6〉 수급변동 모의분석 : 표준화(안) #1

| 구분 | 수급 가구 | 수급변동 모의분석 | | | | |
|------------------|----------|-----------|-------------------|-----------------|-------------------|------------------|
| | | 소득인정액 | | | 수급자격 | |
| | | 감소 | 미변동 | 증가 | 미변동(수급) | 변동(탈락) |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122,786 | — | 122,786 (100) | — | 122,786 (100) | — |
| 차상위자활 | 5,538 | — | 5,375 (97.1) | 163 (2.9) | 5,492 (99.2) | -46 (-0.8%) |
| 차상위장애인 | 138,643 | — | 138,643 (100) | — | 138,643 (100) | — |
| 차상위계층 확인 | 91,350 | — | 81,965 (89.7) | 9,385 (10.3) | 89,329 (97.8) | -2,021 (-2.2) |
| 합계 | 358,317 | — | 225,983 (97.3) | 9,548 (2.7) | 356,250 (99.4) | -2,067 (-0.6) |

2) 표준화(안) #2의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을 바탕으로 구성한 표준화(안) #1에서 기본재산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의 2.5배 수준으로 적용한 표준화(안) #2를 적용하는 경우 소득인정액 증감 및 수급변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는 가구는 전체 358,317 수급가구 가운데 163가구(0.04%)이며, 반대로 감소하는 경우는 25,991가구(7.25%), 그리고 변동이 없는 경우는 332,163가구(92.7%)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수급변동을 살펴보면 46가구(0.01%)가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4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별 수급변동을 살펴보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기준이 변경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및 수급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차상위자활의 경우 기본재산액은 동일하지만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이 높아짐에 따라 전체 5,538 수급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 증가하는 경우가 163가구(2.9%)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46(0.8%)가구는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상위 장애인은 기본재산액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138,643 수급가구 가운데 13,823가구(10.0%)의 소득인정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급탈락 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상위계층 확인은 기본재산액이 증가하고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감소하는 경우가 12,168가구(13.3%)로 나타났으며, 변동이 없는 경우가 79,182가구(86.7%)로 나타났다.

〈표 4-7〉 수급변동 모의분석 : 표준화(안) #2

| 구분 | 수급 가구 | 수급변동 모의분석 | | | | |
|------------------|----------|------------------|--------------------|---------------|--------------------|--------------|
| | | 소득인정액 | | | 수급자격 | |
| | | 감소 | 미변동 | 증가 | 미변동(수급) | 변동(탈락) |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122,786 | — | 122,786 (100.0) | — | 122,786 (100) | — |
| 차상위자활 | 5,538 | — | 5,375 (97.1) | 163 (2.9) | 5,492 (99.2) | 46 (0.8) |
| 차상위장애인 | 138,643 | 13,823 (10.0) | 124,820 (90.0) | — | 138,643 (100) | — |
| 차상위계층 확인 | 91,350 | 12,168 (13.3) | 79,182 (86.7) | — | 91,350 (100) | — |
| 합계 | 358,317 | 25,991 (7.25) | 332,163 (92.70) | 163 (0.05) | 358,271 (99.99) | 46 (0.01) |

제3절 소결 :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본 장에서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간 상이한 소득재산 조사기준을 표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급변동에 대해 모의분석을 실시하였다. 급여기준 표준화와 수급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급여기준 표준화의 경우 표준화 대상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대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5개(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 자산형성지원(차상위), 차상위계층 확인)를 선정하고,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이 가지는 공공부조적인 성격을 고

려하여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준을 원용하는 것으로 표준화 방향을 수립하였다. 단, 불가피한 경우 일부 규정의 예외를 두는 형태로 설정하였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소득재산 조사기준 표준화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득재산 항목의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간 차이가 있는 47개 항목을 조정하여 39개 항목을 조사하고 8개 항목은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기본재산액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과 차상위자활의 기본재산액을 조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기본재산액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표준화(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자산형성지원의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표준화(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자동차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하게 조정하되,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가운데 생업용도, 질병·부상에 따른 사용, 차령, 차량가액 등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수행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급여기준 표준화 및 통합처리를 살펴보면 여기서 다루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5개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하거나 신규로 고시를 제정하는 경우 조정이 가능하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급여기준 표준화에서 나아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간의 체계적인 연계를 위한 측면에서 통합처리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사업별 추진 근거는 개별적으로 달리하더라도 통합적인 처리 및 대상자 발굴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급여기준 표준화에 따른 수급변동 모의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면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4개 수급가구의 소득재산 Data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추출하고, 3단계 정제(1차: 소득인정액 검증, 2차: 세부 소득재산 검증, 3차: 수급여부 검증)를 거쳐 약 37만명의 분석데이터를 구성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한 기본재산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바탕으로 구성한 표준화(안)#1과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동일하지만 기본재산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2.5인 표준화(안)#2를 적용하여 모의분석을 실시하였다.

표준화(안)#1을 적용하여 모의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본재산액 변경(감소)에 따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 상향조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였다. 전체 수급가구 가운데 2.7%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였고, 0.7%는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안)#2를 적용하여 모의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본재산액 변경(증가)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감소한 비율이 전체의 7.3%로 나타났다.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을 상향조정은 기본재산액 변경으로 상쇄되어 소득인정액이 증가한 경우는 기본재산액이 변동없는 차상위 자활에서만 나타났으며 그 비율은 2.9%로 나타났다.

〈표 4-8〉 수급변동 모의분석 : 요약

| 사업 | 분석 대상 | 표준화(안) #1 - 국기초 | | | 표준화(안) #2 - 기본재산 (국기초 2.5배) | | |
|------------------|---------|--------------------|------------------|-------------------|--------------------------------|-------------------|-------------------|
| | | 수급 증감 | 인정액 증감 | 인정액 미변동 | 수급 증감 | 인정액 증감 | 인정액 미변동 |
| 차상위분인부담 경감대상자 | 122,786 | 122,786 | | | 122,786 | | |
| | | - | - | 122,786 (100) | - | - | 122,786 (100) |
| 차상위자활 | 5,538 | 5,492 | | | 5,492 | | |
| | | -46 (-0.8) | +163 (2.9) | 5,375 (97.1) | -46 (-0.8) | +163 (2.9) | 5,375 (97.1) |
| 차상위장애인 | 138,643 | 138,643 | | | 138,643 | | |
| | | - | - | 138,643 (100) | - | -13,823 (10.0) | 124,820 (90.0) |
| 차상위계층 확인 | 91,350 | 89,329 | | | 91,350 | | |
| | | -2,021 (-2.2) | +9,385 (10.3) | 81,965 (89.7) | - | -12,168 (13.3) | 79,182 (86.7) |
| 합계 | 358,317 | 356,250 | | | 358,271 | | |
| | | -2,067 (-0.6) | +9,548 (2.7) | 225,983 (97.3) | -46 (0.01) | -25,828* (7.2) | 332,163 (92.7) |

* 25,828 = 25,991 - 163 (소득인정액 감소 25,991가구, 소득인정액 증가 163가구)

2. 시사점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처별·사업별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념이 상이하며, 이로 인해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소득재산 기준마저 상이한 실정이며, 차상위계층 자격에 대한 관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본 장에서는 개별 복지사업이 가지는 고유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조정이 어려운 가구구성, 선정기준은 제외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상이한 소득재산 기준에 대해 표준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인 방향은 차상위 복지사업의 공공부조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기준을 유사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소득재산 기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우선적으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상이한 기준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소득재산 기준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분석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기본재산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율에 한정하여 표준화(안)의 수급변동 모의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기본재산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바탕으로 구성된 표준화(안)#1과 여기서 기본재산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의 2.5배로 설정한 표준화(안)#2의 모의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준화(안)#1의 경우 전체 수급가구 가운데 0.7%가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안)#2의 경우 수급가구 가운데 0.01%가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볼때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소득재산 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유사하게 조정하더라도 수급변동이 대규모로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급여기준 표준화와 함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개선하여 업무처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소득재산 조사기준의 표준화와 함께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통합처리를 도모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업무처리를 효율화하고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수급자 발굴 및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모의분석 결과 표준화로 인해 소득인정액 증감이 발생하며,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가구도 전체 수급가구를 보았을 때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업무에 대한 통합적인 처리를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수급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할 것이며, 표준화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줄이고 통합처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일정기간 수급자격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록]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소득재산 조사 항목

| 분 류 | | | | 복지 사업 | | | | | |
|-----|----------|-------------|-----------------------|--------------------------|------------|-------------------------------|-----------|-----------------|-----------------------|
| 대 | 중 | 소 | 세 | [참고] 기초 생계 (수급) |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수급) | 차상위 자활 | 차상위 계층 확인 | 차상위 자산 형성 지원 |
| 소득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 1 | 1 | 1 | 1 | 0.9 | 0.9 |
| | | 일용근로자 소득 | 일용근로자소득 | 1 | 1 | 1 | 1 | 0.9 | 0.9 |
| | | 자활근로 소득 | 자활근로소득 | 1 | 1 | 1 | 1 | 0.9 | 0 |
|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참여소득 | 1 | 1 | 1 | 1 | 0.9 | 0 |
| | | |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소 득 | 1 | 1 | 1 | 1 | 0.9 | 0 |
| | | | 공공근로소득 | 1 | 1 | 1 | 1 | 0.9 | 0 |
| | | 국외근로 소득 | 국외근로소득 | 0 | 0 | 0 | 0 | 0 | 0 |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농업소득 | 1 | 1 | 1 | 1 | 1 | 1 |
| | | | 축산소득 | 1 | 1 | 1 | 1 | 1 | 1 |
| | | 임업소득 | 임업소득 | 1 | 1 | 1 | 1 | 1 | 1 |
| | | 어업소득 | 어업소득 | 1 | 1 | 1 | 1 | 1 | 1 |
| | | 기타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1 | 1 | 1 | 1 | 1 | 1 |
| | | 국외사업소득 | 국외사업소득 | 0 | 0 | 0 | 0 | 0 | 0 |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임대소득 | 1 | 1 | 1 | 1 | 1 | 1 |
| | | 이자소득 | 이자소득(국세청) | 0 | 0 | 1 | 0 | 0 | 0 |
| | | | 이자소득(금융기관) | 1 | 1 | 0 | 1 | 1 | 1 |
| | | | 배당소득(금융기관) | 1 | 1 | 0 | 1 | 1 | 1 |
| | | | 이자소득(합계) | 1 | 1 | 0 | 1 | 1 | 1 |
| | | 연금소득 | 연금(개인)소득 | 1 | 1 | 1 | 1 | 1 | 1 |
| | | | 주택연금 | 0.5 | 0.5 | 0.5 | 0.5 | 0.5 | 0.5 |
| | | | 농지연금 | 0.5 | 0.5 | 0.5 | 0.5 | 0.5 | 0.5 |
| | | 국외재산소득 | 국외재산소득 | 0 | 0 | 0 | 0 | 0 | 0 |
| | 기타 소득 | 사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 1 | 0 | 0 | 0 | 0 | 1 |
| | | | 무료임차료(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 1 | 0 | 0 | 0 | 0 | 1 |
| | | | 외국인 배우자 소득 | 1 | 0 | 0 | 0 | 0 | 1 |
| | | | 무료임차료(장애인연금) | 0 | 0 | 0 | 0 | 0 | 0 |

| 대 | 중 | 분 류 | | 복지 사업 | | | | | |
|---|---|--------|------------------|--------------------------|------------|-------------------------------|-----------|-----------------|-----------------------|
| | | 소 | 세 | [참고] 기초 생계 (수급) |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수급) | 차상위 자활 | 차상위 계층 확인 | 차상위 자산 형성 지원 |
| | | 부양비 | 무로임차료(기초연금) | 0 | 0 | 0 | 0 | 0 | 0 |
| | | | 부양비 | 0 | 0 | 0 | 0 | 0 | 0 |
| | | | (맞춤형)부양비 | 1 | 0 | 0 | 0 | 0 | 0 |
| | | 공적이전소득 | 국가유공자급여(보상금) | 1 | 1 | 1 | 1 | 1 | 1 |
| | | | 국가유공자급여(간호수당) | 1 | 1 | 1 | 1 | 1 | 1 |
| | | | 국가유공자급여(무공영예수당) | 1 | 1 | 1 | 1 | 1 | 1 |
| | | | 국가유공자급여(기타) | 1 | 1 | 1 | 1 | 1 | 1 |
| | | | 독립유공자급여(보상금) | 1 | 1 | 1 | 1 | 1 | 1 |
| | | | 참전명예수당 | 1 | 1 | 1 | 1 | 0 | 1 |
| | |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 1 | 1 | 1 | 1 | 1 | 1 |
| | | | 국민연금급여 | 1 | 1 | 1 | 1 | 1 | 1 |
| | | | 사학퇴직연금급여 | 1 | 1 | 1 | 1 | 1 | 1 |
| | | | 공무원퇴직연금급여 | 1 | 1 | 1 | 1 | 1 | 1 |
| | | | 군인퇴직연금급여 | 1 | 1 | 1 | 1 | 1 | 1 |
| | | | 별정우체국연금 | 1 | 1 | 1 | 1 | 1 | 1 |
| | | | 실업급여 | 1 | 1 | 1 | 1 | 1 | 1 |
| | | |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 1 | 1 | 1 | 1 | 1 | 1 |
| | | | 산재보험급여(장해급여) | 1 | 1 | 1 | 1 | 1 | 1 |
| | | | 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 | 1 | 1 | 1 | 1 | 1 | 1 |
| | | | 산재보험급여(상병보상금) | 1 | 1 | 1 | 1 | 1 | 1 |
| | | |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 1 | 1 | 1 | 1 | 1 | 1 |
| | | | 장애수당 | 1 | 1 | 1 | 1 | 1 | 1 |
| | | | 장애아동수당 | 1 | 1 | 1 | 1 | 1 | 1 |
| | | | 소년소녀가정지원금 | 1 | 1 | 1 | 1 | 1 | 1 |
| | | | 아동양육비(한부모) | 1 | 1 | 1 | 1 | 1 | 1 |
| | |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 0 | 0 | 0 | 0 | 0 | 0 |
| | | | 입양아동양육수당 | 1 | 1 | 1 | 1 | 1 | 1 |
| | | |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1 | 1 | 1 | 1 | 1 | 1 |
| | | | 지자체지원(아통장직책수당) | 1 | 1 | 1 | 1 | 0 | 1 |
| | | | 지자체지원(출산고령화관련수당) | 1 | 1 | 1 | 1 | 0 | 1 |

| 분 류 | | | | 복지 사업 | | | | | |
|-----|---|---|----------------------------|--------------------------|------------|-------------------------------|-----------|-----------------|-----------------------|
| 대 | 중 | 소 | 세 | [참고] 기초 생계 (수급) |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수급) | 차상위 자활 | 차상위 계층 확인 | 차상위 자산 형성 지원 |
| | | | 지자체지원(교통수당) | 1 | 1 | 1 | 1 | 0 | 1 |
| | | | 지자체지원(보훈대상자추가지원) | 1 | 1 | 1 | 1 | 0 | 1 |
| | | | 지자체지원(복지대상자추가지원) | 1 | 1 | 1 | 1 | 0 | 1 |
| | | | 직업훈련수당 | 1 | 1 | 1 | 1 | 1 | 1 |
|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재활보조금) | 1 | 1 | 1 | 1 | 1 | 1 |
|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피부양보조금) | 1 | 1 | 1 | 1 | 1 | 1 |
| | | | 장애인연금 | 1 | 1 | 1 | 1 | 1 | 1 |
| | | | 양육휴직수당 | 1 | 1 | 1 | 1 | 1 | 1 |
| | | |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 | 1 | 1 | 1 | 1 | 0 | 1 |
| | | | 진폐위로금 | 1 | 1 | 1 | 0 | 0 | 1 |
| | | | 추가아동양육비(한부모) | 1 | 1 | 1 | 1 | 1 | 1 |
| | | | 자립지원촉진수당(한부모) | 1 | 1 | 1 | 1 | 1 | 1 |
| | | | 경기력향상연구연금(국민체육진흥공단) | 1 | 1 | 1 | 1 | 0 | 1 |
| | | | 국가유공자급여(부양가족수당) | 1 | 1 | 1 | 1 | 0 | 1 |
| | | | 국가유공자급여(중상이부가수당) | 1 | 1 | 1 | 1 | 0 | 1 |
| | | | 대일항쟁기피해자(희생자)의료지원금 | 1 | 1 | 1 | 1 | 0 | 1 |
| | | | 석면피해자요양생활수당 | 1 | 1 | 1 | 1 | 0 | 1 |
| | | | 기초연금 | 1 | 1 | 1 | 0 | 0 | 1 |
| | | |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 1 | 0 | 1 | 1 | 1 | 1 |
| | | | 발농사직접지불보조금 | 1 | 0 | 1 | 1 | 1 | 1 |
| | | | 경영이양 소득보조금 | 1 | 0 | 1 | 1 | 1 | 1 |
| | | |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 1 | 0 | 1 | 1 | 1 | 1 |
| | | | 진폐보상연금 | 1 | 1 | 1 | 1 | 1 | 1 |
| | | | 진폐유족연금 | 1 | 1 | 1 | 1 | 1 | 1 |
| | | | 체육유공자연금수당 | 1 | 1 | 1 | 1 | 0 | 1 |

| 분 류 | | | | 복지 사업 | | | | | |
|-----|----------|--------------|-------------|--------------------------|------------|-------------------------------|-----------|-----------------|-----------------------|
| 대 | 중 | 소 | 세 | [참고] 기초 생계 (수급) |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수급) | 차상위 자활 | 차상위 계층 확인 | 차상위 자산 형성 지원 |
| | | | 공적이전(기타지원) | 1 | 1 | 1 | 1 | 0 | 1 |
| | | 국외기타소득 | 국외기타소득 | 0 | 0 | 0 | 0 | 0 | 0 |
| | 확인 | 보장기관확인 소득 | 보장기관 확인소득 | 1 | 0 | 0 | 0 | 0 | 1 |
| 재산 | 일반 재산 | 건축물 | 건축물(건물) | 1 | 1 | 1 | 1 | 1 | 1 |
| | | | 건축물(시설물) | 1 | 1 | 1 | 1 | 1 | 1 |
| | | | 건축물(기타) | 1 | 1 | 1 | 1 | 1 | 1 |
| | | 주택 | 주택 | 1 | 1 | 1 | 1 | 1 | 1 |
| | | 토지 | 토지(밭) | 1 | 1 | 1 | 1 | 1 | 1 |
| | | | 토지(논) | 1 | 1 | 1 | 1 | 1 | 1 |
| | | | 토지(대지) | 1 | 1 | 1 | 1 | 1 | 1 |
| | | | 토지(임야) | 1 | 1 | 1 | 1 | 1 | 1 |
| | | | 토지(기타) | 1 | 1 | 1 | 1 | 1 | 1 |
| | |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 0.95 | 0.95 | 0.95 | 0.95 | 0.95 | 0.95 |
| | | | 상가보증금 | 1 | 1 | 1 | 1 | 1 | 1 |
| | | 선박/항공기 | 선박 | 3.5 | 3.5 | 3.5 | 3.5 | 3.5 | 3.5 |
| | | | 항공기 | 3.5 | 3.5 | 3.5 | 3.5 | 3.5 | 3.5 |
| | | 동산 | 가축 | 1 | 1 | 1 | 1 | 1 | 1 |
| | | | 종묘 | 1 | 1 | 1 | 1 | 1 | 1 |
| | | | 기계,기구류 | 1 | 1 | 1 | 1 | 1 | 1 |
| | | | 기타 | 1 | 1 | 1 | 1 | 1 | 1 |
| | | 어업권 | 어업권 | 1 | 1 | 1 | 1 | 1 | 1 |
| | | 입목재산 | 입목재산 | 1 | 1 | 1 | 1 | 1 | 1 |
| | | 조합입주권 | 조합원입주권 | 1 | 1 | 1 | 1 | 1 | 1 |
| | | 분양권 | 분양권 | 1 | 1 | 1 | 1 | 1 | 1 |
|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 1 | 1 | 1 | 1 | 1 | 1 |
| | | | 콘도미니엄회원권 | 1 | 1 | 1 | 1 | 1 | 1 |
| | | | 승마회원권 | 1 | 1 | 1 | 1 | 1 | 1 |
| | |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1 | 1 | 1 | 1 | 1 | 1 |
| | | | 요트회원권 | 1 | 1 | 1 | 1 | 1 | 1 |
| | | 기타(중여) 재산 | 기타(중여)재산_일반 | 1 | 1 | 1 | 1 | 1 | 1 |

| 분 류 | | | | 복지 사업 | | | | | |
|-----|----------|--------------|----------------------|--------------------------|------------|-------------------------------|-----------|-----------------|-----------------------|
| 대 | 중 | 소 | 세 | [참고] 기초 생계 (수급) |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수급) | 차상위 자활 | 차상위 계층 확인 | 차상위 자산 형성 지원 |
| | | 국외일반재산 | 국외신고일반재산 | 0 | 0 | 0 | 0 | 0 | 0 |
| | 금융 재산 | 기타(중여) 재산 | 기타(중여)재산_금융 | 1 | 1 | 1 | 1 | 1 | 1 |
| | | 금융재산 | 요구불예금 | 1 | 1 | 1 | 1 | 1 | 1 |
| | | | 저축성예금 | 1 | 1 | 1 | 1 | 1 | 1 |
| | | | 증권거래 | 1 | 1 | 1 | 1 | 1 | 1 |
| | | | 보험증권 | 1 | 1 | 1 | 1 | 1 | 1 |
| | | | 1년이내지급된 보험금 | 1 | 1 | 1 | 1 | 1 | 1 |
| | | | 비상장주식 | 1 | 1 | 1 | 1 | 1 | 1 |
| | | 기타일시금 | 국민연금급여 (반환일시금) | 1 | 1 | 1 | 1 | 1 | 1 |
| | | | 군인퇴직연금급여 (퇴직일시) | 1 | 1 | 1 | 1 | 1 | 1 |
| | | |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망일시금) | 1 | 1 | 1 | 1 | 1 | 1 |
| | | | 사학퇴직연금급여 (퇴직일시금) | 1 | 1 | 1 | 1 | 1 | 1 |
| | | | 별정우체국연금 (퇴직일시금) | 1 | 1 | 1 | 1 | 1 | 1 |
| | | | 산재보험급여 (사망일시금) | 1 | 1 | 1 | 1 | 1 | 1 |
| | | | 실업급여(조기취업 수당) | 1 | 1 | 1 | 1 | 1 | 1 |
| | | | 공무원퇴직연금급여(퇴직 일시금) | 1 | 1 | 1 | 1 | 1 | 1 |
| | | | 기타일시금 | 1 | 1 | 1 | 1 | 1 | 1 |
| | | 국외금융재산 | 국외신고금융재산 | 0 | 0 | 0 | 0 | 0 | 0 |
| | 자동차 | 자동차 | 자동차 | 1 | 1 | 1 | 1 | 1 | 1 |
| | 주거용 | 주거용재산 | 주거용재산 | 1 | 1 | 1 | 1 | 1 | 1 |
| | 고급 | 고급차 및 회원권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 0 | 0 | 0 | 0 | 0 | 0 |
| 공제 | 소득 공제 | 가구특성별 지출 | 장애수당 | 1 | 1 | 1 | 1 | 1 | 1 |
| | | | 장애아동수당 | 1 | 1 | 1 | 1 | 1 | 1 |
| | | | 고엽제후유증 중 중증장 애인수당 | 1 | 1 | 1 | 1 | 1 | 1 |
| | | | 소년소녀가정지원금 | 1 | 1 | 1 | 1 | 1 | 1 |

| 분 류 | | | | 복지 사업 | | | | | |
|-----|---|---|---|--------------------------|------------|-------------------------------|-----------|-----------------|-----------------------|
| 대 | 중 | 소 | 세 | [참고] 기초 생계 (수급) |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수급) | 차상위 자활 | 차상위 계층 확인 | 차상위 자산 형성 지원 |
| | | | 아동양육비(한부모) | 1 | 1 | 1 | 1 | 1 | 1 |
| | | | 입양아동양육수당 | 1 | 1 | 1 | 1 | 1 | 1 |
| | | |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 | 1 | 1 | 1 | 1 | 1 | 1 |
| | | | 만성질환자 6개월 이상 지출 의료비 | 1 | 1 | 1 | 1 | 1 | 1 |
| | | | 중고등학생 입학료 및 수업료 | 0 | 0 | 0 | 0 | 1 | 0 |
| | | | 국민연금 본인분담 보험 75%감면 | 1 | 1 | 1 | 1 | 1 | 1 |
| | |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 0 | 0 | 0 | 0 | 0 | 0 |
|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 한 지원금(재활보조금) | 1 | 1 | 1 | 1 | 1 | 1 |
| | | | 보육료, 유치원교육비, 대학생 학비 | 0 | 0 | 0 | 0 | 0 | 0 |
| | | | 근로무능력자(직계 존속비 제외)와 함께 거주하는경우,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의 40% | 0 | 0 | 0 | 0 | 0 | 0 |
| | | |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한 채무변제액 | 0 | 0 | 0 | 0 | 0 | 0 |
| | | | 장애인연금 | 1 | 1 | 1 | 1 | 1 | 1 |
| | | | 부양의무자교육비표준공제 | 0 | 0 | 0 | 0 | 0 | 0 |
| | | | 추가아동양육비(한부모) | 1 | 1 | 1 | 1 | 1 | 1 |
| | | | 자립지원촉진수당 (한부모) | 1 | 1 | 1 | 1 | 1 | 1 |
|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 한 지원금(피부양 보조금) | 1 | 1 | 1 | 1 | 1 | 1 |
| | | | 부양의무자의 본인 거주 용 월세 | 0 | 0 | 0 | 0 | 0 | 0 |
| | | | 요양기관 이용료 및 생활시설 유료설비 이용료 | 0 | 0 | 0 | 0 | 0 | 0 |
| | | | 회귀난치성질환자 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 1 | 1 | 1 | 1 | 1 | 1 |
| | | | 만성질환자 3개월이상 지출 의료비 및 간병 | 0 | 0 | 0 | 0 | 0 | 0 |

| 분 류 | | | | 복지 사업 | | | | | |
|-----|---|--------|--------------------------------|--------------------------|------------|-------------------------------|-----------|-----------------|-----------------------|
| 대 | 중 | 소 | 세 | [참고] 기초 생계 (수급) |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수급) | 차상위 자활 | 차상위 계층 확인 | 차상위 자산 형성 지원 |
| | | | 기관 간병단체 간병비 | | | | | | |
| | | |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등 | 0 | 0 | 0 | 0 | 0 | 0 |
| | | | 바우처사업 본인 부담금 | 0 | 0 | 0 | 0 | 0 | 0 |
| | | | 국제경기대회 입상 장애인의 경기력 향상연구연금 | 1 | 1 | 1 | 1 | 1 | 1 |
| | | | 이자소득공제 | 1 | 0 | 0 | 1 | 0 | 1 |
| | | | 학자금대출 채무면제액 | 0 | 0 | 0 | 0 | 0 | 0 |
| | | | 임대소득 경비율 공제(기초연금,장애인연금,아동수당) | 0 | 0 | 0 | 0 | 0 | 0 |
| | | | 참전명예수당(1인가구 기준중위소득20%이하) | 1 | 1 | 1 | 1 | 0 | 1 |
| | | | 12개월 초과 이자소득 추가공제분 (국기초, 차상위) | 1 | 1 | 0 | 1 | 1 | 0 |
| | | | 12개월 초과 이자소득 추가공제분 (타법의료급여) | 0 | 0 | 0 | 0 | 0 | 0 |
| | | | 가구특성별지출기타 | 1 | 1 | 1 | 1 | 1 | 1 |
| | | 근로소득공제 | 자활근로소득 | 0 | 0 | 0 | 0 | 0 | 0 |
| | |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 | 1 | 1 | 1 | 1 | 1 | 1 |
| | | | (타법-무형문화재/복이탈)학생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 | 0 | 0 | 0 | 0 | 0 | 0 |
| | | | 자활공동체참여소득 | 0 | 0 | 0 | 0 | 0 | 0 |
| | | | 행정인턴 | 1 | 1 | 1 | 1 | 1 | 1 |
| | | | (노인)상시근로소득 | 0 | 0 | 0 | 0 | 0 | 0 |
| | | | (노인)일용근로소득 | 0 | 0 | 0 | 0 | 0 | 0 |
| | | | 만18세미만 청소년의 근로 및 사업소득 | 0 | 0 | 1 | 0 | 1 | 0 |
| | | | 만65세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 1 | 1 | 1 | 1 | 1 | 1 |
| | | | 장애인 근로 및 사업소득 | 1 | 1 | 1 | 1 | 1 | 1 |

| 분 류 | | | | 복지 사업 | | | | | |
|-----|----------|---------------|-------------------------------------|--------------------------|------------|-------------------------------|-----------|-----------------|-----------------------|
| 대 | 중 | 소 | 세 | [참고] 기초 생계 (수급) |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수급) | 차상위 자활 | 차상위 계층 확인 | 차상위 자산 형성 지원 |
| | | |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 | 1 | 1 | 1 | 1 | 1 | 1 |
| | | | 만 24세 이하 수급(권)자 근로 및 사업소득 | 0 | 1 | 1 | 0 | 1 | 0 |
| | |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근로 및 사업소득 | 1 | 1 | 1 | 1 | 1 | 1 |
| | | |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 근로 및 사업소득 | 1 | 1 | 1 | 1 | 1 | 1 |
| | | | 자립적립금(시설수급자) | 1 | 1 | 1 | 1 | 0 | 1 |
| | | | (맞춤형)만24세 이하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 1 | 0 | 0 | 1 | 0 | 1 |
| | | | 한부모가족 근로소득 공제(한부모 사업만) | 0 | 0 | 0 | 0 | 0 | 0 |
| | | | 타법의료급여(국가유공자) 근로 및 사업 소득 | 0 | 0 | 0 | 0 | 0 | 0 |
| | | | (국기초,차상위,한부모) 학생 근로 및 사업소득 | 1 | 1 | 1 | 1 | 1 | 1 |
| | | |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등록금 지출 | 1 | 1 | 1 | 1 | 1 | 1 |
| | | 농어민가구 특별공제 | 보육료(농어민가구) | 1 | 1 | 1 | 1 | 1 | 1 |
| | | | 대출상환액중 이자 비용50% | 1 | 1 | 1 | 1 | 1 | 1 |
| | | | 쌀소득등보전직접 직불금-1ha미만 | 1 | 1 | 1 | 1 | 1 | 1 |
| | | |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 1 | 0 | 1 | 1 | 1 | 1 |
| | | | 발농사직접지불보조금 | 1 | 0 | 1 | 1 | 1 | 1 |
| | | | 경영이양 소득 보조금 | 1 | 0 | 1 | 1 | 1 | 1 |
| | | | 친환경 농업소득 보조금 | 1 | 0 | 1 | 1 | 1 | 1 |
| | 일반 재산 | 농어민가구 특별 | 500만원 이내의 농지,가축,종묘,농기계 등 | 1 | 1 | 1 | 1 | 1 | 1 |
| | | 자연감소분 | 일반재산 자연감소분 | 1 | 1 | 1 | 1 | 1 | 1 |
| | 금융 재산 | 장기저축 | 장기저축 | 1 | 1 | 1 | 1 | 1 | 1 |
| | | 생활준비금 | 생활준비금 | 1 | 1 | 1 | 1 | 1 | 1 |
| | | 자연감소분 | 금융재산 자연감소분 | 1 | 1 | 1 | 1 | 1 | 1 |
| 부채 | 부채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 1 | 1 | 1 | 1 | 1 | 1 |

| 분 류 | | | | 복지 사업 | | | | | |
|-----|---|-------------|------------------------------|--------------------------|------------|-------------------------------|-----------|-----------------|-----------------------|
| 대 | 중 | 소 | 세 | [참고] 기초 생계 (수급) |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수급) | 차상위 자활 | 차상위 계층 확인 | 차상위 자산 형성 지원 |
| | | |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1 | 1 | 1 | 1 | 1 | 1 |
| | | | 신용카드 연체금 | 1 | 1 | 0 | 1 | 0 | 1 |
| | | | 자동차 할부금 | 0 | 0 | 0 | 0 | 0 | 0 |
| | |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 | 1 | 1 | 1 | 1 | 1 | 1 |
| | | | 임대보증금(기초연금, 장 애인연금, 아동수당) | 0 | 0 | 0 | 0 | 0 | 0 |
| | | 개인간사채 | 공정증서에의한사채 | 0 | 0 | 0 | 0 | 0 | 0 |
| | | | 법원인정사채 | 1 | 1 | 1 | 1 | 1 | 1 |
| |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 1 | 1 | 1 | 1 | 1 | 1 |
| | | | 주택연금 | 1 | 1 | 1 | 1 | 1 | 1 |
| | | 국외부채 | 국외부채 | 0 | 0 | 0 | 0 | 0 | 0 |
| | | | | | | | | | |

제 5 장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집행체계 정립 방향

제1절 제도적 정립 방향

제2절 주체간 정립 방향

제3절 절차적 정립 방향

5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집행체계 정립방향 <

제1절 제도적 정립 방향

현재 차상위계층의 법적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 적시되어 있다. 이를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17개 부처 107개 사업이다.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의 판정기준은 각기 설정되어 있는데 각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대부분은 잔여적인 복지급여로서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 판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별 급여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집행이 제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데 복지현장에서는 행정업무 부담으로 작용된다. 부처 간 조정과 협의없이 설계된 복지급여의 확산은 전체 전달체계를 복잡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복지급여의 중복과 누락같은 정책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제도가 각기 설계되어 있으면 급여 대상자는 각기 사업을 신청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예를 들면 복지대상자는 신청기관을 각기 방문하여야 하고, 동일 기관에서 사업을 신청하더라도 각기 신청서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급여의 통합과 조정이 필요하다. 통합조정을 위해서는 우선 중앙부처의 사회보장사업과 프로그램들의 사전 조정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개별 사회보장사업의 중복과 과부하 그리고 정책 간 혼선을 저하시키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상위단계인 중앙부처 사업의 조정과 통합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보장사업의 통합과 조정은 일정기간 내에 급속도로 개별 정책의 수와 공급량 그리고 전달방식의 다양성이 확대될수록 통합조정의 필요성이 크게 작용한다. 현재 차상위계층을 위한 복지급여는 17개 부처의 107개 사업이지만, 법정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사업 등 몇몇 사업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또한 일정한 체계를 통해 마련한 사업이기 보다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사업과 유관사업이다. 법정차상위 사업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 연금,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사업이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는 사업을 모두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예산과 비예산을 포함하여 17개 부처 107개 사업이다. 이와 같은 차상위계층을 지원사업을 총괄하거나, 상위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하는 부처가 있지 않고, 개별 부처의 사업과에서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에서 탈 수급하였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기초수급자가 해당되지 않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지원조직이 부재한 실정이다.

부처별로 상이한 욕구와 기능에 따라 복지급여 집행을 차별성은 있지만 유사한 사업들의 경합으로 복지급여 전달체계의 비효율성과 복지체감도는 낮아지는 실정이다. 다수의 중앙 부처가 상호 연계와 협의없이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행함으로써 서비스 공급량의 확대는 이루어졌지만, 종합적인 시각에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전달을 위해서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협의 조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부처간 사업조정과 기능조정은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협의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총괄적으로 범부처간 협의체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집행하는 부처 간 공유와 연계협의를 필요하다. 특히, 부처별 복지급여의 최접점 기관 간 의뢰체계와 정보공유를 위한 협의를 위한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제2절 주체간 정립 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은 17개 부처 107개 사업으로 복잡다양한데 이를 집행하는 부처의 논리와 기능에 따라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 이를 전달하는 구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로 대표된다. 물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등을 통해 집행되는 사업도 존재한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대표 집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 할 수 있다. 중앙부처 단위에서 복지급여의 조정과 통합이 필요하지만, 복지대상자를 대면하는 일선현장에서도 복지급여의 연계가 필요하다.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급여의 부처별 업무조정은 한계가 있으므로 수요자 측면에서 개별 서비스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복지급여를 조정하고 연계하여 집행할 수 있다. 지자체 단위에서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심층 상

담을 통해 복지급여를 통합적으로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지자체를 통해 집행되지 않는 급여를 의뢰하고, 서비스를 연계하여 집행 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는 기존에 논의하였던 복지급여 의뢰체계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일 것이다.

2013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구축 이후 6개 기관 38개 기관으로부터 서비스 의뢰가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고용공단, 국민연금공단, 지방의료원과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와 연계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연계체계 구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비스 의뢰체계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간 서비스의뢰 체계의 마련은 복지대상자 측면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집행하는 노출되는 복지욕구의 통합적 지원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복지급여의 집행기관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더라도 복지 대상자 측면에서 기관 간 연계를 의미한다. 서비스의뢰가 이루어지면 복지급여의 신청접수 업무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상담이 이루어지는 기관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복지급여를 관할 기관으로 의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시스템의 문제이기 보다는 복지급여 신청제도와 책임소재의 불분명한 업무처리 절차의 한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 사회에서 복지대상자의 발굴과 통합적 복지자원의 지원과 관리를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필수적인데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의 복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역 복지의제를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는데 특히, 지역 내 주민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 간 연계가 필수적이다. 차상위 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의 복지욕구 대비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과의 역할 관계의 정립과 명확화가 필요하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은 생계욕구 지원과 돌봄 및 의료관련 사업이 많으며 현금성 사업을 제외한 사회서비스 형태의 급여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과의 연계가 필연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자원유입의 활성화,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참여를 유인하는데 필요한 신뢰강화와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원이전 방식의 개선과 공유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제3절 절차적 정립 방향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은 신청주의에 의거하여 소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복지급여의 신청주의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중지되거나 정지될 때, 대상자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수급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다양성, 복잡성 등은 대상자의 신청을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 범정부 107개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및 상이한 자격기준을 개인이 모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신설, 기준변화 등은 개인뿐 아니라 서비스제공주체, 특히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에게도 사업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복지대상자가 직접 복지급여를 신청하기 어렵다면, 복지급여를 집행하는 공급자가 복지대상자 자격정보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의뢰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에 따른 복지대상자의 정보를 직접 활용하거나 연계활용에 극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기존 수급자의 자격정보는 동일 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연계에 한계가 있다. 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자격조사 항목이 상이하여 기초생활보장 자격기준만을 가지고,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즉, 기존의 자격정보 이외에 별도로 조사해야 항목이 있으며, 해당 과정에서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연계방안은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대상자, 또는 상담자에 의한 신청이 용이하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복지사업의 급여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상자 자격변동에 따라 서비스가 자동 연계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 정보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범정부 차상위사업의 연계는 각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대상자가 획득하고 선택할 것인가와 자격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들의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여 이용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전자는 대상자가 스스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급여 신청과정을 거친 후, 수급자격을 얻는 것으로써 정보의 소극적 활용이다. 후자는 수급자격 심사에 필요한 행정 정보들을 제공주체가 수집하여 자격여부를 판단하는 정보의 적극적 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제공주체의 적극적 정보의 이용은 신청주의 내에서 법·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현실화되기 어렵다. 그리고 다양한 사업 기준 자격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이 적지 않다는 현실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서비스 모의계산’ 기능이다. 서비스 모의계산은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될 수 있는데 하나는 실제 정보를 수집 및 입력하여 각 사업별 자격기준에 대입하여 서비스 수급가능여부를 판단하는 모형과 실제 정보 수집의 법·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대상자가 직접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여 수급여부를 판단하여 서비스 신청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안이 있다.

사회복지통합업무 프로세스 단계별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사회보장급여는 대상자의 ‘발굴 → 상담 → 신청 → 조사 → 사후관리’의 일련의 프로세스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종류, 자격기준의 다양성과 복잡성, 대상자 선정의 필요한 정보의 획득 등의 문제는 급여 제공주체에게는 급여의 안내에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이용주체에게는 급여의 선택에 어려움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보장급여 간 연계기능의 강화는 각 주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급여 자체에 대한 안내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시스템 내의 정보를 적극 이용하여야 한다.

[그림 5-1] 사회복지통합업무 프로세스별 기능 강화

| | 발굴 | 상담 | 신청 | 조사 | 사후관리 |
|-----------|-------------------------|------------------|----------------------------|-------------|---------------------------|
| 서비스 안내 | 대국민 정책홍보 (언론, 방송 등) | 대상자-급여 매칭 서비스 | 복지급여 통합신청 | 수급가능 서비스 안내 | 사업정보 제공 (제도 신설·기준변화 등) |
| | 서비스제공기관 | 사례 검색 | | | |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 | | |
| | 지역 커뮤니티 | | | | |
| | 온라인 커뮤니티 | | | | |
| | 서비스 모의계산 | | | | |
| 정보 시스템 이용 | 수급이력 정보 (신청, 이용, 탈락) | 비대면 챗봇 | 온라인, 모바일 신청 | 신청가능 서비스 추천 | |
| | 복지 사각지대 정보 | | (수급자 대상) 자격변동 정보 및 신규정보 연계 | | |
| | 타 기관(민간·공공) 서비스이력 정보 | | 블록체인을 이용한 급여신청 | | |
| | | | | | |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대상자 ‘발굴’ 프로세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관련 급여에 대한 정책 홍보로 적극적인 서비스 안내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홍보의 주체는 단지 급여 제공주체로 한정되어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등 그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 접근이 쉽고, 활발히 이루어지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기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 포털사이트에서는 수급자 카페, 지역 카페 등이 활성화되어 있고, 해당 카페에서 정보의 공유 및 수급자들의 경험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정보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순기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오히려 급여 선택의 진입장벽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존 수급자의 자격변동에 따른 대상자 발굴, 복지 사각지대 정보·타 기관(민간, 공공) 서비스 이력정보를 이용한 대상자 발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급자 정보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의 법·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⁹⁾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자를 여러 경로를 통해 발굴이 이루어진 후 중요한 사안이 ‘상담’ 프로세스이다. 상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세심한 욕구파악과 적절한 복지자원 연계가 중요하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대부분이 자산조사를 통해 판정된다. 따라서 서비스 모의계산을 기반으로 한 대상자의 욕구대비 복지급여의 매칭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심한 욕구파악을 위해 다양한 사례검색을 통해 상담업무의 지능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시스템과 초기상담 사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연어 처리 기술 및 딥러닝 기반 의미 분석을 실시하여 내담자의 상황과 수급가능한 지원사업을 매칭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다 적극적인 상담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복잡 다양한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의 전달방식과 급여기준은 내담자 뿐 아니라 상담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상담자의 전문성에만 의지해야만 한다는 점을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의 발생되는 행정적 오류들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¹⁰⁾ 특히, 내방상담으로 인한 상담자의 업무 부담과 복지 대상자의 상담 기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대면 상담서비스인 챗봇(chatbot)의 운영도 적

9) 급여 간 수급자 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정보수집의 목적을 하나의 급여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보장 급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10) 예를 들어, 상담안내 부족으로 인하여 신청과정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

용가능하다. 챗봇(chatbot) 혹은 채터봇(Chatterbot)은 음성이나 문자를 통한 인간과의 대화를 통해서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제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해서 대화를 진행하는 자연언어처리 기술을 심각하게 적용하는 언어 이해 방식이다. 상담자와 복지대상자 상담과정에서 입력받은 말에서 특정 단어나 어구를 검출하여 그에 맞는 미리 준비된 응답을 출력하는 검색 방식으로, 각본을 미리 만들고 각본에 따라서 사용자의 입력에 대한 동작과 각본에 있는 응답을 출력하는 각본 방식이 있다.¹¹⁾

발굴과 상담이 이루어진 이후 중요한 사안이 ‘신청’ 프로세스이다. 현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직접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물론, 장애인연금, 요금감면 사업 등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107개 사업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온라인, 모바일 신청 대상 사업을 다양화하여 대상자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복지포털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한 사업은 기초연금 및 보육료, 양육수당 등 18개의 복지사업에 한정되어 있으나 적용 가능한 사업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통합신청하고, 변경되는 자격기준에 따라 관련 지원사업의 신청도 연계되는 프로세스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정보 변동과 인적정보 변동 등으로 기존 수급자의 자격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정보를 기준으로 수급 가능한 사업을 연계하는 프로세스의 정립이 필요하다. 사업별 자격정보의 종류 및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제도적 표준화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포괄적 정보제공 동의를 얻어 통합적으로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프로세스의 발전이 필요하다. 물론 정보활용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자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외 가족구성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통합적 복지급여 신청과 연계를 위해서는 대상자 자격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통합신청 항목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자격정보를 관리하여 각 프로세스 상에서 수급 가능한 지원사업을 대상자에게 안내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사회보장 급여 신청(변경)서’ 상에서의 급여 선택이 아닌 차상위계층 지원 복지사업 전체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보시스템 상의 정보의 보유 및 조회

11)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B1%84%ED%84%B0%EB%B4%87>, 2018년 9월 30일 검색

의 기간을 보유기간을 유동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대부분은 자산조사를 통해 판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소득재산 조사업무의 부담도 크고, 정확성이 요구된다. 복지급여의 소득재산 조사는 2010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구축 이후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특히 공적정보를 연계하여 소득재산 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급여별로 소득재산 조사가 각기 수행되고, 자산조사를 통해 파악된 정보의 활용은 극히 제한적이다. 복지급여 신청 당사자가 접근할 수 있는 경로는 한정적이어서 이러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

자산조사 및 정보주체권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정보 주체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가능하다. 자산조사 기능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정보관리의 보안성과 정보주체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관리 대상 데이터를 ‘블록’이라고 하는 소규모 데이터들이 P2P 방식을 기반으로 생성된 체인 형태의 연결고리 기반 분산 데이터 저장환경에 저장되어 누구라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분산 컴퓨팅 기술 기반의 데이터 위변조 방지기술이다. 이와 같은 블록체인은 모든 것이 해쉬 함수를 통해 암호화 되어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거래 정보가 암호화되어 공유되는 분산 원장의 의미를 가지며, 해당 정보는 분산 저장되고, 일정 시간마다 암호화되어 체인 형태로 저장된다. 중앙 집중적인 정보 독점방식에서 블록체인 내의 참여자들에게 공유된다. 참여자들은 기존의 중앙화된 정보 독점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정보소외에서 벗어나 정보공유 체계에서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정보의 접근권 확대에 의사결정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제고와 제공자의 대상자 정보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역설적으로 개인 자신의 정보를 가장 잘 파악하는 주체는 행정기관이다. 개인은 정보접근이 제한적이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제공 주체가 복지 대상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행정기관은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이고, 그 정보는 개인으로부터 발생하며, 각 개인은 자신의 정보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제 6 장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요약 및 함의

제2절 차상위계층 통합지원 방안

제1절 요약 및 합의

2014년 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차상위계층 개념 적용과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연계이다(강신욱 외, 2015; 이현주 외, 2017). 기초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차상위계층을 “기초보장 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차상위계층 지원 제도에서 적용되는 차상위층의 범위는 사업별 선정기준에 따라 상이하여 신속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2017년 기준 17개 부처에서 차상위계층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이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엄격한 기준에서부터 소득인정액 중위 50% 이하 등 보다 관대한 기준까지 편차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자산조사를 하는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과 기준 중위소득 설정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범위가 달라지므로(이현주 외, 2017) 이에 대한 통합된 접근이 필요하다.

2016년 말 기준 맞춤형 급여 탈락자를 대상으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등 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본 내용¹²⁾은 다음과 같다. 분석 대상은 2016년 말 기준 생계급여 탈락자 131,131명, 의료급여 탈락자 95,561명, 주거급여 탈락자 102,246명, 교육급여 탈락자 57,220명으로 생계급여 탈락자 중 2017년에 맞춤형 급여 재진입자(생계·주거·의료)는 65,683명(50.1%)이며, 차상위계층에 잔존한 경우는 65,448명(49.9%)였다. 의료급여 탈락자 중 2017년 맞춤형 급여 재진입자(생계·주거·의료)는 21,359명(22.4%)이었고, 차상위계층에 남아있는 경우는 74,202명(77.6%)였다. 주거급여 탈락자 중 2017년 맞춤형 급여 재진입자(생계·주거·의료)는 28,003명(27.4%)이며, 차상위계층에 남아 있는 경우는 74,243명(72.6%)였다. 교육급여 탈락자 중 2017년 맞춤형 급여

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행정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 네 개 맞춤형 급여에서 탈락한 수급자로서, 탈락직전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대상자 개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맞춤형 급여 탈락자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등 서비스 수급 현황을 분석하였음

채진입자(생계주거의료)는 24,700명(43.2%)였으며, 차상위계층에 남아 있는 경우는 32,520명(56.8%)였다.

차상위계층지원사업 급여 표준화에 대한 모의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이를 위해 복지부가 추진하는 5개 사업(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장애(아동)수당(차상위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차상위), 차상위계층확인)을 선정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준을 원용하는 방향으로 표준화 방향을 수립하여 모의분석을 실시하였다.

통합조정안1(기본재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하게 조정)의 경우 수급 가구 중 0.7%가 수급자격을 상실하고, 통합조정안2(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하게 조정하되 기본재산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2.5배로 조정)는 전체 수급가구의 0.01%가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소득재산 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유사하게 설계하더라도 대규모 수급 탈락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업무에 대한 통합적인 처리를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수급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할 것이며, 통합조정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줄이고 통합처리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일정기간 수급자격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2절 차상위계층 통합지원 방안

1. 통합자격체계 마련

현재 17개 부처 107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서는 통합자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개별적인 복지급여 신청과 판정에 따른 복지행정 업무부담과 복지 체감도 저감 요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차상위계층 자격의 도입은 법정 차상위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후 이를 기반으로 범정부 차상위 사업의 판정기준에 적용될 필요성이 있는데 즉, 초기 법정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기준을 표준화하여 하나의 자격으로 통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통합자격이

부여되고, 이를 기반으로 범정부 복지사업의 판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 할 것이다. ‘차상위계층 통합 자격 증명서’ 발급 대상은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 차상위 자활 근로, 차상위 자산형성,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건보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이다. 통합 자격체계가 마련되더라도 개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 통합 자격 증명서를 도입하여 범정부 차상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보장사업과의 서비스 연계를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통합자격체계는 단계적 접근이 중요하고, 해당 자격을 통해 범정부 차상위 사업의 판정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그 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차상위 지원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가능해 질 수 있다. 구체적 실행안으로는 ‘차상위 통합자격’으로 차상위계층 관리를 일원화하되, 동 자격을 가진 대상 중 욕구별 급여·서비스 지원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차상위 자격이 확인된 사람 중에 장애인(장애아동)의 경우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지급, 일자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차상위 통합 자격’ 도입 시까지 ‘차상위계층 통합 자격 증명서’를 도입(공통 서식 개정)하여 관련 사업들을 연계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2. 차상위 지원체계의 효율화

차상위 지원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사회복지통합업무 프로세스 단계별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사회보장급여는 대상자의 ‘발굴 → 상담 → 신청 → 조사 → 사후관리’의 일련의 프로세스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연계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사업간 연계와 업무처리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대상자 ‘발굴’ 프로세스의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보급의 검토가 필요하다. 정책 홍보를 통한 관련 급여 등 적극적인 서비스 안내를 실시하여야 하며, 급여 제공 주체 뿐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등 그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존 수급자의 자격변동에 따른 대상자 발굴이 중요하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벗어난 대상층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간 연계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수급하는 대상층들을 차상위계층 지원사업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의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 수급 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통합신청하고, 변경되는 자격기준에 따라 관련 지원사업의 신청도 연계되는 프로세스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정보 변동과 인적정보 변동 등으로 기존 수급자의 자격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정보를 기준으로 수급가능한 사업을 연계하는 프로세스의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의 노력에 따라 몇몇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발굴, 사례관리, 서비스연계 등의 업무처리의 공식화가 필요할 것이다.

통합적 복지급여 신청과 연계를 위해서는 대상자 자격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통합신청 항목으로 필요한 자격정보를 관리하여 각 프로세스 상에서 수급가능한 지원사업을 대상자에게 안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복지사각지대 정보·타 기관(민간, 공공) 서비스 이력정보를 이용한 대상자 발굴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급자 정보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의 법·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욕구과약과 적절한 복지자원 연계를 위해 ‘상담’ 과정에서 지능화된 프로그램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상담자의 전문성에만 의지해야만 하다는 점을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의 발생되는 행정적 오류들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모의계산을 기반으로 한 대상자의 욕구대비 복지급여의 매칭이 가능하고, 욕구과약을 위한 다양한 사례검색 기능을 수반한 상담업무의 지능화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발굴과 상담 후 ‘신청’ 프로세스에서 온라인, 모바일 신청 대상 사업을 다양화하여 대상자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직접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및 보육료, 양육수당 등 18개의 복지사업 신청 가능하며 장애인연금, 요금감면 사업 등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에서 온라인, 모바일 신청 대상 사업을 다양화하여 대상자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대부분은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판정이 이루어지

며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소득재산 조사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정확성을 높이며 조사된 정보를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 복지급여의 소득재산 조사는 2010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구축 이후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는데 특히 공적정보를 연계하여 소득재산 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다. 향후 복지급여별 소득재산 조사의 통합, 자산조사를 통해 파악된 정보 활용의 확대 등 ‘조사’의 정확성과 함께 적절한(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 ‘조사’과정에 복지급여 신청 당사자가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한정적인데 이러한 부분은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사회보장 분야의 차상위계층 등 이용자 정보의 적극 활용을 통한 촘촘한 사회보장, 적시 급여제공을 통한 사각지대 최소화는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온전한 실현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역설적으로 개인 자신의 정보를 가장 잘 파악하는 주체는 행정기관이며, 개인은 정보접근이 제한적이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제공 주체가 개별적으로 복지 대상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으나 본질적으로 행정기관은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이고, 그 정보는 개인으로부터 발생하며, 각 개인은 자신의 정보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행정기관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